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여효성 · 이장욱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여효성 · 이장욱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여 효 성 (부 연구 위원)  
이 장 욱 (부 연구 위원)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발 행 일 :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 윤태범  
발 행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전 화 : 033-769-9999  
판 매 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394-0337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 : 978-89-7865-471-5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 서문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및 철강 등의 기간 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발전해 왔습니다. 가령 자동차는 울산과 군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등의 산업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 지역의 지역경제는 해당 산업의 부침과 함께해 왔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인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증가하는 과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과 맞물려 산업쇠퇴가 지역쇠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지역경기 침체는 침체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역량의 동원을 요구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쇠퇴를 경험하고, 산업침체가 지역 쇠퇴로까지 이어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가 지역쇠퇴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개선방향을 고민하였습니다. 산업별로 고용의 특성을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 지표로 제시하고, 지역별로는 산업별 노동집약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로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적극적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유재범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각각 시도의 경기변동이 전국 공통요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만, 시도 고유 충격의 크기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임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음연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이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의 경우에도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움직임의 상이성은 지역의 고유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적극적 재정투입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맞는 고용창출 전략의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지표값을 산업별 파악해 보고, 각 시도별로 산업의 노동집약도를 판단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고용지표를 시도별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시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고용지표는 재정 투입 한 단위당 고용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된 산업별 고용지표를 요약하면, 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은 아니었다. ② 광업의 경우 억 원당 종사자

수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평균이상이나 1인당 급여액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다소 클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8배이며, 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의 0.6에 불과하여 지표상으로 고용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많은 양의 자본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다. 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매출액 대비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1.3배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⑥ 건설업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산업 평균대비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없어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⑦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⑧ 운수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⑨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매출액 대비 종사자가 매우 많은 산업으로서 고용효과 큰 편이며, 고용비용도 산업평균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산업은 기업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고용은 많은 편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니었다. ⑪ 금융 및 보험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의 3.3배로 많은 수준으로 업체당 규모가 큰 산업이다. 업체당 매출은 전 산업 평균의 13.2배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용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3으로 기업체 규모는 작으나 고용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서 고용증대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용효과는 높은 편에 속했다.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규모로 보아 업체당 규모가 평균 이상이며,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고용효과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급여는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매출은 작으면서 종사자수는 많아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었다. 1인당 급여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0.9로 산출되어 고용증대의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된다.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0.3배, 업체당 매출액은 6.2배로 산출되었다.

⑯ 교육서비스업은 업체당 매출액을 볼 때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업체당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대비 2.1배이며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대비 0.6으로 낮았다.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업체별 규모가 영세한 편이나 종사자 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낮은 0.5 수준이어서 고용증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대비 0.4로 매우 낮았다. 업체당 매출액 또한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0.1에 불과하였다.

국가의 일자리 재정을 구성하는 유형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고용장려금 25.2%, 직접일자리 창출 16.1%, 창업지원 11%, 직업훈련사업 8.4%, 고용서비스가 4.6%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자체 일자리 추진 전략의 현황을 평가하면, 지자체는 신산업 일자리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지역의 주민들이 신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신산업 일자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내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수단 배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및 철강 등의 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발전해 왔다. 가령 자동차는 울산과 군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등의 산업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들 도시의 지역경제는 해당 산업의 부침과 함께해 왔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울산, 군산, 거제 등의 도시들은 인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증가하는 과실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산업쇠퇴가

지역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침체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역량의 동원을 요구하게 된다. 즉,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산업 쇠퇴가 지역침체와 지역 쇠퇴로까지 이어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로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역내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비교할 때 산업 다각화의 장점은 분명하다. 특정 산업이 외부 충격에 의해 쇠퇴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산업 다각화가 진행된 도시는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산업 침체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둘째, 실업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구조의 고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산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는 타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보다는 가능한 현재의 지역주민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주민들을 가급적 지역내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 재정, 생산적 재정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지방재정의 경우 아직까지 세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가용재원도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단체 예산 집행과 이월은 중앙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집행률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           |
|---|-----------|
| <b>제1장 서론</b> .....                       | <b>1</b>  |
| 제1절 연구의 목적 .....                          | 3         |
| <b>제2장 지역경제 환경변화와 침체지역 사례</b> .....       | <b>7</b>  |
| 제1절 지역경제 환경변화 .....                       | 9         |
| 1. 거시경제 환경악화 .....                        | 9         |
| 2. 노령사회 및 인구감소 .....                      | 11        |
| 3. 4차 산업혁명 및 대응 현황 .....                  | 13        |
| 4. 기존 지역산업 붕괴 .....                       | 15        |
| 제2절 경기침체지역 국내사례 .....                     | 18        |
| 1. 거제시의 고용시장 현황 .....                     | 18        |
| 2. 군산시의 고용시장 현황 .....                     | 25        |
| 제3절 해외의 지역경제 침체 사례 .....                  | 34        |
| 1. 디트로이트 시 .....                          | 34        |
| 2. 뉴욕시(New York City) .....               | 37        |
| <b>제3장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성</b> .....             | <b>41</b> |
| 제1절 동태적 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 ..... | 44        |
| 제2절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결과 .....                  | 47        |
| 1. 공통 요인 .....                            | 47        |
| 2. 시도별 요인 부하(Factor Loadings) .....       | 50        |
| 제3절 시사점 .....                             | 53        |

# 목 차

|                                    |            |
|------------------------------------|------------|
| <b>제4장 지방재정지출의 효과 추정</b> .....     | <b>55</b>  |
|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의 구성 .....        | 58         |
| 1.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 구성 .....           | 58         |
| 2. 시·군 지자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0         |
| 3.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3         |
| 4.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6         |
|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효과 추정 .....            | 71         |
| 1. 분석 데이터 .....                    | 71         |
| 2. 평균처리효과(ATE)의 분석 결과 .....        | 75         |
| 제3절 시사점 .....                      | 81         |
| <br>                               |            |
| <b>제5장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b> .....       | <b>83</b>  |
| 제1절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 .....              | 86         |
| 1. 분석의 목적 .....                    | 86         |
| 2. 산업 분류별 고용구조의 분석 .....           | 87         |
| 3. 산업별 분석 결과 .....                 | 90         |
| 제2절 시도의 산업별 고용 구조 분석 .....         | 94         |
| 제3절 시사점 .....                      | 167        |
| <br>                               |            |
| <b>제6장 지역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b> .....    | <b>169</b> |
| 제1절 일자리 재정의 국가 간 비교 .....          | 171        |
| 1. 일자리 재정사업의 유형 .....              | 171        |
| 2. 일자리재정사업의 GDP대비 비율 .....         | 173        |
| 제2절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 ..... | 176        |

|                            |            |
|----------------------------|------------|
| 제3절 지역일자리 대책의 개선 방향 .....  | 179        |
| <b>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b> | <b>183</b> |
| 제1절 연구의 요약 .....           | 185        |
| 제2절 일자리 재정의 개선방향 .....     | 189        |
| 참고문헌 .....                 | 193        |
| 부 록 .....                  | 199        |
| Abstract .....             | 201        |

# 표 목차

|  |     |
|--|-----|
| [표 2-1]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경제 사업체들의 대응 현황 .....    | 15  |
| [표 2-2] 거제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년) .....           | 18  |
| [표 2-3] 거제시 고용동향(2016-2018) .....            | 19  |
| [표 2-4] 거제시 경제활동 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       | 20  |
| [표 2-5] 거제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              | 22  |
| [표 2-6] 거제시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 23  |
| [표 2-7] 거제시 조선업 비중 .....                     | 24  |
| [표 2-8] 군산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년) .....           | 25  |
| [표 2-9]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2013-2018) ..... | 26  |
| [표 2-10] 군산시 고용동향(2016-2018) .....           | 27  |
| [표 2-11] 군산시 연간 실업급여 지급현황 .....              | 28  |
| [표 2-12] 군산시 경제활동 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      | 29  |
| [표 2-13] 군산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             | 30  |
| [표 2-14] 군산시 산업별 취업자수 .....                  | 31  |
| [표 2-15] 군산시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 32  |
| [표 3-1] 추정된 Factor Loadings .....            | 51  |
| [표 4-1] 시·군 전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0  |
| [표 4-2]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3  |
| [표 4-3]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 67  |
| [표 4-4] 권역별 시·군 분포 .....                     | 73  |
| [표 4-5] 주요 변수 요약 통계(2008-2017년) .....        | 74  |
| [표 4-6] 지역경제(지방세수입)에 대한 재정지출효과 추정(PSM) ..... | 79  |
| [표 5-1]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                | 87  |
| [표 5-2]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 요약 .....                 | 90  |
| [표 5-3] 서울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95  |
| [표 5-4] 서울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97  |
| [표 5-5] 부산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00 |

|                                     |     |
|-------------------------------------|-----|
| [표 5-6] 부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02 |
| [표 5-7] 대구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05 |
| [표 5-8] 대구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06 |
| [표 5-9] 인천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09 |
| [표 5-10] 인천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10 |
| [표 5-11] 광주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13 |
| [표 5-12] 광주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16 |
| [표 5-13] 대전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18 |
| [표 5-14] 대전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20 |
| [표 5-15] 울산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22 |
| [표 5-16] 울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24 |
| [표 5-17] 세종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26 |
| [표 5-18] 세종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29 |
| [표 5-19] 경기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31 |
| [표 5-20] 경기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32 |
| [표 5-21] 강원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35 |
| [표 5-22] 강원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36 |
| [표 5-23] 충청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38 |
| [표 5-24] 충청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1 |
| [표 5-25] 충청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43 |
| [표 5-26] 충청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4 |
| [표 5-27] 전북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46 |
| [표 5-28] 전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8 |
| [표 5-29] 전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50 |
| [표 5-30] 전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52 |
| [표 5-31] 경북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54 |
| [표 5-32] 경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55 |



# 표 목차

|   |     |
|---|-----|
| [표 5-33] 경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58 |
| [표 5-34] 경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59 |
| [표 5-35] 제주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 162 |
| [표 5-36] 제주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63 |
| [표 6-1]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 .....                     | 172 |
| [표 6-2] OECD국가의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2015년 기준) ..... | 175 |
| [표 6-3] 유형별 일자리 예산(연도별) .....                 | 178 |
| [표 6-4] 사업별 일자리 창출 투자계획(예시) .....             | 181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1991-2018) .....              | 12  |
| [그림 2-2] 2018년도 6월 기준 권역별 경기 동향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 16  |
| [그림 2-3] 거제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                          | 22  |
| [그림 2-4] 조선업계 연도별 수주 현황(2011- 2017) .....                 | 24  |
| [그림 2-5] 군산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                              | 31  |
| [그림 2-6] 연간 1인당 GDP 변화(디트로이트 Metro Area: 2001-2017) ..... | 35  |
| [그림 2-7] 사업체 수 및 고용현황(2017년 디트로이트 회복 과정) .....            | 36  |
| [그림 2-8] 연도별 뉴욕시 고용 현황 .....                              | 38  |
| [그림 3-1] 추정된 공통요인(Common Factors) .....                   | 48  |
| [그림 4-1] 시군 자치단체 예산대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         | 61  |
| [그림 4-2] 시군 자치단체 예산대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각 연도별) .....             | 62  |
| [그림 4-3]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               | 64  |
| [그림 4-4]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연도별) .....                     | 65  |
| [그림 4-5]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               | 68  |
| [그림 4-6]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연도별) .....                     | 68  |
| [그림 5-1]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비교 .....                         | 89  |
| [그림 5-2] 서울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98  |
| [그림 5-3] 부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03 |
| [그림 5-4] 대구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07 |
| [그림 5-5] 인천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12 |
| [그림 5-6] 광주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17 |
| [그림 5-7] 대전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21 |
| [그림 5-8] 울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25 |
| [그림 5-9] 세종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30 |
| [그림 5-10] 경기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34 |
| [그림 5-11] 강원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37 |
| [그림 5-12] 충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2 |



## 그림 목차

|                                     |     |
|-------------------------------------|-----|
| [그림 5-13] 충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5 |
| [그림 5-14] 전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49 |
| [그림 5-15] 전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53 |
| [그림 5-16] 경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57 |
| [그림 5-17] 경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61 |
| [그림 5-18] 제주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 165 |
| [그림 6-1] 지역일자리 전략 및 추진과제(예시) .....  | 180 |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2018년 한국경제는 목표로 정한 3퍼센트 성장에 못 미치며,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쳤다. 올해도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4%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는 2퍼센트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통계청은 한국경제가 2017년 2분기에 경기 고점에 도달하고 현재는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는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면 도달이 가능한 잠재 성장률 보다도 낮게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꺾이고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 되어 잠재 성장률 자체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나 2019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가 두 달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그림자마저 드리우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이 꺾이고 있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데 한 가지 원인이다. 경제 성장 동력의 하락은 기존에 우리 경제가 주력으로 삼던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이 위기를 겪는 동시에 쇠퇴하는 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그동안 주력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10대 주력 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선,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였다.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생

산비용의 증대로 조금씩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동안 자동차, 기계, 조선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높은 지역내총생산을 산출하던 제조업 클러스터들이 전국적인 경기 침체 보다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조선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던 거제의 경우 실업률이 2016년 2.6%에서 작년 실업률이 7.1%로 치솟았다. 지역의 최대 고용주였던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이 문을 닫은 군산시의 경우도 주변 지자체에 비해 고용 상황이 더욱 가파르게 악화되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록하던 울산이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동차, 조선, 기계를 주력산업으로 하던 국내의 산업 거점도시의 쇠퇴는 이들 지역이 한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미국 미시간 호수를 인접한 디트로이트 시와 인접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Big 3의 생산 기지였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앞서 경험한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이 침체가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M등의 파산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디트로이트 시와 인접한 러스트 벨트의 쇠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러스트 벨트가 될지도 모르는 거제, 군산, 울산 등의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전국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마주하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재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적 재정은 현재 우리 경제가 빠져들지 모르는 디플레이션과 인구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 노후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의 작년도 조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견혀 초과세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 거둔 세원을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지 못하여 건축재정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높은 상태에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의 투입은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돌아올 수 있다.

OECD의 주요국들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조세정책(Taxation)과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산업 구조조정 혹은 경기 변동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 한다. IMF등의 국제 경제기구에서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여건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을 권고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침체와 주력 산업 쇠퇴의 부정적 여파에 당면

한 지역경제 침체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침체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이를 위해 경기 변동의 특성이 시도별로 상이함을 먼저 보이고, 지자체의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의 비율변화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기 변화의 요인을 전국 공통 요인과 시도의 고유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중앙정부 가 펼치는 전국 단위의 정책이 개별 시도 단위로는 최적의 대응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의 지출이 지방세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생산적 재정의 필요성을 보이 고자 하였다.

각 지자체가 놓인 산업 구조 및 고용시장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지자체별 고용시장을 파악하고 지역별 고용창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향 제시를 위한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19개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별 매출액, 업체별 종사자수, 1인당 인건비, 매출 1억 원당 고용의 지표로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을 위한 도구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재정의 투입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효과적인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재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고, 제2장 지역경제 환경변화와 침체지역의 사례를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시도별 경기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예산의 효과 분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시도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지역일자리 재정의 개선방향을 서술하였다. 제7장은 연구의 요약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장



# 지역경제 환경변화와 침체지역 사례

제1절 지역경제 환경변화

제2절 경기침체지역 국내사례

제3절 해외의 지역경제 침체 사례



## 제2장

# 지역경제 환경변화와 침체지역 사례

지역경제(Regional Economy)는 국가경제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의 경제권 내의 경제 활동을 포괄·설명하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지리적 구분 속에서 경제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내의 경제주체와 경제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재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본다. 현재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지자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부정적 여파가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연결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거시경제 환경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조기 도래는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협 요인이다. 쇠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존 지역산업의 붕괴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대응 정도에 따라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침체지역의 사례를 고용 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제3절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인 디트로이트 시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시의 침체사례를 살펴본다.

## 제1절 지역경제 환경변화

### 1. 거시경제 환경악화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투자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힘입어 2% 대로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19<sup>1</sup>)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1%에서 올해 2019년 2% 초반대로 성장한 것으로 장래 경제성장에 대한 예상이 매우 낙관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으로 기업투자 회복과 노동시장 호조, 생산성 제고를 꼽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급감했던 기업투자가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 등에 힘입어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세 역시 연 초보다 낮아진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추세의 지속과 관련된 연방준비제도나 주요 예측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상승과 연계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잠재성장률은 2.6~2.7%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중기 시계에서 2.8%~2.9%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6~2.7%로 추정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유지되는 경제성장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9년 5월 기준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5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5만9000명 증가하여 15세-64세 기준 고용률은 6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수의 대부분이 36시간미만 근로자라는 상황이 고용상황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덧붙여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실업자는 114만5천명으로 2000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 역시 2000년 1월부터 8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한 기록 이외에 가장 오랜 기간 4%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높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의 상황에서 전체 연령대의 확장 실업률이 12.1%이고 청년층(15세부터 29세까지)의 확장실업률이 24.2%라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 구직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확장 실업자 비율이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바로 볼 수 있다. 2019년도 구직 단념자는 5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8만2000명 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수는 66만6000명 증가하였다. 또한 증가한 불완전 취업자들의 대부분이 60대이고 주요취업이 보건

<sup>1</sup> 연합뉴스, 2019. 06. 02.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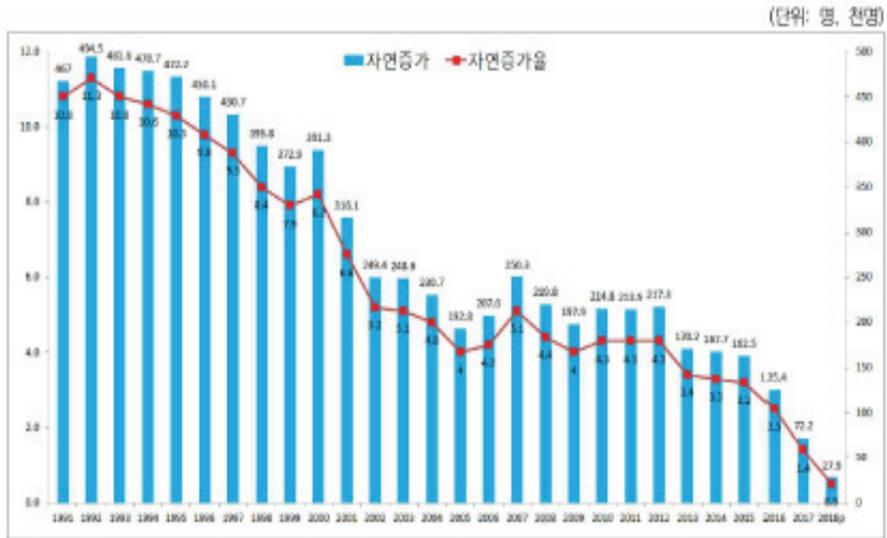
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소비위축과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2. 노령사회 및 인구감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이고 출생아수는 326,900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합계출산율 1.6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출산율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0.36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한동안 1.1명에서 1.3명 사이에서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다시 나타나며 2018년에 0.98명으로 하락하였다.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상태가 유지 되면서 우리나라 출생아수 역시 감소하여 2017년부터 연간 출생아수는 30만 명대가 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연간 70만 명대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6년 연간 출생아수가 6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50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40만 명대로 하락하였고, 2017년부터는 30만 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더욱이 지역별 출생아수는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지역을 비교한 지역의 출생률 격차도 차이가 나고 있다. 자연 인구감소 규모를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심각한 인구감소효과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1991-2018)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재인용;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잠정 결과(2019)

덧붙여 인구의 노령화 또한 인구구조 문제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노인부양 비율로써 예를 들면 2016년 출생한 아이가 44살이 되는 2060년이 되면 15-60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기준하여 노인부양비율은 100명당 17.9명으로 나타나지만, 2060년에는 80.6명으로 4.5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4세 이하의 유소년 부양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총 부양비율은 101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노령화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초저출산율에 의해 급격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비율의 급증에 따라서 지역내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활동 규모 수축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비 등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3. 4차 산업혁명 및 대응 현황

2010년대 들며 사회적 변혁의 중요한 화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업의 영향 및 변화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산업들에 대한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어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의 특성과 결부되어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수행한 제조업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은행, 2018). 전국 2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sup>2</sup>에 따르면 전체 지역경제 사업체들의 64.4%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0.4%이다). 이외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8% 이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적어 전체의 1.8% 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각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라 각 산업체들의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정도로 57.9%가 매우 중요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6.3%, 그리고 중요하다는 응답이 51.7%이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28.4%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을 종합해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체 69.7% 중에서 38%가 그 영향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각 업체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긍정적인 영향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26.1%로 나타난다. 그 외에 생산원가 절감에 의한 생산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가 23.3%이고 빅 데이터를 이용한 소비자 수요추정 및 시장변동성 예측에 의한 전략적 사업운영에 대한 기대가 17.3%로 나타난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투자의 부담에 대한 비용 증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이

<sup>2</sup>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8); 이외에도 선행된 현대경제연구원(2017)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기업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 이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 및 사업 환경 자체의 불확실성이 18.5%로 나타났다.

이미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라 향후 미래에는 전체 고용시장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의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지역산업 사업체들 사이에서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9%로 나타난다. 반대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15.4%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고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 또한 2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서 변화되는 고용 감소에 대한 응답 중 61.8%가 정규직 및 풀타임직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나머지 38.2%는 계약직 또는 임시직 및 일용직군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는 전체 고용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의 89.5%가 정규직 또는 풀타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지역경제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특성상 석유화학정제 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존 주요산업 전반에 걸쳐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서 부각되는 IT 산업의 경우 지역경제 내의 고용증가를 예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경제 사업체들의 기대와 우려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대하여 지역경제 업체들은 각각 예상되는 지역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25.6%). 그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 전 단계의 업체들은 전체의 12.2%이고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인 비중은 전체의 43.6%로 나타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지역경제의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체들의 80% 이상 대부분이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2-1]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경제 사업체들의 대응 현황**

| 대응 방식                    | 전체 비중(%) |
|--------------------------|----------|
| 1. 전사적 대응계획 수립 후 실행 전 단계 | 25.6     |
| 2. 전사적 대응계획 수립 후 실행 전 단계 | 12.2     |
| 3. 대응 관련 논의 진행 중         | 43.6     |
| 4. 대응 하고 있지 않음           | 1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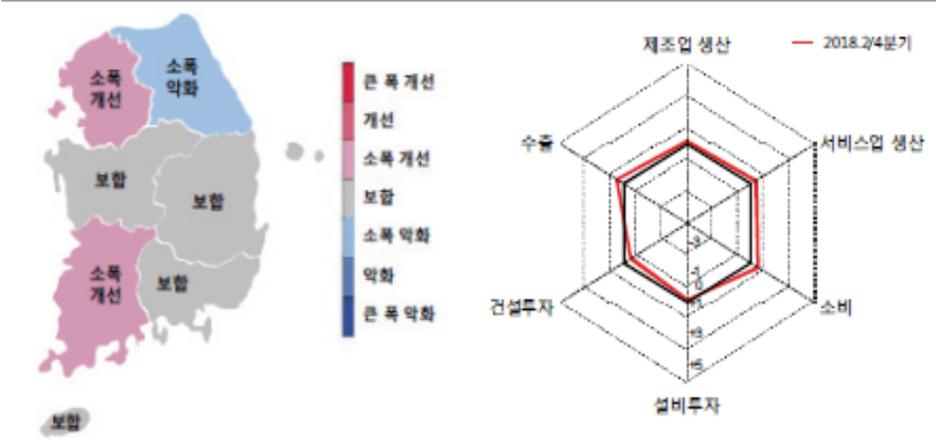
출처: 지역경제보고서(2018)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 사업체들 업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나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체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비중이 제일 높다(52.6%). 석유화학·정제 산업의 사업체들 비중이 전체의 50%이고, IT 산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강이나 조선업 또는 기계장비업 등의 경우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4. 기존 지역산업 붕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과 연결되어 기존의 지역산업의 현황은 예년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18년도 지역경제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2018년 수도권 및 전북·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경기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도 이전 분기보다 경기가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통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에서는 경기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강원도의 경우 동계 올림픽 이후 기저효과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권, 영남권, 대구·경북권역, 제주 등 전 지역에서 경기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2018년도 6월 기준 권역별 경기 동향 및 산업별 경기 동향



출처: 지역경제보고서(2018)<sup>3</sup>

산업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 업종에서 보합 또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권에서는 일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보합세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산업 업종별 경기에 따른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반도체의 경우 호조세를 보이며 일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생산 부진에 따라 경기 악화가 예상되며 제조업 중에서도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도체 서버용 D램과 SSD용 낸드플래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에서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LCD 패널 공급확대, 중소형 OLED 패널 수요 부진 등으로 수도권, 충청권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경기침체를 일으키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해외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가 이루어지며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역에서 제조업 악화 영향을 주고 있다. 철강과 조선의 경우 지역적 차이에 따라 보합 또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관련 부품수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경기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완성차의 수출

<sup>3</sup> 지역경제보고서(2018)에 따르면 권역별 경기 동향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생산, 수요, 고용 및 금융 동향 등을 토대로 지역경기를 종합 판단

회복 등도 지역별 경기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2019년도 5월 발표된 한국은행 국내 제조업 생산지수의 경우, 지난달 106.9로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sup>4</sup>. 이에 설비투자 또한 107.3으로 나타나며 지난 4월보다 8.2% 감소하여 제조업의 경기하락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투자가 줄어들며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한 영향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가장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2월에는 전월 대비 2.7% 줄었다가 3-4월에 걸쳐 두 달 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별 경기침체가 나타나며 전체 생산지수에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의 경우 생산이 1.7% 감소하였고, 건설업에서는 0.3% 감소하였다. 재고율의 경우 역시 악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고율의 경우 118.5%를 나타내며 한 달 전 보다 2.6% 증가함으로써 1998년 9월 IMF 시절 이후 최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세부적으로 볼 때 석유정제 및 자동차 관련 산업 그리고 기계장비 산업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

<sup>4</sup> SBSCNBC 류정훈기자(2019. 6. 28.); <http://n.news.naver.com/article/374/0000187732>

## 제2절 경기침체지역 국내사례

### 1. 거제시의 고용시장 현황

거제시의 인구는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거제시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 25만 5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7명 감소하여 -1.4%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주 역할을 하는 30대의 인구는 2017년 대비 3,054명 또는 -6.6%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3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8.2%에서 0.9%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거제시의 양대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를 찾아 역외로 유출되는 젊은 세대 인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18년 기준 60대 인구는 2만 2,392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퇴직 후 이주하는 장년층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2-2] 거제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8년)**

(단위: 천명, %)

| 구 분  | 인 구 수  |        |        |      | 인구비중 |
|------|--------|--------|--------|------|------|
|      | 계      | 남      | 여      | 비 율  |      |
| 전 국  | 51,826 | 25,866 | 25,960 | 50.1 | 100% |
| 경상남도 | 3,367  | 1,694  | 1,673  | 49.7 | 6.5% |
| 거제시  | 250    | 131    | 119    | 47.6 | 0.5% |

2018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20만3,8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300명(-2.1%) 감소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10만8,400명으로 3,700명(-3.3%) 감소, 여성은 9만5,300명으로 700명(-0.7%)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2만9,6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500명(-1.9%)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만4,300명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일자리를 찾아서 역외로 빠져나간 남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거제시 고용동향(2016~2018)

(단위: 천명, %)

| 구 분         |             | '16년  | '17년  | '18년  | 평균증감(율)<br>( '16년 대비,<br>'18년 기준) |
|-------------|-------------|-------|-------|-------|-----------------------------------|
| 거<br>제<br>시 | 15세 이상인구    | 212.3 | 208.1 | 203.8 | -4.0%                             |
|             | 경제활동인구      | 139.9 | 132.1 | 129.6 | -7.4%                             |
|             | 취업자         | 136.3 | 123.4 | 120.4 | -11.7%                            |
|             | 실업자         | 3.7   | 8.7   | 9.2   | 148.6%                            |
|             | 경제활동참가율     | 65.9  | 63.5  | 63.6  | -3.5%                             |
|             | 고용률(15세 이상) | 64.2  | 59.3  | 59.1  | -7.9%                             |
|             | 고용률(15~64세) | 66.1  | 62.8  | 62.8  | -5.0%                             |
|             | 실업률         | 2.6   | 6.6   | 7.1   | 173.1%                            |
| 경<br>남<br>도 | 15세 이상인구    | 2,817 | 2,834 | 2,849 | 1.1%                              |
|             | 경제활동인구      | 1,777 | 1,786 | 1,816 | 2.2%                              |
|             | 취업자         | 1,728 | 1,744 | 1,764 | 2.1%                              |
|             | 실업자         | 49    | 42    | 53    | 8.2%                              |
|             | 경제활동참가율     | 1,040 | 1,048 | 1,033 | 1.1%                              |
|             | 고용률(15세 이상) | 63.1  | 63.0  | 63.8  | 1.0%                              |
|             | 고용률(15~64세) | 61.3  | 61.5  | 61.9  | 3.6%                              |
|             | 실업률         | 2.8   | 2.3   | 2.9   | 3.6%                              |

거제시의 고용동향은 전국과 경남의 고용지표와 비교했을 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을 보면 군산의 경제활동 인구 수는 -7.48%, 취업자수는 -11.7%, 15세 이상 고용률은 -7.90% 감소하였다. 반면 실업률은 174.1% 증가하고 실업자수 증가율도 148.6%를 기록하였다. 거제시의 고용동향을 경남도와 비교해 보면, 경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2.2%, 취업자수는 2.1%, 15세 이상 고용률은 1.0% 증가하였고, 실업률 증감률은 3.6%로 나타났다. 즉, 경남도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유지 및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거제시의 고용시장은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악화된 걸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016년 경남도와 거제시의 실업률은 각각 2.8%와 2.6%로 2016년까지만 해도 거제시 실업률이 도 평균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

다. 즉 주력산업의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선업 위주의 고용 여건은 양호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 실업률이 2.8%에서 2.9%로 소폭 상승하는 기간 동안, 거제시의 실업률은 7.1%까지 증가하여 높은 평균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거제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0만 3800명으로 전년대비 4300명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12만 9600명으로 전년대비 2500명 감소하였다. 취업자수는 12만 4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59.1%로 0.2%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년대비 각각 500명, 전년대비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거제시 고용률 59.1%는 경남도 평균인 63.8%보다는 4%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거제시의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군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액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비중은 68.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거제시 지역내 총생산의 2/3 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다.

**[표 2-4] 거제시 경제활동 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당해 연도 기준)

| 경제활동별                | 2014         | 2015         | 2016       |
|----------------------|--------------|--------------|------------|
| 지역내총생산               | 11,833,840.6 | 10,376,055.3 | 10,454,011 |
| 순생산물세                | 1,124,026.3  | 1,037,382    | 1,024,777  |
| 총부가가치                | 10,709,814.2 | 9,338,673.3  | 9,429,234  |
|                      | 100.0%       | 100.0%       | 100.0%     |
| 농림어업                 | 94,918.5     | 88,705       | 82,091     |
|                      | 0.9%         | 0.9%         | 0.9%       |
| 광업                   | 5,501.4      | 5,561        | 5,896      |
|                      | 0.1%         | 0.1%         | 0.1%       |
| 제조업                  | 7,701,068.2  | 6,241,751.4  | 6,485,273  |
|                      | 71.9%        | 66.8%        | 68.8%      |
| 전기, 가스, 증기<br>및 수도사업 | 33,153.9     | 38,603.6     | 41,303     |
|                      | 0.3%         | 0.4%         | 0.4%       |

| 경제활동별             | 2014      | 2015      | 2016    |
|-------------------|-----------|-----------|---------|
| 건설업               | 507,781.4 | 473,438.5 | 417,277 |
|                   | 4.7%      | 5.1%      | 4.4%    |
| 도매 및 소매업          | 241,045.1 | 250,469.5 | 230,197 |
|                   | 2.3%      | 2.7%      | 2.4%    |
| 운수업               | 103,463.9 | 91,158.4  | 82,211  |
|                   | 1.0%      | 1.0%      | 0.9%    |
| 숙박 및 음식점업         | 195,440.9 | 203,090.7 | 211,270 |
|                   | 1.8%      | 2.2%      | 2.2%    |
| 정보 및 통신업          | 57,276.4  | 58,676.6  | 62,279  |
|                   | 0.5%      | 0.6%      | 0.7%    |
| 금융 및 보험업          | 187,152.2 | 194,726.7 | 179,033 |
|                   | 1.7%      | 2.1%      | 1.9%    |
| 부동산 및 임대업         | 312,643.3 | 340,909.5 | 310,011 |
|                   | 2.9%      | 3.7%      | 3.3%    |
| 사업서비스업            | 413,594.3 | 430,763.2 | 415,076 |
|                   | 3.9%      | 4.6%      | 4.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245,454.7 | 282,193.5 | 262,568 |
|                   | 2.3%      | 3.0%      | 2.8%    |
| 교육서비스업            | 303,397.1 | 311,671.8 | 311,599 |
|                   | 2.8%      | 3.3%      | 3.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72,829.6 | 187,054.6 | 185,691 |
|                   | 1.6%      | 2.0%      | 2.0%    |
|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48,997.8  | 49,196.8  | 48,388  |
|                   | 0.5%      | 0.5%      | 0.5%    |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지역계정

거제시 지역내총생산의 2014-2016년도 3년 평균 증감률은 2.0%이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감률 5.24%, 전북 평균 증감률 3.19%와 비교할 때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의 비중감소가 군산시 총생산액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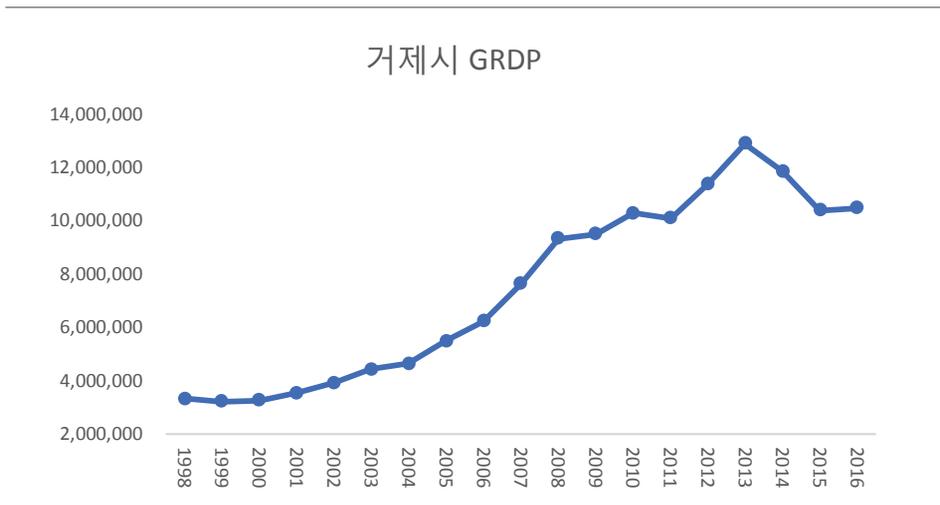
**【표 2-5】** 거제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단위: %p)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평균증감률<br>('14~'16) |
|-----|-------------|-----------|-----------|-----------|--------------------|
| 전 국 | GDP(십억 원)   | 1,485,504 | 1,565,247 | 1,731,544 | 5.24               |
|     | 1인당 생산액(천원) | 29,273    | 30,682    | 33,657    | 4.76               |
| 경남도 | GRDP(십억 원)  | 101,028   | 103,995   | 107,961   | 3.40               |
|     | 1인당 생산액(천원) | 30,005    | 30,886    | 32,064    | 3.34               |
| 거제시 | GRDP(십억 원)  | 11,833    | 10,376    | 10,454    | -5.83              |
|     | 1인당 생산액(천원) | 47,335    | 41,504    | 41,816    | -5.30              |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지역계정

**【그림 2-3】** 거제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2016년 기준 거제 사업체 수는 7,831개, 종사자 수는 114,430명으로 2015년 대비 사업체 수는 200개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5,143명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6년 기준 거제시 사업체의 7.6% 비중을 차지하나 종사자 수 비중은 4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 거제시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천명, %)

| 산업별                                 | 2015  |      |         |        | 2016  |        |         |        |
|-------------------------------------|-------|------|---------|--------|-------|--------|---------|--------|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전체                                  | 7,631 | 100% | 119,573 | 100.0% | 7,831 | 100.0% | 114,430 | 100.0% |
|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2     | 0%   | 17      | 0.0%   | 4     | 0.1%   | 20      | 0.0%   |
| B. 광업(05~08)                        | 1     | 0%   | 22      | 0.0%   | 1     | 0.0%   | 30      | 0.0%   |
| C. 제조업(10~33)                       | 583   | 8%   | 59,467  | 49.7%  | 594   | 7.6%   | 54,118  | 47.3%  |
| D. 전기, 가스, 증기 및<br>수도사업(35~36)      | 6     | 0%   | 158     | 0.1%   | 6     | 0.1%   | 151     | 0.1%   |
|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br>환경복원업(37~39) | 20    | 0%   | 436     | 0.4%   | 22    | 0.3%   | 426     | 0.4%   |
| F. 건설업(41~42)                       | 384   | 5%   | 15,122  | 12.6%  | 399   | 5.1%   | 15,944  | 13.9%  |
| G. 도매 및 소매업(45~47)                  | 1,391 | 18%  | 6,305   | 5.3%   | 1,416 | 18.1%  | 6,193   | 5.4%   |
| H. 운수업(49~52)                       | 129   | 2%   | 2,041   | 1.7%   | 143   | 1.8%   | 2,218   | 1.9%   |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2,346 | 31%  | 8,992   | 7.5%   | 2,463 | 31.5%  | 9,197   | 8.0%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br>정보서비스업(58~63)  | 39    | 1%   | 282     | 0.2%   | 37    | 0.5%   | 235     | 0.2%   |
| K. 금융 및 보험업(64~66)                  | 146   | 2%   | 2,276   | 1.9%   | 148   | 1.9%   | 2,258   | 2.0%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404   | 5%   | 1,650   | 1.4%   | 405   | 5.2%   | 1,789   | 1.6%   |
| M. 전문, 과학 및<br>기술서비스업(70~73)        | 282   | 4%   | 7,234   | 6.0%   | 256   | 3.3%   | 6,354   | 5.6%   |
| N. 사업시설관리 및<br>사업지원서비스업(74~75)      | 149   | 2%   | 3,997   | 3.3%   | 140   | 1.8%   | 3,655   | 3.2%   |
| P. 교육서비스업(85)                       | 435   | 6%   | 3,020   | 2.5%   | 423   | 5.4%   | 2,927   | 2.6%   |
| Q. 보건업 및<br>사회복지서비스업(86~87)         | 502   | 7%   | 5,533   | 4.6%   | 524   | 6.7%   | 5,672   | 5.0%   |
| R. 예술, 스포츠 및<br>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189   | 2%   | 889     | 0.7%   | 212   | 2.7%   | 1,100   | 1.0%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br>기타개인서비스업(94~96) | 623   | 8%   | 2,132   | 1.8%   | 638   | 8.1%   | 2,143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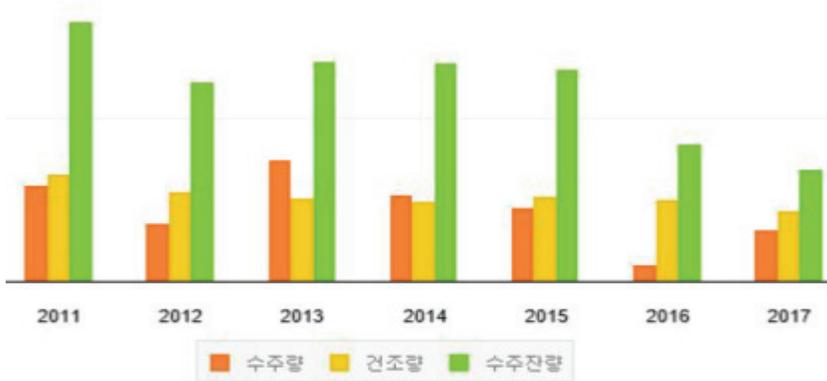
거제시의 조선업 근로자는 2018년 고용보험 가입자 72,736명 중 43,418명으로 조선 산업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6년부터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는 지역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표 2-7] 거제시 조선업 비중**

(단위: 명, 억불, 십억 원,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 수출액 |     |    |
|-------------|--------|------|-------------|-------|------|-----|-----|----|
| 전체          | 조선업    | 비율   | 전체          | 조선업   | 비율   | 전체  | 조선업 | 비율 |
| 72,736      | 43,418 | 59.7 | 8,027       | 1,095 | 13.6 | 122 | 116 | 95 |

**[그림 2-4] 조선업계 연도별 수주 현황(2011- 2017)**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재인용: Clarksons Research, "World Shipyard Monitor"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대외 선박수주 여건의 악화 및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선박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며 일시에 불황을 겪게 되었다. 이는 지역경제의 중요 산업의 부진과 연계되어 조선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에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불황의 여파에 따라 다수의 종사자들이 퇴사를 하고 지역내의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이 심해지며 지난 2016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유출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 2. 군산시의 고용시장 현황

군산시의 인구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군산시의 인구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 군산시 총인구는 27만 3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0.5% 비중을 차지하고, 전북도 인구의 1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8】** 군산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년)

(단위: 천명, %)

| 구 분  | 인 구 수  |        |        |      | 인구비중 |
|------|--------|--------|--------|------|------|
|      | 계      | 남      | 여      | 비 율  |      |
| 전 국  | 51,826 | 25,866 | 25,960 | 50.1 | 100% |
| 전라북도 | 1,837  | 913    | 924    | 50.3 | 3.5% |
| 군산시  | 273    | 138    | 135    | 49.4 | 0.5% |

최근 5년간 군산시의 인구이동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순 이동인구가 2,070명 감소하였으며(순 이동률 -0.76%), 이중 전북 도외로 이동한 인구가 2,351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이동 변화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군산시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지역주민들이 역외로 전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감소의 여파로 경제활동 인구가 유출되는 반면, 군산의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 군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45,9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38,073명과 13.7%의 고령층 인구 비중에서 증가 추세가 가파른 편이다.

**[표 2-9]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2013~2018)**

(단위: 천명, %)

| 시도별    | 성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전체인구   | 계  | 278,319 | 278,098 | 278,398 | 277,551 | 274,997 | 272,645 |
| 65세 이상 | 인구 | 38,073  | 39,555  | 41,317  | 42,810  | 44,580  | 45,913  |
|        | 비중 | 13.7%   | 14.2%   | 14.8%   | 15.4%   | 16.2%   | 16.8%   |

군산시의 고용동향은 전국과 전북의 고용지표와 비교했을 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을 보면 군산의 경제활동 인구 수는 -0.98%, 취업자수는 -1.50%, 15세 이상 고용률은 -1.22% 감소하였다. 반면 실업률은 25.99%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감률을 나타내어 지역 내 고용여건이 악화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의 고용동향을 전북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0.70%, 취업자수는 -0.89%, 15세 이상 고용률은 -0.90% 감소하였고, 실업률 증감률 8.74%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군산시의 실업률 증감률이 전북도의 3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2016년 전북도와 군산시의 실업률은 각각 2.1%와 1.6%로 2016년까지만 해도 군산시의 실업률이 도 평균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력산업의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동차 제조업 중심의 군산시 고용 여건은 좋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도 실업률이 2.1%에서 2.7%로 상승하는 기간 동안, 군산시의 실업률은 3.2%까지 증가하여 높은 평균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표 2-10] 군산시 고용동향(2016-2018)

(단위: 천명, %)

| 구 분         |             | '16년  | '17년  | '18년  | 평균증감(율)<br>( '16년 대비,<br>'18년 기준) |
|-------------|-------------|-------|-------|-------|-----------------------------------|
| 군<br>산<br>시 | 15세 이상인구    | 233.9 | 232.7 | 232.0 | -0.27                             |
|             | 경제활동인구      | 131.0 | 125.6 | 127.2 | -0.98                             |
|             | 취업자         | 128.9 | 122.5 | 123.2 | -1.50                             |
|             | 실업자         | 2.1   | 3.1   | 4.0   | 23.96                             |
|             | 경제활동참가율     | 56.0  | 54.0  | 54.8  | -0.72                             |
|             | 고용률(15세 이상) | 55.1  | 52.6  | 53.1  | -1.22                             |
|             | 고용률(15~64세) | 60.1  | 59.2  | 58.5  | -0.90                             |
|             | 청년고용률       | 29.2  | 28.0  | 27.5  | -1.98                             |
|             | 여성고용률       | 42.6  | 39.7  | 41.9  | -0.55                             |
|             | 실업률         | 1.6   | 2.5   | 3.2   | 25.99                             |
| 전<br>북<br>도 | 15세 이상인구    | 1,569 | 1,571 | 1,569 | -                                 |
|             | 경제활동인구      | 960   | 944   | 940   | -0.70                             |
|             | 취업자         | 940   | 921   | 915   | -0.89                             |
|             | 실업자         | 20    | 24    | 26    | 9.14                              |
|             | 경제활동참가율     | 61.2  | 60.1  | 59.9  | -0.71                             |
|             | 고용률(15세 이상) | 59.9  | 58.6  | 58.3  | -0.90                             |
|             | 고용률(15~64세) | 65.5  | 64.4  | 63.9  | -0.82                             |
|             | 청년고용률       | 33.8  | 32.7  | 31.7  | -2.12                             |
|             | 여성고용률       | 50.2  | 48.8  | 48.5  | -1.14                             |
|             | 실업률         | 2.1   | 2.5   | 2.7   | 8.74                              |

2018년 기준 군산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700명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12만 7200명으로 전년대비 1,600명 증가하였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만 4,800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감소하였다. 취업자수는 12만 3,200명으로 전년대비 7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3.1%로 0.5% 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년대비 각각 900명, 전년대비 0.7%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산시 고용률 53.1%는 전북도 평균인 58.3%보다는 5%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군산시 및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의 2018년 6월 실업급여는 전체 4,204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제조업 관련 총액은 1,602백만원으로 발표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추이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건수 및 총 지급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 걸쳐 모두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수 있다. 단순히 한 가지 산업에 대한 불황여파가 아니라 군산시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현상이라고 의미 할 수 있다.

**[표 2-11] 군산시 연간 실업급여 지급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인정자수(건)      | 5,049  | 5,565  | 5,174  | 5,950  |
| 지급건수(건)      | 26,694 | 29,230 | 28,191 | 32,939 |
| 총 실업급여액(백만원) | 22,732 | 26,773 | 27,260 | 34,246 |
| 제조업          | 6,145  | 8,162  | 8,551  | 13,338 |
| 건설업          | 3,732  | 3,920  | 4,267  | 3,575  |
| 도매·소매업       | 1,257  | 1,320  | 1,586  | 2,131  |
| 운수업          | 1,255  | 1,593  | 1,342  | 1,517  |

출처: 군산시; 고용노동부 재인용

군산시의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군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액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비중은 41.2%로 전체적인 비중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표 2-12] 군산시 경제활동 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당해 연도 기준)

| 경제활동별             | 2014      | 2015      | 2016      |
|-------------------|-----------|-----------|-----------|
| 지역내 총생산           | 9,376,391 | 9,797,474 | 9,949,215 |
| 순생산물세             | 875,734   | 940,341   | 939,808   |
| 총부가가치             | 8,500,657 | 8,857,133 | 9,009,407 |
|                   | 100.0%    | 100.0%    | 100.0%    |
| 농림어업              | 208,570   | 212,920   | 227,580   |
|                   | 2.2%      | 2.2%      | 2.3%      |
| 광업                | 10,654    | 12,451    | 19,779    |
|                   | 0.1%      | 0.1%      | 0.2%      |
| 제조업               | 4,128,851 | 3,993,806 | 4,102,834 |
|                   | 44.0%     | 40.8%     | 41.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24,624   | 598,519   | 635,038   |
|                   | 5.6%      | 6.1%      | 6.4%      |
| 건설업               | 686,060   | 889,275   | 739,406   |
|                   | 7.3%      | 9.1%      | 7.4%      |
| 도매 및 소매업          | 321,502   | 318,980   | 332,182   |
|                   | 3.4%      | 3.3%      | 3.3%      |
| 운수업               | 209,431   | 298,350   | 306,298   |
|                   | 2.2%      | 3.0%      | 3.1%      |
| 숙박 및 음식점업         | 171,247   | 181,918   | 191,390   |
|                   | 1.8%      | 1.9%      | 1.9%      |
| 정보 및 통신업          | 72,015    | 67,957    | 70,199    |
|                   | 0.8%      | 0.7%      | 0.7%      |
| 금융 및 보험업          | 277,275   | 245,637   | 258,600   |
|                   | 3.0%      | 2.5%      | 2.6%      |
| 부동산 및 임대업         | 352,758   | 374,231   | 393,901   |
|                   | 3.8%      | 3.8%      | 4.0%      |
| 사업서비스업            | 181,472   | 167,979   | 179,687   |
|                   | 1.9%      | 1.7%      | 1.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480,601   | 444,314   | 445,930   |
|                   | 5.1%      | 4.5%      | 4.5%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경제활동별          | 2014    | 2015    | 2016    |
|----------------|---------|---------|---------|
| 교육서비스업         | 447,925 | 511,092 | 510,142 |
|                | 4.8%    | 5.2%    | 5.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44,071 | 322,341 | 358,027 |
|                | 2.6%    | 3.3%    | 3.6%    |
|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183,603 | 217,360 | 238,413 |
|                | 2.0%    | 2.2%    | 2.4%    |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지역계정

군산시 지역내총생산의 2014-2016년도 3년 평균 증감률은 2.0%이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감률 5.24%, 전북 평균 증감률 3.19%와 비교할 때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의 비중감소가 군산시 총생산액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표 2-13]** 군산시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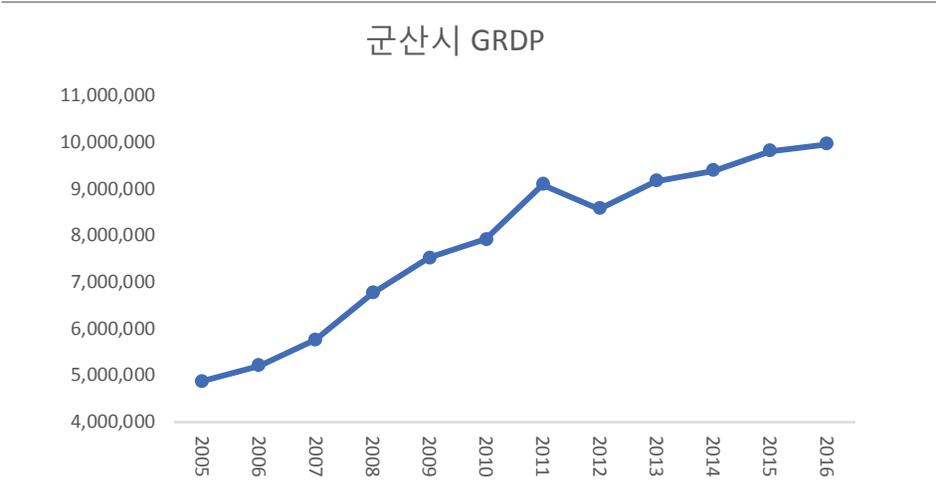
(단위: %p)

| 구 분 |             | 2014      | 2015      | 2016      | 평균증감률<br>('14~'16) |
|-----|-------------|-----------|-----------|-----------|--------------------|
| 전 국 | GDP(십억 원)   | 1,485,504 | 1,565,247 | 1,731,544 | 5.24               |
|     | 1인당 생산액(천원) | 29,273    | 30,682    | 33,657    | 4.76               |
| 전북도 | GRDP(십억 원)  | 44,242    | 45,641    | 48,614    | 3.19               |
|     | 1인당 생산액(천원) | 24,184    | 24,399    | 26,569    | 3.18               |
| 군산시 | GRDP(십억 원)  | 9,376     | 9,797     | 9,949     | 2.00               |
|     | 1인당 생산액(천원) | 33,703    | 35,211    | 35,796    | 2.03               |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지역계정

[그림 2-5] 군산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백만원)



다음으로 군산시의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이 전체 2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수치이다.

[표 2-14] 군산시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

| 산업별              | 2016<br>1/2 | 2017<br>1/2 | 2018<br>1/2 | 전년동반기 대비 |      |       |
|------------------|-------------|-------------|-------------|----------|------|-------|
|                  |             |             |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계                | 128.4       | 130.5       | 123.2       |          | -7.3 | -5.6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1.1        | 10.1        | 8.5         | 6.9%     | -1.6 | -15.8 |
| 광·제조업            | 29.6        | 28.7        | 25.1        | 20.4%    | -3.6 | -12.5 |
| 건설업              | 9.6         | 9.4         | 10.3        | 8.4%     | 0.9  | 9.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25.9        | 24.7        | 23.1        | 18.8%    | -1.6 | -6.5  |
| 전기·운수·통신·금융      | 12.5        | 13.4        | 13.7        | 11.1%    | 0.3  | 2.2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39.7        | 44.1        | 42.5        | 34.5%    | -1.6 | -3.6  |

2016년 기준 군산시 사업체 수는 9,583개, 종사자 수는 82,059명으로 2015년 대비 사업체 수는 194개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1,255명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6년 기준 군산시 사업체의 12.14% 비중을 차지하나 종사자 수 비중은 32.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대비 사업체 수는 68개사가 감소하고, 종사자 수 또한 2,420명 감소하였다. 이는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기존기업의 구조조정 및 이동현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2-15】** 군산시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천명, %)

| 산업별                    | 2015  |       |        |       | 2016  |       |        |       |
|------------------------|-------|-------|--------|-------|-------|-------|--------|-------|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합계                     | 9,389 | 비중    | 83,314 | 비중    | 9,583 | 비중    | 82,059 | 비중    |
| 도매 및 소매업               | 1,976 | 21.05 | 8,342  | 10.01 | 2,039 | 21.28 | 8,855  | 10.79 |
| 숙박 및 음식점업              | 1,759 | 18.73 | 7,281  | 8.74  | 1,875 | 19.57 | 7,553  | 9.20  |
| 제조업                    | 1,231 | 13.11 | 28,731 | 34.49 | 1,163 | 12.14 | 26,311 | 32.0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049 | 11.17 | 3,175  | 3.81  | 1,068 | 11.14 | 3,482  | 4.2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42   | 7.90  | 8,851  | 10.62 | 761   | 7.94  | 8,973  | 10.93 |
| 건설업                    | 569   | 6.06  | 5,267  | 6.32  | 546   | 5.70  | 5,131  | 6.25  |
| 교육서비스업                 | 413   | 4.40  | 4,133  | 4.96  | 418   | 4.36  | 4,260  | 5.19  |
| 운수업                    | 328   | 3.49  | 3,542  | 4.25  | 358   | 3.74  | 3,705  | 4.5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01   | 3.21  | 1,627  | 1.95  | 334   | 3.49  | 1,893  | 2.31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66   | 2.83  | 1,446  | 1.74  | 253   | 2.64  | 1,620  | 1.97  |

| 산업별                    | 2015 |      |       |      | 2016 |      |       |      |
|------------------------|------|------|-------|------|------|------|-------|------|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20  | 2.34 | 4,630 | 5.56 | 205  | 2.14 | 3,889 | 4.74 |
| 금융 및 보험업               | 211  | 2.25 | 3,155 | 3.79 | 204  | 2.13 | 3,204 | 3.9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74  | 1.85 | 713   | 0.86 | 205  | 2.14 | 800   | 0.97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0   | 0.64 | 958   | 1.15 | 61   | 0.64 | 986   | 1.2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6   | 0.38 | 280   | 0.34 | 40   | 0.42 | 308   | 0.3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4   | 0.26 | 735   | 0.88 | 22   | 0.23 | 611   | 0.74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2   | 0.23 | 254   | 0.30 | 24   | 0.25 | 313   | 0.38 |
| 광업                     | 8    | 0.09 | 194   | 0.23 | 7    | 0.07 | 165   | 0.20 |
| 공공행정, 국방 및 정보서비스업      | 10   | 0.05 | 92    | 0.09 | 8    | 0.04 | 194   | 0.18 |

## 제3절 해외의 지역경제 침체 사례

### 1. 디트로이트 시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시는 약 20조원 규모(US\$ 18-20Billion)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2013년 7월 18일 미국 역사상 파산(Chapter 9 Bankruptcy)을 신청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이보다 우선하여 2012년 4월에 디트로이트 시장 데이브 빙(Dave Bing)은 시 위원회 9명 위원들과 함께 미시건주 주지사 릭 스나이더(Rick Snyder)와 주차원에서 디트로이트 시 재정을 관할하고 도움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주차원에서 디트로이트 시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였다. 결과 2013년 2월 스나이더 주지사는 디트로이트의 재정상황이 주와 협의한 상황보다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라 디트로이트 시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정상화를 위한 응급 재정 협력 위원회(Local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Loan Board)의 처리과정 속에서 2013년 7월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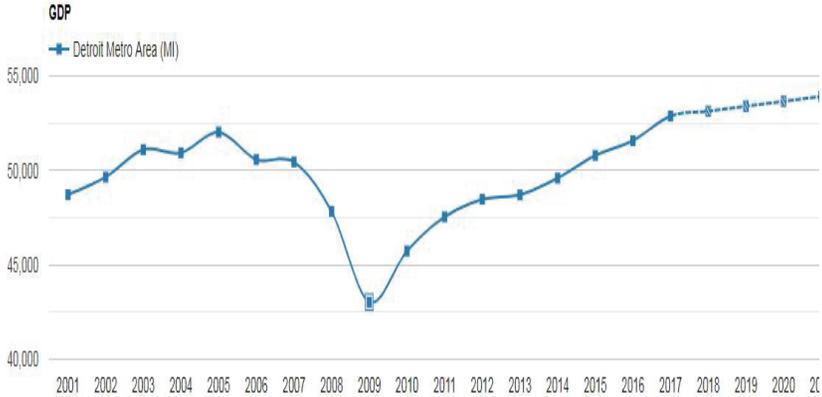
공적 성격의 디트로이트시 산하 경제개발기구(DEGC)는 ‘Detroit is on the Rise’를 구호로 내걸고 도시 부활을 지원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을 만들고, 구글, 아마존 등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도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마존 물류센터와 마이크로소프트 미래기술연구센터를 이미 유치했고, 구글 자동차연구센터와 포드 전기차연구소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우수 기업들이 디트로이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 관련 집적 효과 뿐만은 아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살 만한 주거 공간을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sup>5</sup>.

이러한 재정적 노력에 따라 디트로이트 시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뉴욕타임스가 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한 ‘2017년 방문할 52곳’에 선정될 정도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시의 부활은 경제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경제분석청 자료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1% 성장해 미국 평균 성장률 1.5%를 상회했다. 1인당 평균소득도

<sup>5</sup> 인용: 매경; <https://www.mk.co.kr/news/realstate/view/2018/03/180091/>

5년간 연평균 6.2% 증가했다. 미국 평균 3.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그림 2-6]** 연간 1인당 GDP 변화(디트로이트 Metro Area: 2001-2017)



주거와 일자리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총 3만5500건의 주거용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연평균 4.9%씩 증가한 것으로 미국 전체 평균 1.9%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같은 기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도 디트로이트가 2%로 미국 전체 평균 1.9%보다 높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주거재생이 진행되자 매년 1만 명 이상씩 줄어들던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180만 명이나 됐던 디트로이트 시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2~3년 7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7월 약 180억~20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한 디트로이트 시는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되살아났다.

[그림 2-7] 사업체 수 및 고용현황(2017년 디트로이트 회복 과정)

| BUSINESSES                                  |               |
|---|---------------|
| Businesses                                  |               |
| Total employer establishments, 2016         | 7,757,807     |
| Total employment, 2016                      | 126,752,238   |
| Total annual payroll, 2016 (\$1,000)        | 6,435,142,055 |
| Total employment, percent change, 2015-2016 | 2.1%          |
| Total nonemployer establishments, 2017      | 25,701,671    |
| All firms, 2012                             | 27,626,360    |
| Men-owned firms, 2012                       | 14,844,597    |
| Women-owned firms, 2012                     | 9,878,397     |
| Minority-owned firms, 2012                  | 7,952,386     |
| Nonminority-owned firms, 2012               | 18,987,918    |
| Veteran-owned firms, 2012                   | 2,521,682     |
| Nonveteran-owned firms, 2012                | 24,070,685    |

출처: U.S. Census

사실상 죽은 도시나 다름없었던 디트로이트가 극적으로 살아난 데는 도시재생이 큰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 및 현지 부동산 대출 전문회사 등 민간 금융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JP모건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디트로이트 재생사업에 7년간 누적 1억 5,000만 달러(약 1,600억원), 연간 2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JP모건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살 만한 주거지 개발’ 과 ‘소규모 창업지원’ 두 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디트로이트시의 저층 주거지 건축 공사에는 무조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한 주거재생도 많다. 사람들이 떠나 폐교가 된 학교는 다세대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 증축 공사 시행 됐다. 토샤 타브론 JP모건 사회공헌담당 부사장은 “디트로이트 시내에 낡은 빈집이 많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주거재생을 통해 사람이 모이니까 음식점이나 상점이 점차 늘어나면서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레스토랑, 커피숍 등 ‘창업교육’ 과 ‘자금 지원’ 이었다. 소

수인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일자리 2,000여 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이지만 결과적으로 JP모건도 덕을 봤다. 타브론 부사장은 “다른 은행과 달리 JP모건의 디트로이트 고객 자산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도 26%로 2위(1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2. 뉴욕시(New York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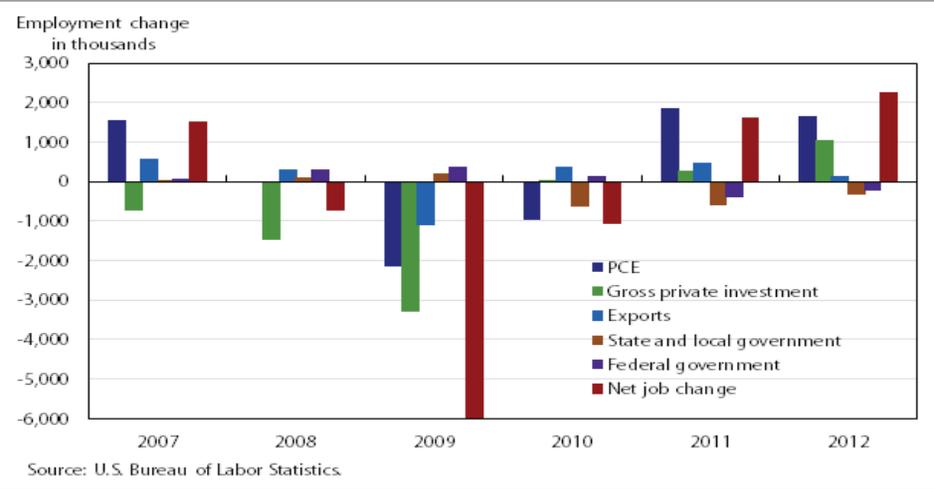
뉴욕시는 1970-80년대 석유파동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최대 활황기를 겪었다. 2007년까지 인구는 820만 명에 달했으며 지역경제규모는 1조 달러(\$1trillion) 넘게 성장하였다. 이는 단일 경제권으로 전 세계에서 12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 가치의 폭락과 함께 금융공학 사태가 발생하며 약 1년 사이에 전 세계의 40%의 부가 증발하였다<sup>6</sup>.

뉴욕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통해 15개월 동안 금융부문에서만 3만6천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0억불, 2010년 14억불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였다.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3만 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2010년까지 9퍼센트까지 올랐으며 전체 주택가격의 31,8%가 하락 하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1,820억 달러가 AIG에 투입 되었다.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기금융투자시장으로부터 채권시장으로 1,445억 달러가 이동하였다.

2009년 동안 뉴욕시의 민간영역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대 피해는 금융 분야, 미디어 및 광고 분야, 소매 및 오락 분야, 그리고 여행 및 관광업 분야였다. 손실이 컸던 전 분야가 모두 뉴욕시와 할렘 경제에 깊숙이 공헌하던 분야들이다. 오직 일자리 성장이 있었던 분야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보건과 교육 분야였다.

<sup>6</sup> 출처: [https://www.huffpost.com/entry/the-impact-of-the-economy\\_b\\_285825](https://www.huffpost.com/entry/the-impact-of-the-economy_b_285825)

[그림 2-8] 연도별 뉴욕시 고용 현황



뉴욕시는 역사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가 발전한 도시로써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금융서비스 분야였다. 베어스틴(Bear Stearns), AIG,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매릴 린치(Merrill Lynch), 와코비아(Wachovia),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등 전 세계 굴지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구조 금융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써 연방은행 규제자 측 으로부터 은행 자본 요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 대부업무에 대한 사업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 회복에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2009년도 뉴욕시의 소매업분야 역시 8~10% 이상 매출이 떨어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관광업은 6% 감소하였고, 호텔 숙박업은 공실률이 5.5% 정도 증가하였지만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호텔수익에 35~40% 정도 손실규모였다. 할렘지역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할렘지역에서만 35% 정도의 소규모 여행 및 관광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뉴욕시의 부동산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 1996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2009년도에만 미드타운 지역에서만 A 등급 사무실의 공실률이 12% 넘게 발생하였다. 2009년도 거주용 매매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50% 규모로 줄어들었다. 계획되어있었던 건설공사는 중지되었다. 막대한 최악의 상황은 2009년도에만 뉴욕시의 5개 구에서 최소 70,000개의 거주용 아파트가 은행에 차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0년도 넘어서 뉴욕시의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별 최대 17.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자리를 잃고 실직한 실직자들의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간극에 대한 설명이었다.



## 제3장



#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성

제1절 동태적 요인 모형  
(Dynamic Factor Model)

제2절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자치단체의 세수입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역주민의 수와 함께 지역경기일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경기변동을 사이클을 보인다. 물론 미국에서 주별로, 유럽연합에서 각 국가별로 보이는 경기 사이클의 차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군산이나 거제, 울산 등 특정산업의 부침에 따라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살펴보거나 지방재정건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상황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기는 각 지역별로 국가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과 동행하는지 지역별로 이행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재정수입구조 개편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기변동을 시도별 변수의 동행(co-movement)로 표현할 수 있는 동태적 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동태적 요인 모형에서는 개별 시도의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공통 요인(common component)과 개별 요인(idiosyncratic component)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분석에 적용된 모형을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시도별 광공업 생산량과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 통계를 적용하여, 2003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 제1절 동태적 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

다음과 같은 동태적 요인모형(Dynamic latent factor model, DFM)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X = \lambda'_i F_t + e \quad (\text{수식 1})$$

여기서  $X$ 는 변수  $i$ 의  $t$ 기 관측치 이고, 각각의  $i$ 변수는 시도의 실질 경제 변수 또는 금융변수를 사용하며, 변수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임을 갖는다.  $N$ 개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고, 각각의 변수들은  $T$ 기간 동안 관측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수식 1)에서  $\lambda'_i F_t$ 항은  $X$ 의 공통항(common component)이고,  $e$  부분은 각 시도의 고유한 충격항(idiosyncratic component)에 해당한다.  $F_t = (F_{1t}, \dots, F_{rt})'$ 은  $r$ 개의 공통 은닉 요인(latent common factors)의 벡터의 집합이며, 공통 은닉 요인의 개수는 시도의 경제, 금융 변수의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수를 갖는다. 관측치  $X$ 가 공통 요인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요인 부하(factor loading) 벡터인  $\lambda_i = (\lambda_{i1}, \dots, \lambda_{ir})'$ 로 표현된다. 공통 요인들의 벡터인  $F_t$ 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통 요인  $F_t$ 가 관측시점인  $t$ 기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X$ 가 시도 단위의 경제 변수라면, 요인 부하 벡터는 개별 시도의 변수들이 전국 경제 상황에 연관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수식 1)에서 주어진 요인 모형은 개별 시도 단위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전국적인 경제변수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된 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닉 요인모형을 추정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수식 1)의 우변에 있는 공통 요인들과 요인 부하 벡터가 모두 관측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접근법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s)을 적용해 (수식 4-1)을 추정하고자 한다. 주요인 분석은 은닉 요인 모형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요인 분석을 적용한 은닉 요인 모형의 추정은 Bai and Ng(2002, 2006, 2007)이나 Stock and Watson(2002), 그리고 Bai(2003)에서 최근 들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인 분석을 이용한 공통 요인과 요인 부하

벡터의 추정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수식 1)을 매트릭스 형태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X = F\Lambda' + e \quad (\text{수식 2})$$

(수식 2)에서  $X = (X_1, \dots, X_N)$ ,  $X_i = (X_{i1}, \dots, X_{iT})'$ ,  $F = (F_1, \dots, F_r)$ ,  $F_i = (F_{i1}, \dots, F_{iT})'$ ,  $\Lambda = (\lambda_1, \dots, \lambda_N)'$ ,  $e = (e_1, \dots, e_N)$ ,  $e_i = (e_{i1}, \dots, e_{iT})'$ 를 나타낸다. 주요인 분석은 아래와 같은 목적함수를 최적화 시키는 문제를 푸는 것으로 표현된다.

$$V(r) = \min_{F, \Lambda} (NT)^{-1} \sum_{i=1}^N \sum_{t=1}^T (X - \lambda'_i F_t)^2 \quad (\text{수식 3})$$

(수식 3)의 해는 먼저  $\Lambda$ 에 대한 해를 구하고,  $F'F/T = I_r$ 의 정규화(normalization) 제약식을 이용해  $F$ 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된다. 이는 다시  $\text{trace}(F'(XX')F)$ 를 최대화 시키는 문제로 치환가능하다. 추정된 공통요인 매트릭스  $\tilde{F}$ 는  $XX'$  매트릭스의  $r$ 번째 가장 큰 아이겐값(Eigenvalues)값과 매칭되는 아이겐 벡터(eigenvector)에  $\sqrt{T}$ 를 곱하여 구해지며, 추정된 요인 부하는  $\tilde{\Lambda}' = \tilde{F}'X/T$ 로 얻을 수 있다.

(수식 1)에서 주어진 모형은 정적 요인 모형(static factor model)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수식 1)은 동태적 요인 모형으로도 확장이 가능하자. Stock and Watson(2002)과 Bai(2003)은  $F_t$ 가 Vector autoregressive(VAR) 과정을 따르고 오차항  $e$ 가 autoregressive(AR) 과정을 따를 때, 주요인 분석이 일관되게 공통 요인들과 요인 부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더 나아가서 정적 요인 모형과는 대비되는 것은 모형에서  $e$ 와  $e_{jt}$ 사이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Chamberlain and Rothchild(1983)의 approximate 요인 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적용하고자 하는 동태적 요인 모형(DFM)은 적용범위가 넓으며, 관심을 갖는 공통 요인과 요인 부하를 주요인 분석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손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주요인 분석이 공통 요인과 요인 부하를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주지만,  $\tilde{F}$ 와  $\tilde{\lambda}$ 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DFM의 근사적 분포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Bai(2003)에서 제시된 극한 분포(limiting distribution theory)를 적용한다. Bai(2003)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시된 극한 분포가 정확한 통계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X_t$ 에 사용된 경제변수들은 16개 시도별 광공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변수와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변수로는 협의의 통화 M1의 증가율, 광의의 통화 M2의 증가율, KOSPI주가지수의 증가율,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자율 변수로는 91일 CD시장금리,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회사채 AA-등급의 1차 차분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 사용되는 경제 및 금융변수의 개수는 총  $N = 2 \times 16 + 8 = 40$ 이다. 분석의 시점은 모든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2000년 3사분기부터 2018년 3사 분기까지이며, 각각의 시리즈에 대해 총  $T = 73$ 의 관측치를 갖는다.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각각의 변수와 요인에 대해 요인 부하를 추정해 낸다. 여기서는 시도별로 광공업 생산량과 경제활동인구(고용) 증가율에 대응되는 요인 부하만을 <표 1>에서 제시한다. 가령, 강원도의 고용 증가율에 대응되는  $r$ 번째 요인 부하는 전국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r$ 번째 공통 요인과 강원도 고용 증가율에 대한 동행(co-movement)을 측정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시도의 요인 부하 벡터들은 시도의 경기변동과 전국적인 경기 상황의 동행과 불일치 여부를 측정하는 편리한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는 특정 시도의  $i$ 번째 요인 부하가 크다(또는 작다)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는 factor들에 강하게 (또는 약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닉 요인 모형들은 회전적 불확정성(rotational indeterminacy)의 취약성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H$  매트릭스가  $r \times r$  nonsingular 매트릭스라면 (수식 1)에서  $\lambda_i H^{-1}(HF_t)$ 와  $\lambda_i(F_t)$ 가 관측치 상으로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규화 제약식을 적용한 주요인 분석에서는 고유한  $H$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 요인과 요인 부하의 identification을 위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제2절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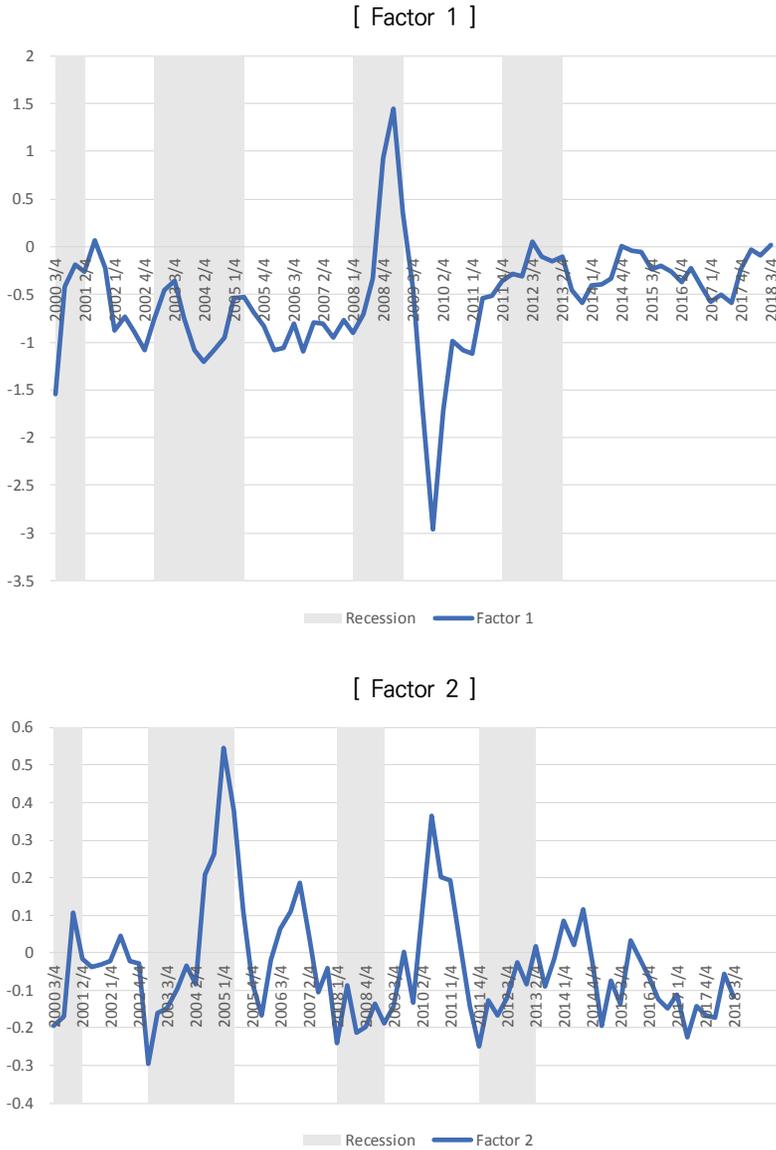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통 요인과 요인 부하를 주요인 분석에 의해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X$ 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평균 0과 unit-variance를 갖도록 하였다. Owyang et al. (2008)에서와 같이 공통요인의 최대 개수 20까지 두고, Bai and Ng(2002)의  $IC_{p1}$  과  $IC_{p2}$  information criteria를 적용해 보았다. 테스트 결과 동태적 공통 요인은 3개 ( $r = 3$ )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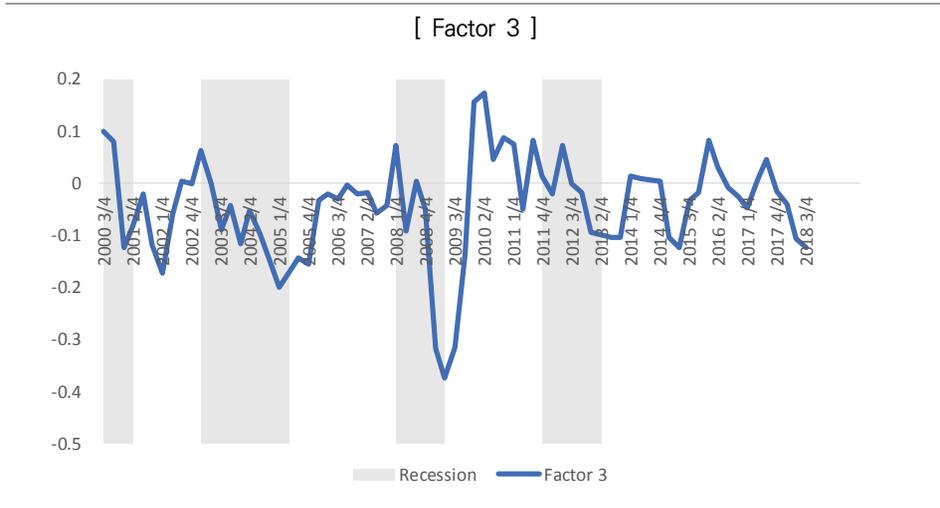
### 1. 공통 요인

추정된 세 개의 공통 요인을 그림 19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제순환 주기는 1970년 이후 지금까지 10순환 주기를 거쳤으며, 현재는 제11순환주기가 진행 중이다. 분석 기간 동안 경기 고점에서 저점 사이의 구간을 그림 1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해당 시기는 2000년 8월~2001년 7월, 2002년 12월~2005년 4월, 2008년 1월에서 2009년 2월, 그리고 2011년 8월에서 2013년 3월까지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순환주기에 따르면 현 주기 개시이후 49개월을 지나고 있으며 아직 11주기의 정점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개의 경기변동 공통 요인들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첫 번째 요인의 경우 주요 침체기마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며 경기와 역행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1의 경우 2003년의 내수 위축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의 유럽의 재정위기의 시기에 동안에 상승하였다.

[그림 3-1] 추정된 공통요인(Common Factors)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통계청의 경기 순환기를 나타냄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경우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가파르게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경기 역행적” 요인이나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위기 및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의 경우 첫 번째 “경기 역행적” 요인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두 번째 요인의 경우 2003년에 시작된 경기 후퇴기가 끝나가는 2005년 1분기에 최고점을 찍었으며, 반대로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8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도달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2010년 3분기의 고점을 제외하고, 경기순환 주기의 수축기가 끝나가기에 주변 최댓값(local maximum)에 도달하여 “경기 선행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그림의 세 번째 패널에 제시된 공통요인 3은 첫 번째 경기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두 번째 요인의 변화 양상과 좀 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통요인과 비교하여 경기 확장기와 침체기의 시작과 끝을 좀 더 잘 매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 번째 요인을 “경기 동행적”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각각의 공통요인들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경기순환 주기를 대응시켜보는 작업과는 별개로 추정된 공통요인들을 실물 경제변수의 시계열과 비교하거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유의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2. 시도별 요인 부하(Factor Loadings)

분석의 목적 중 하나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검증하는데 있고, 이는 각 시도별 공통요인에 대응되는 요인 부하의 크기로 판별해 볼 수 있다. 각 시도별로 6개의 요인 부하들이 존재하며, 추정된 factor loadings는 시도별로 각각 주어진 관측치 시계열 (계절 조정된 광공업 생산지수,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과 3개의 전국 공통 요인들과의 통계적 관계를 기술한다. 시도별 요인 부하의 지역적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부록에서는 요인 부하의 4분위 값을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다. 또한 dynamic factor model의 모형 적합도를 시도별/변수별로 제시하기 위하여 전체 변동분 분에 공통요인과 요인 부하의 곱으로 설명되는 항의 부분을 모형의 설명력( $R^2$ )으로 제시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추정된 요인부하의 값을 시도별/변수별로 제시하고, 모형의 설명력  $R^2$ 을 함께 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경기 역행적” 요인의 광공업 생산지수 부하( $\hat{\lambda}_{11}$ )는 대부분의 모든 시도에서 음의 부호를 가졌다. 경기 역행적 요인과 반대 방향으로 큰 영향을 받는 시도는 전라북도(-0.520), 경기도(-0.494), 대구광역시(-0.458), 인천광역시(-0.427) 순으로 컸으며, 제주도의 경우 -0.046에 불과하여 첫 번째 요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즉 요인부하가 큰(또는 작은) 시도들의 경우 경기 역행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에 민감하게(또는 둔감하게) 반응하며, 요인부하의 절대 값이 작을수록 공통요소의 영향보다는 해당 시도의 상대적으로 개별 요인에 경기상황이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서울(-0.502), 경기도(-0.391), 광주(-0.358), 인천(-0.357),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으며,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첫 번째 요인이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0.211로 광공업 생산지수보다 작았다.

경기 선행적 요인인 두 번째 요인의 경우 광주광역시(0.114), 제주도(-0.119)의

factor loading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졌으며 시도 전체 평균은 0.012로 나타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통 요인의 요인 부하는 대부분의 시도에 걸쳐 작은 값을 나타내, 가장 중요한 공통요인은 첫 번째 factor로 판단된다.

모형의 적합도는 광공업 생산지수의 경우 경상남도(0.624), 광주광역시(0.569), 경상북도(0.554), 부산광역시(0.502)로 순으로 높았고, 고용의 경우 경기도(0.564), 서울(0.488), 대전광역시(0.468), 전라남도(0.453) 순으로  $R^2$  값이 비쌌다.

추정된 factor loading 에서 확인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경제변동이 전체 국가경제의 순환 주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정된 전국 공통요인의 요인 부하는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또한 공통요인으로만 시도별 경제 변수의 변동을 파악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형 적합도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시도별 변수의 전체 변동분을 모형이 전부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전국 공통요인과 함께 지역 고유의 요인들이 상당부분 작용하며, 이는 특히 광공업 생산지수의 경우 보다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의 경우에 지역적 특성이 좀 더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추정된 Factor Loadings

| 시도    | Factor1                                 |  | Factor2                                 |  | Factor3                                 |  | 모형의 설명력                  |                         |
|-------|---|--|---|--|---|--|--------------------------|-------------------------|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1}$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1}$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2}$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2}$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3}$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3}$ ) | 광공업<br>생산지수<br>( $R^2$ ) | 경제활동<br>인구<br>( $R^2$ ) |
| 서울특별시 | -0.316                                  | -0.502                                 | -0.005                                  | 0.064                                  | 0.071                                   | 0.027                                  | 0.313                    | 0.488                   |
| 부산광역시 | -0.275                                  | -0.252                                 | 0.037                                   | 0.020                                  | 0.033                                   | 0.013                                  | 0.502                    | 0.333                   |
| 대구광역시 | -0.458                                  | -0.268                                 | 0.040                                   | 0.007                                  | 0.060                                   | 0.003                                  | 0.334                    | 0.397                   |
| 인천광역시 | -0.427                                  | -0.357                                 | 0.008                                   | 0.002                                  | 0.060                                   | 0.018                                  | 0.366                    | 0.317                   |
| 광주광역시 | -0.352                                  | -0.358                                 | 0.114                                   | 0.036                                  | 0.010                                   | -0.007                                 | 0.569                    | 0.319                   |
| 대전광역시 | -0.371                                  | -0.202                                 | 0.021                                   | 0.005                                  | 0.058                                   | 0.007                                  | 0.341                    | 0.468                   |
| 울산광역시 | -0.299                                  | -0.173                                 | 0.016                                   | 0.008                                  | 0.017                                   | 0.022                                  | 0.401                    | 0.341                   |
| 경기도   | -0.494                                  | -0.391                                 | 0.044                                   | 0.024                                  | 0.031                                   | 0.018                                  | 0.387                    | 0.564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시도   | Factor1                                 |  | Factor2                                 |  | Factor3                                 |  | 모형의 설명력                  |                         |
|------|---|--|---|--|---|--|--------------------------|-------------------------|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1}$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1}$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2}$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2}$ ) | 광공업<br>생산지수<br>( $\hat{\lambda}_{i3}$ ) | 경제활동<br>인구<br>( $\hat{\lambda}_{i3}$ ) | 광공업<br>생산지수<br>( $R^2$ ) | 경제활동<br>인구<br>( $R^2$ ) |
| 강원도  | -0.282                                  | -0.040                                 | -0.031                                  | -0.019                                 | 0.056                                   | -0.005                                 | 0.335                    | 0.425                   |
| 충청북도 | -0.356                                  | -0.200                                 | -0.018                                  | 0.018                                  | 0.025                                   | 0.014                                  | 0.310                    | 0.375                   |
| 충청남도 | -0.445                                  | -0.250                                 | 0.000                                   | 0.048                                  | 0.001                                   | -0.006                                 | 0.418                    | 0.324                   |
| 전라북도 | -0.520                                  | -0.079                                 | 0.022                                   | -0.016                                 | 0.038                                   | 0.008                                  | 0.347                    | 0.311                   |
| 전라남도 | -0.340                                  | 0.011                                  | -0.001                                  | -0.037                                 | 0.043                                   | -0.006                                 | 0.391                    | 0.453                   |
| 경상북도 | -0.374                                  | -0.063                                 | 0.029                                   | 0.017                                  | 0.018                                   | 0.012                                  | 0.554                    | 0.325                   |
| 경상남도 | -0.394                                  | -0.136                                 | 0.034                                   | -0.021                                 | 0.032                                   | 0.007                                  | 0.624                    | 0.353                   |
| 제주도  | -0.046                                  | -0.114                                 | -0.119                                  | -0.028                                 | 0.015                                   | 0.023                                  | 0.403                    | 0.430                   |
| 평균   | -0.359                                  | -0.011                                 | 0.012                                   | 0.008                                  | 0.035                                   | 0.009                                  | 0.412                    | 0.389                   |
| 표준편차 | 0.111                                   | 0.142                                  | 0.048                                   | 0.028                                  | 0.021                                   | 0.011                                  | 0.098                    | 0.075                   |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시점마다 시도별 생산량과 고용 상황은 큰 편차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는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으로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의 중앙의 대응은 그동안 이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산업별, 인구 구성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경기 정점과 저점의 진입 속도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 따른 재정집행은 시의 적절하게 지역의 경기, 고용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최적 정책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 제3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시도별 경기변동의 특장을 동태적 요인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시도의 경기변동은 전국 공통요인에 의한 영향과 시도 고유의 개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의 설명력을 통해 살펴보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별 광공업 생산지수와 경제활동 인구는 각각 0.41과 0.39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 고유의 개별요인에서 오는 충격이 전국 공통요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설정하고, 새로운 충격에 의해 경제가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전국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역경제 전체 변동분과 같다고 상정해 본다면, 국가경제의 경기대응적 정책이 모든 지역에도 최적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가경제의 전체 흐름과 지역경제의 변동이 전혀 상이하다면,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일부 또는 전체 지자체 지역경제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공통 요인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그 중간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통요인보다 시도의 개별요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상당하다고 할 때 이는 잠재적으로 지역간 위험 공유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고려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경기하방 위험이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할 때, 이러한 개별 위험을 풀링(pooling)하고 상호 부조해 주는 형태는 기본적인 보험의 형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정부간 이전재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간 위험공유의 형태는 실제로 대부분 선진국 재정 시스템의 기본요소이다. 지역간 개별 통화 사용의 유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소비 변동성을 줄이고, 지역내 생산과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지역간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 제도에서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정치 경제적인 고려사항들은 완전한 지역간 위험공유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의 연방제 국가 사례는 조세 및 재원이전 시스템을 통한 지역간 보험 규모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지역간 실증 분석결과는 세제 및 이전시스템을 통한 지역간 위험 공유가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위험 공유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조세와 재원이전을 통한 지역간 위험공유의 중요한 측면은 지역 고유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지급시스템은 이러한 고유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현하기 힘들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지역간 위험공유 체계 구축이 시도된다면 소득 차이에 연계한 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원이전 체계는 지역 산출 및 가격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안정과도 상충될 수 있다. 지역 안정화와 국가 안정화 사이의 충돌은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재정조정 체계를 통한 더 적극적인 지역간 위험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 제4장



# 지방재정지출의 효과 추정

-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의 구성
-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효과 추정
- 제3절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여되는 대표적인 기능을 선택적으로 집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규모로 정의하였다. 또한 시군의 총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 비율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로 정의하였다. 분류를 통해 살펴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연도별로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 유형별, 연도별 차이를 시군 자치단체, 시 자치단체 및 군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각 밀도함수와 통계적 특성을 요약한 표로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비율의 구성 및 특징을 서술한다. 그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평균처리효과를 적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비율이 40% 이상일 때 지방세 수입이 평균 1,01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내년도 자체재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적극적 재정집행이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재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분석의 한계를 논한다.

##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의 구성

### 1.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 구성

#### 1) 지역경제 외부환경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의 경제권 내의 경제활동을 포괄·설명하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대외적인 경제 환경으로는 지난 1990년대 말 IMF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다양한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으로부터 불어 닥친 국가규모의 경제 불황 또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는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또한 대내적인 경제환경으로는 지역내의 인구 노령화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역산업 쇠퇴 등도 지역경제의 내적 침체요소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투자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힘입어 2% 대로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19<sup>7</sup>)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1%에서 올해 2019년 2% 초반대로 성장한 것으로 장래 경제성장에 대한 예상이 매우 낙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으로 기업투자 회복과 노동시장 호조, 생산성 제고를 꼽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급감했던 기업투자가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 등에 힘입어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물가안정 추세의 지속과 관련된 연방준비제도나 주요 예측기관들은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 상승과 연계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2019년 2.6~2.7%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6~2.7%로 추정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유지되는 경제성장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sup>7</sup> 연합뉴스, 이지현 기자, 2019. 06. 02.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

중기 시계에서 2.8%~2.9%라고 추정하고 있다.

## 2)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예산을 계획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따르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제시되는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기본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 방향으로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그 세부 항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그리고 농어업 신 성장 동력 확보를 나타낸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이 높은 세출 기능별 분류를 제시한 바를 참고 하였다. 과거 선행연구들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 효과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재정투입이 지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능별 세출에 대한 해당 기능별 세출 중에서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지출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기능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여되는 대표적인 기능을 선택적으로 집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 규모로 정의하고 총 예산액 대비 비율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정의하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이 해당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기능별 예산 중분류 중에서 5개 특정 기능(교육,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의 규모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의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5개 기능별 세출 총액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일정수준( $\geq 40\%$ )을 넘어서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sup>8</sup>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 시·군 지자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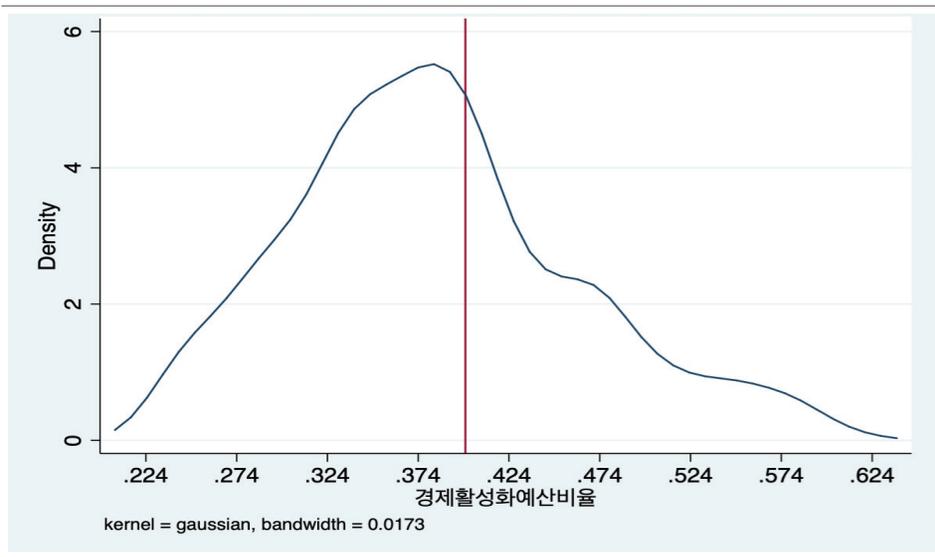
**【표 4-1】** 시·군 전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연도        | 관측치 | 평균<br>(표준편차)     | 중간값   | 왜도    | 최소    | 최대    | 40%이상<br>비율 |
|-----------|-----|------------------|-------|-------|-------|-------|-------------|
| 2008-2017 | 770 | .3827<br>(.0793) | .3768 | .4887 | .2242 | .6203 | .3597       |
| 2008      | 77  | .3737<br>(.0790) | .3586 | .6794 | .2242 | .5974 | .3247       |
| 2009      | 77  | .3963<br>(.0731) | .3882 | .3283 | .2570 | .5818 | .4675       |
| 2010      | 77  | .3871<br>(.0801) | .3783 | .4700 | .2354 | .6203 | .3506       |
| 2011      | 77  | .3750<br>(.0785) | .3691 | .4439 | .2361 | .5620 | .3117       |
| 2012      | 77  | .3704<br>(.0859) | .3718 | .4258 | .2319 | .6018 | .3247       |
| 2013      | 77  | .3776<br>(.0801) | .3668 | .5111 | .2384 | .5798 | .3377       |
| 2014      | 77  | .3814<br>(.0792) | .3694 | .5817 | .2383 | .5905 | .3377       |
| 2015      | 77  | .3924<br>(.0793) | .3891 | .5414 | .2395 | .5856 | .4026       |
| 2016      | 77  | .3876<br>(.0818) | .3777 | .6266 | .2378 | .6054 | .3636       |
| 2017      | 77  | .3857<br>(.0758) | .3834 | .4583 | .2449 | .5854 | .37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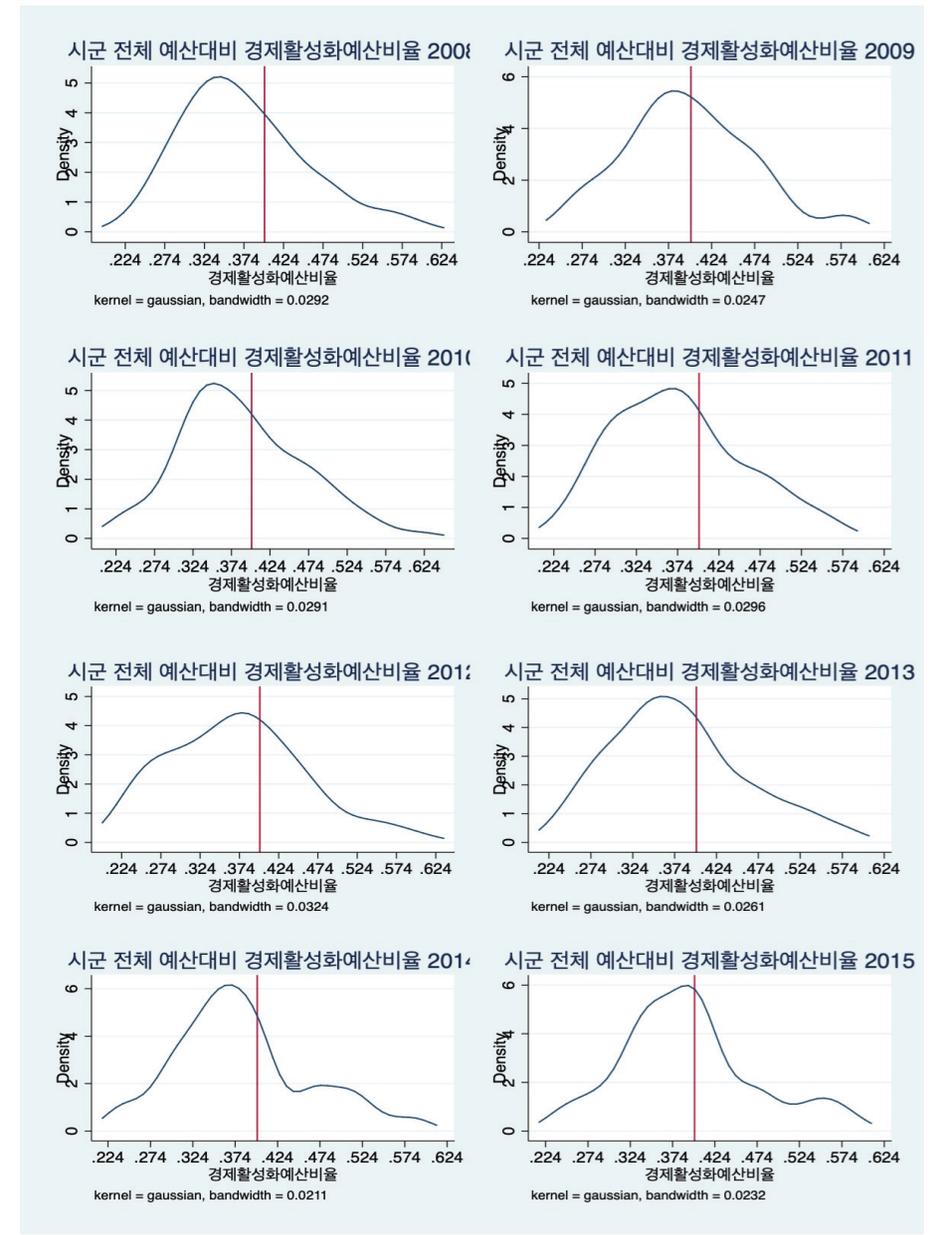
해당 권역별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총 예산액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전체 기초자치단체들(77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간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은 평균 .3827로써 최소(.2242), 최대(.6203)의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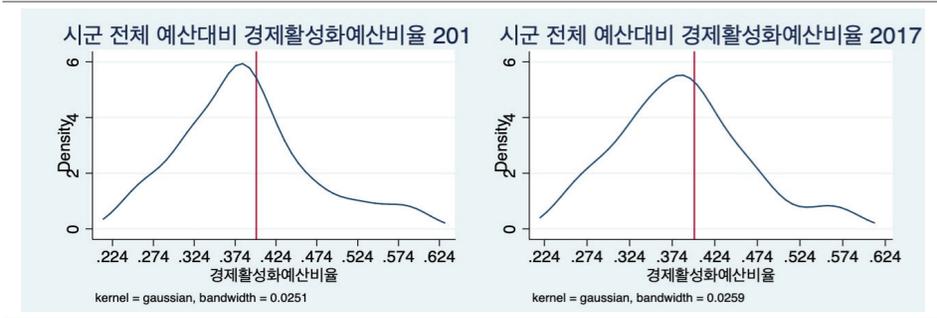
분포에서 중간값(.3768) 및 왜도(.4887)을 고려했을 때 다소간 왼쪽으로 전체 분포가 치우쳐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도별 시·군 전체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전체 예산대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 평균은 다소간 증가하여 중간값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전체 분포 상에서 비율이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비율의 40% 이상 비중도 2009년(.4675) 최고조를 보이고 이후 2015년(.4026) 이후 국가경제 침체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는 바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국가경제 침체를 방지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 지역자치단체들의 예산편성 호응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1]** 시군 자치단체 예산대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그림 4-2] 시군 자치단체 예산대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각 연도별)





### 3.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분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예산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도별로 확인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 유형의 자치단체들은 평균(.4487)이 중간값(.4400)보다 크고 분포에서 최소(.3170), 최대(.6203)가 시·군 전체 분포에서보다 더 좁게 나타난다. 왜도(.3817)를 같은 기간 전체 시·군 샘플과 비교해 볼 때, 전체 분포가 한 편으로 더욱 치우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 유형의 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이 40% 이상인 비중은 70%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군 유형 자치단체들의 해당 비율 비중이 15.14% 라는 상황에 비교하여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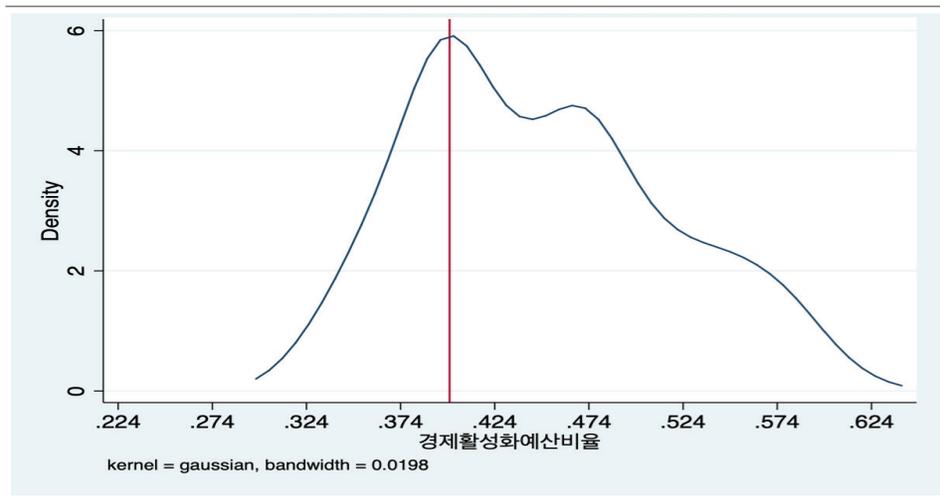
**[표 4-2]**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 연도        | 관측치 | 평균<br>(표준편차)     | 중간값   | 왜도    | 최소    | 최대    | 40%이상<br>비율 |
|-----------|-----|------------------|-------|-------|-------|-------|-------------|
| 2008-2017 | 290 | .4487<br>(.0682) | .4400 | .3817 | .3170 | .6203 | .7000       |
| 2008      | 29  | .4408<br>(.0710) | .4302 | .3980 | .3259 | .5974 | .6897       |
| 2009      | 29  | .4565<br>(.0580) | .4610 | .6042 | .3631 | .5818 | .86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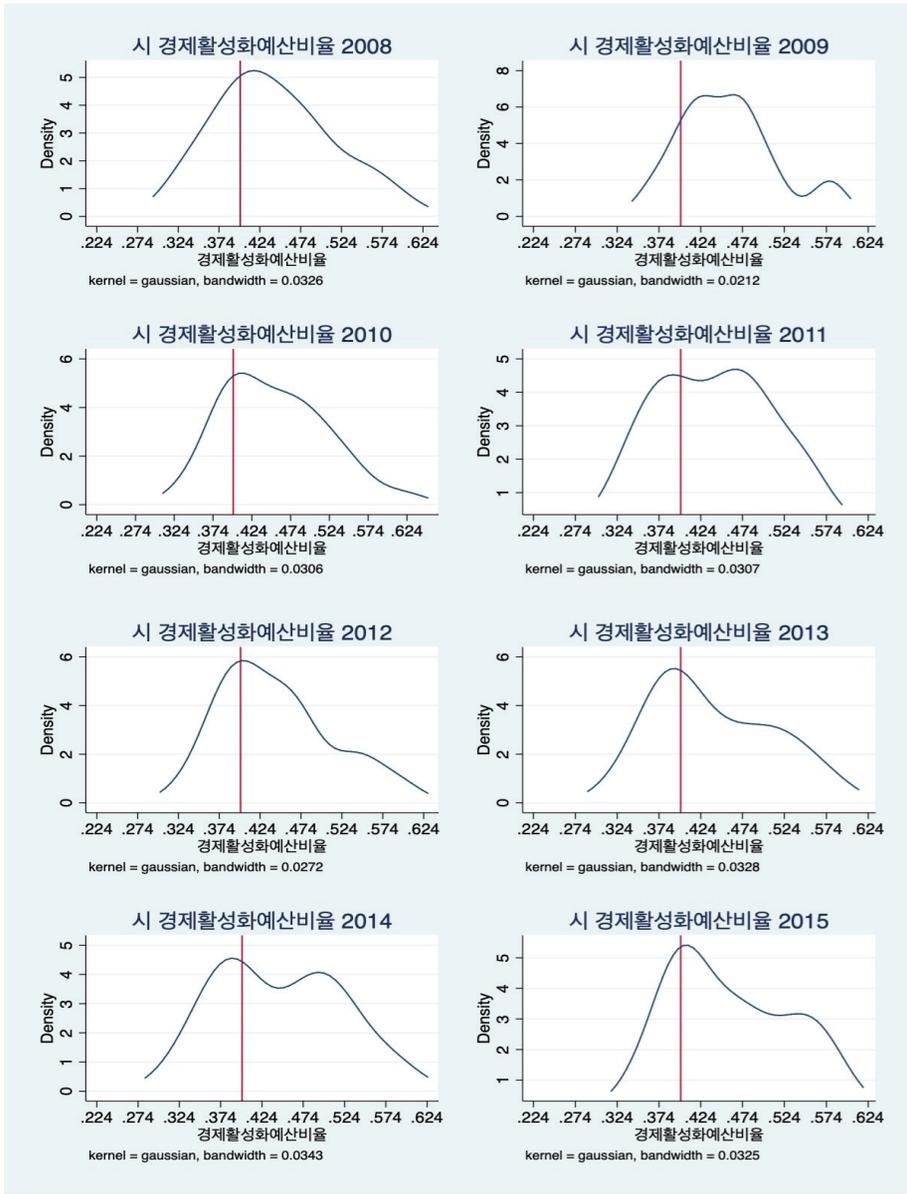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연도   | 관측치 | 평균<br>(표준편차)     | 중간값   | 왜도    | 최소    | 최대    | 40%이상<br>비율 |
|------|-----|------------------|-------|-------|-------|-------|-------------|
| 2010 | 29  | .4534<br>(.0667) | .4366 | .5148 | .3399 | .6203 | .6897       |
| 2011 | 29  | .4397<br>(.0670) | .4476 | .1148 | .3326 | .5620 | .6552       |
| 2012 | 29  | .4434<br>(.0689) | .4273 | .6103 | .3288 | .6018 | .6552       |
| 2013 | 29  | .4391<br>(.0715) | .4129 | .4237 | .3216 | .5798 | .5862       |
| 2014 | 29  | .4458<br>(.0748) | .4569 | .2020 | .3170 | .5905 | .6552       |
| 2015 | 29  | .4594<br>(.0709) | .4547 | .3485 | .3495 | .5856 | .7241       |
| 2016 | 29  | .4574<br>(.0747) | .4414 | .4188 | .3362 | .6054 | .7586       |
| 2017 | 29  | .4515<br>(.0638) | .4433 | .4475 | .3469 | .5854 | .7241       |

[그림 4-3]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그림 4-4] 시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연도별)





#### 4.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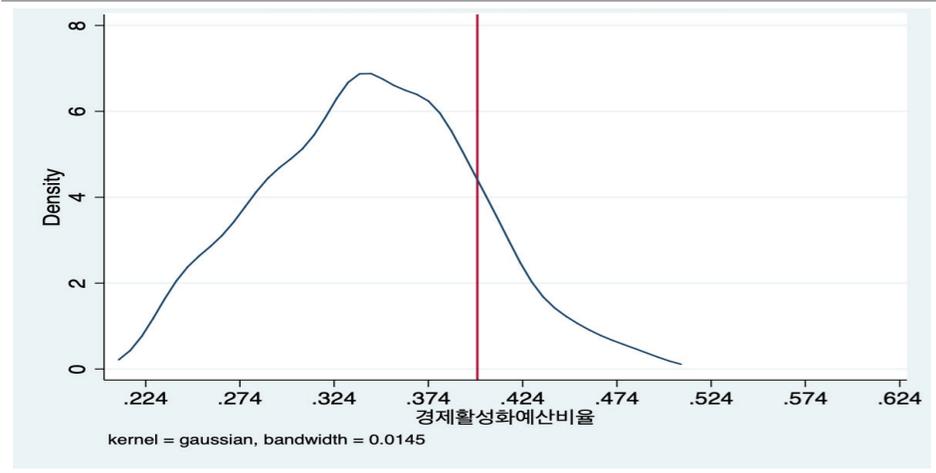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권역 내 군 유형 자치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예산비율 평균(.3429)은 중간값(.3417)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해당 전체 기간에서 비율 분포의 최소(.2242)와 최대(.4935)를 통해 전체 자치단체들의 비율분포 폭이 동일 전체 기간 시 유형 비율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왜도는 .1109를 보이며 다른 시 유형 비율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의 치우침이 많이 줄어든 형태를 보인다.

군 유형의 비율분포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비율분포의 평균과 중간값은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 비율분포 상의 왜도 통계치는 2008년(.3740)에서 2014년(-.1158)로 분포상의 편향성이 바뀌게 되고 이는 2017년(-.2325)까지 매년 점차 커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군 유형 자치단체들의 해당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규모가 증가하여 대체로 단체별로 사한 수준으로 예산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해당 비율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치단체들은 크게 많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의 유형별 재정운용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자치단체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시 유형 자치단체들보다 군 단위 자치단체들의 예산 경직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군 유형 자치단체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을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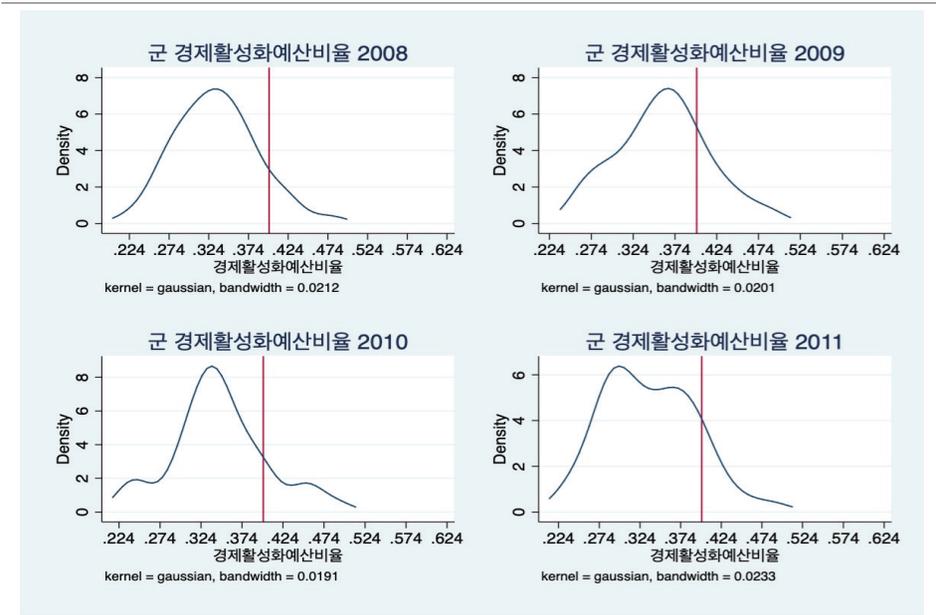
[표 4-3]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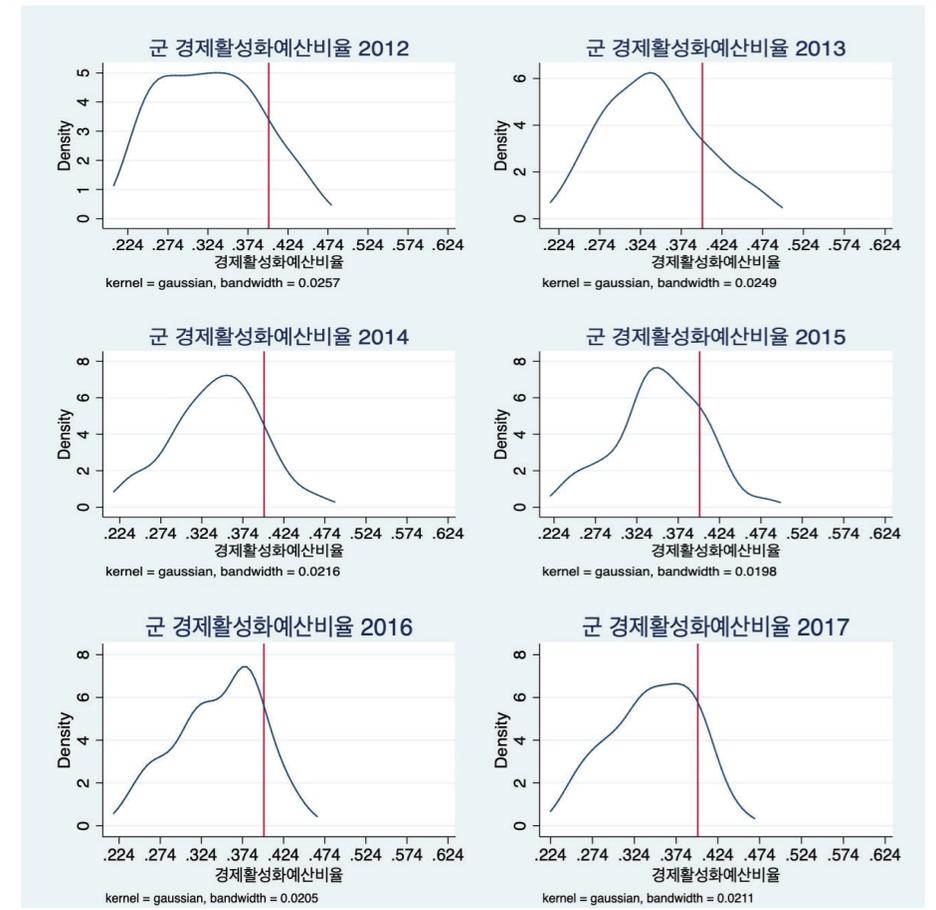
| 연도            | 관측치 | 평균<br>(표준편차)     | 중간값   | 왜도     | 최소    | 최대    | 40%이상<br>비율 |
|---------------|-----|------------------|-------|--------|-------|-------|-------------|
| 2008-<br>2017 | 480 | .3429<br>(.0553) | .3417 | .1009  | .2242 | .4935 | .1514       |
| 2008          | 48  | .3331<br>(.0512) | .3358 | .3740  | .2242 | .4766 | .1042       |
| 2009          | 48  | .3600<br>(.0552) | .3614 | .1387  | .2570 | .4922 | .2292       |
| 2010          | 48  | .3470<br>(.0579) | .3403 | .3110  | .2354 | .4935 | .1458       |
| 2011          | 48  | .3360<br>(.0561) | .3303 | .3928  | .2361 | .4880 | .1042       |
| 2012          | 48  | .3263<br>(.0619) | .3284 | .2204  | .2319 | .4525 | .125        |
| 2013          | 48  | .3405<br>(.0599) | .3400 | .3714  | .2384 | .4731 | .1875       |
| 2014          | 48  | .3425<br>(.0521) | .3433 | -.1158 | .2383 | .4642 | .1458       |
| 2015          | 48  | .3519<br>(.0522) | .3553 | -.1900 | .2395 | .4778 | .2083       |
| 2016          | 48  | .3454<br>(.0517) | .3517 | -.3040 | .2378 | .4443 | .125        |
| 2017          | 48  | .3460<br>(.0508) | .3462 | -.2325 | .2449 | .4470 | .1667       |

[그림 4-5]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2008~2017)



[그림 4-6] 군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연도별)





종합해 보면, 전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시·군 유형 자치단체 모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유형 자치단체들의 비율 분포는 군 유형 자치단체들의 비율분포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예산 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연도별 변화에서 더욱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군의 재정운용 경직성 측면의 차이가 연도별 해당 예산비율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시·군 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은 정부가 대·내외 부정적인 국

가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써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및 정책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된 방향성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이 일정수준( $\geq 40\%$ ) 이상으로 증가하는 자치단체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방재정의 경직성 예산 등과 같은 예산편성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운용 특성 및 제약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효과 추정

### 1. 분석 데이터

#### 1) 지역경제 변수

지역경제 산출(Output)을 고려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정책효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Bell et. al, 2005). 기본적으로 소득지표에 대한 사용이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효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 소득구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실질 수혜규모 등에 대한 분포상의 명확성이 낮기 때문에 사용이 제약적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성취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는 정책효과가 측정된 임금이나 성장 수치를 통하여 효과가 즉시 포함되어 나타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s)들을 활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대리변수로 추정에 사용하였다<sup>9</sup>.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영향에 따라 지역 내 세입의 증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대리변수로써 지방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지방세 수입은 해당 지역의 경제력 및 소득에 비례하다는 의미로써 고려될 수 있다(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 및 활성화에 대한 다면적인 고려를 통해 경제 발전에 대하여 다양한 변수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지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내의 주민 삶의 질이 상승하고, 지역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되며 거주환경의 개선 및 개인의 행복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대리변수로 지방세 수입을 사용하며 추가적인 지역경제 대리변수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가능성만을 제시한다.

<sup>9</sup> 이 외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대리변수로써 GRDP, 사업체 수, 고용률, 그리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들에 대해 추정을 시도하였으나,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2) 지역 범위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지역경제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투입의 결정이 어떤 수준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연구를 위해 광역시·도 규모 또는 시·군 규모에서 추정되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추정에 사용될 지역경제 규모가 지자체 규모로 설명하는 것이 유의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결정 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규모에 대한 유의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가 영향을 주로 받는 재정정책이 어느 수준의 자치단체에서 나오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재정정책은 대부분 시·도 단위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수준이 시·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에 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광역시·주를 기반으로 경제개발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Wolman and Spitzely 1996; Bell et. al. 2005). 이는 지역경제 관련 재정정책들이 주정부(State)나 지방정부들(Local Governments)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광역도시지역(Metropolitan Areas) 또는 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주로 상위단체의 자치단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단체 시·군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군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규모는 제한적이다. 박기백·김현아(2005)에서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등의 권역별 분석을 통해 인구, 지방세, 국고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지출 규모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 외에 권역별 지방재정지출 영향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 다른 권역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재정지출효과를 추정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별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전라권 및 경상권의 시·군만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투입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sup>10</sup>.

[표 4-4] 권역별 시·군 분포

| 권역별 기준       | 시·도 기준 | 단체 수 | 시  | 군  |
|--------------|--------|------|----|----|
| 전라도          | 전라북도   | 14   | 6  | 8  |
|              | 전라남도   | 22   | 5  | 17 |
| 전라도 시군별 단체 # |        | 36   | 11 | 25 |
| 경상도          | 경상북도   | 23   | 10 | 13 |
|              | 경상남도   | 18   | 8  | 10 |
| 경상도 시군별 단체 # |        | 41   | 18 | 23 |
| 총 개수         |        | 77   | 29 | 48 |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전라·경상) 7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자체별 총예산에서 지역경제 관련 주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재정지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크게 지역경제 변수들과 지역경제활동 영향을 받는 인구조사 관련 변수들 그리고 각 시군의 기능별 세출 예산액이 포함된 정부통계 등으로 구성이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주로 통계청 및 지방재정365에서 발표되는 시군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조사대상이 가구별 조사로써 지방통계청을 통해 샘플을 수집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고용정책 설립에 필요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하고 있다.

사용되는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기간의 시·군 단위 통계청 발표 지역별고용조사를 사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현황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

<sup>10</sup> 연구의 대상을 일반 시·군으로 제한한 것은 비교적 자치단체의 규모나 역할에 있어서 시·군 계층별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 표본수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고용조사를 사용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생산할 수 없는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요 고용현황 외에 다양한 부가항목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데이터 활용 결정에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방재정지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관련 변수는 종속변수로서 지방세수입과 전년도 대비 GRDP 증가율 개선 여부(>0)를 사용하였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365 공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개선여부(>0) 및 연도별 지자체 전체 등록 사업체 수 개선여부(>0)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365 공시 기능별 세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각 시·군의 기능별 세출 예산액이 포함된 정부통계를 통해 전체 예산액 대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지역경제활성화비율)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4-5] 주요 변수 요약 통계(2008-2017년)

| 변수   | 전체                     |           |          | 시                      |          |          | 군                      |           |          |
|--|------------------------|-----------|----------|------------------------|----------|----------|------------------------|-----------|----------|
|  | 평균<br>(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평균<br>(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평균<br>(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지방세 수입                                     | 6.22e+07<br>(9.52e+07) | 2,102,567 | 7.42e+08 | 1.34e+08<br>(1.25e+08) | 1.80e+07 | 7.42e+08 | 1.90e+07<br>(1.49e+07) | 2,102,567 | 8.91e+07 |
| L1. '지역경제활성화 <sup>11</sup><br>비율 ≥ 40%' =1 | .3597<br>(.480)        | 0         | 1        | .7<br>(.459)           | 0        | 1        | .1542<br>(.361)        | 0         | 1        |
| L1. '△GRDP 성장률(g)<br>>0' =1                | .6494<br>(.477)        | 0         | 1        | .6517<br>(.477)        | 0        | 1        | .6479<br>(.478)        | 0         | 1        |
| L1. '△생산가능인구<br>(15-64) >0' =1             | .1<br>(.300)           | 0         | 1        | .1<br>(.300)           | 0        | 1        | .1<br>(.300)           | 0         | 1        |
| L1. '△사업체 수 >0' =1                         | .7974<br>(.402)        | 0         | 1        | .8448<br>(.363)        | 0        | 1        | .7688<br>(.422)        | 0         | 1        |
| 기간(T)                                      | 10                     |           |          | 10                     |          |          | 10                     |           |          |
| 단체 수(n) <sup>12</sup>                      | 77                     |           |          | 29                     |          |          | 48                     |           |          |
| 관측치수(N)                                    | 770 <sup>13</sup>      |           |          | 290                    |          |          | 480                    |           |          |

주석: 괄호 안은 표준편차

11 해당 주요변수들을 사용하여 Logit Regression 추정 결과: “지역경제활성화비율≥40”를 설명하기 위해 GRDP성장률(g) 개선여부(>0), 생산가능인구(15세- 64세) 개선여부(>0), 지역 내 사업체 수 개선여부(>0), 지역고정효과 및 시간고정효과 사용하여 Logit 추정을 실시한 결과 설명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추정되지 않았음

12 호남·경상권역별 시·군을 대상으로 함

기능별 세출 분류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연도별 시·군 최종예산 결산, 부문별세출, 순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재정지출의 기능분류의 목적은 정부 역할의 수행 영역 구분의 기준과 목적이 국가정책방향과 부합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 간 기능 분류를 일원화 하였다. 재정지출의 기능별 분류가 2008년 이후 사업 부문별 구분으로 개편 되어 기능별 예산과목구조가 개편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GRDP의 경우, 2017년 자료 부재로 인하여 한 해치 자료 누락되었으나 GRDP 성장률의 경우 연구 설계 과정에서 전년도 설명변수로 활용되므로 관측치 부족으로 인한 추정상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재정지출 지표를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5개의 기능변수(교육,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물론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은 직접적인 정책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간접비 또는 유지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별회계가 없고, 특별히 이들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출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지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2. 평균처리효과(ATE)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전라·경상) 7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자체별 총예산에서 지역경제 관련 주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지역

<sup>13</sup> GRDP 관측치수는 시군 전체에 대하여 693이다. (9년 기간) 시에 대하여 전체 관측수는 261개, 군 전체 관측수는 432개이다.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은 자치단체의 총 예산에서 교육,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 비중을 의미한다.

성향점수 매칭법(P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 이라고 칭한다)은 관측 데이터(Observational Data)를 사용하여 특정처리(Treatment)에 대한 효과를 통해 유사 대상이 잠재적으로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결과물들(Outcomes)이 발생하는 확률적 분포를 추정하고 해당 결과물들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평균처리효과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sup>14</sup>. 여기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라고 칭한다)<sup>15</sup>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D)에 대한 추정 값을 의미한다. 또한 ATE는 사전적 의미로써 모집단에서 무작위적(Randomized)으로 샘플을 추출하여 특정 조치 과정을 거친 기대효과로 정의된다. ATE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Heckman(1997), Angrist·Imbens·Rubin(1996), Imbens·Angrist(1994) 등은 ATE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1)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모형

PSM을 사용한 ATE 추정방법은 Rosenbaum and Rubin(1983)에서 처음 소개 되었으며 이후 (Dehejia and Wahba, 1999)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ATE를 추정할 경우 처리에 대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편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추정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 야기 되었다(Self Selection Bias). PSM을 사용한 ATE 추정방법의 장점으로는 위와 같이 ATE 추정방식에서 야기되는 Self Selection Bias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Becker·Ichino, 2002; Wooldridge, 2002). 국내에서도 근래에 들어 손병돈(2011), 유경준·강창희(2010), 주은수(2015)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PSM 추정법을 소개하였다. PSM 추정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sup>16</sup>.

<sup>14</sup> 본 연구의 경우 지방재정지출을 해당 처리(Treatment)로 하고, 산출물은 지역경제 산출 지표로 한다.

<sup>15</sup> 변역의 차이로 평균처리효과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sup>16</sup> PSM 추정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senbaum and Rubin(1983) 또는 이후에 나온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길 바란다.

$y_1$ 을 특정 처리(Treatment:  $D=1$ )를 통한 산출물이라고 하고,  $y_0$ 를 특정 처리를 경험하지 않은( $D=0$ ) 산출물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특정 처리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TE = E(y_1 - y_0)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여기서 처리과정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처리 과정에 적용가능하고(eligible) 실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처리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처리과정 적용 대상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E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TE \equiv E(y_1 - y_0 | D = 1)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왜냐하면,

$$\because y_0 = \mu_0 + \nu_0 \text{이고, } y_1 = \mu_1 + \nu_1 \text{ 이며}$$

여기서  $g = 0, 1$ 에 대하여, 각각  $\mu_g = E(y_g)$ 를 나타낸다.

$$y_1 - y_0 = (\mu_1 - \mu_0) + (\nu_1 - \nu_0) = ATE + (\nu_1 - \nu_0)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그러므로

$$\therefore ATE = ATE + E(\nu_1 - \nu_0 | D = 1) \quad \langle \text{식 4} \rangle$$

여기서  $\nu_1 - \nu_0$ 는 처리과정 참여에 대한 각 샘플 고유의 개별 수혜라고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각 샘플의 개별 수혜에 대한 기대효과가 0 이라면  $E(y_0 | D) = E(y_0)$  그리고  $E(y_1 | D) = E(y_1)$ 라고 할 수 있으며<sup>18</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y_0, y_1) \perp D$  이므로 ATE 와 ATET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성향점수(PM)는 처리전 특성들(Pre-treatment characteristics)에 의해 해당 처리를 받을지 결정되는 조건부 확률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Rosenbaum·Rubin(1983). Becker·Ichino(2002)).

<sup>17</sup> Wooldridge(2002), Becker·Ichino(2002) 참조

<sup>18</sup> 이는 Mean Independence Assumption 라고 정의한다, Wooldridge(2002) 참조

$$P(X) \equiv \Pr(D = 1|X) = E(D|X) \quad \langle \text{식 5} \rangle$$

$D = \{0, 1\}$  는 처리를 받는지( $D=1$ ) 안 받는지( $D=0$ )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X$ 는 처리전 특성들(pre-treatment characteristics)에 대한 벡터를 의미한다.<sup>19</sup> 만약 처리과정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X$ 에 의해 정의된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시 일차원적인 변수  $p(X)$ 에 의한 가치들에 의해 정의된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만약 성향점수(PM)  $p(X_i)$ 가 알려져 있다면, 지자체  $i$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모집단에서, 실제 처리과정 적용 대상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 ATET)는 아래와 같이 예측될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Becker·Ichino, 2002).

$$\begin{aligned} ATET &\equiv E\{Y_{1i} - Y_{0i} | D_i = 1\} \\ &= E[E\{Y_{1i} - Y_{0i} | D_i = 1, p(X_i)\}] \\ &= E[E\{Y_{1i} | D_i = 1, p(X_i)\} - E\{Y_{0i} | D_i = 0, p(X_i)\} | D_i = 1] \end{aligned}$$

처리전 특성들의 균형에 따라 성향점수(PM)가 주어진다. 만약  $p(X)$ 가 성향점수(PM)이라면  $D \perp X | p(X)$  이다. 이는 또한 주어진 성향점수(PM)하에서 조치 전 특성들과 조치가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처리를 받는지 지정하는 바가 섞이지 않았다면,  $Y_1, Y_0 \perp D | X$ , 처리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 주어진 성향점수(확률)와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Y_1, Y_0 \perp D | p(X)$ ) (Imbens, 2000).

## 2)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전라·경상) 7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자체별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향점수 매칭법(PSM)을 적용해 추정해 보았다.

<sup>19</sup>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GRDP 성장률, 전년도 생산가능인구수, 전년도 사업체수, 지역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표 4-6]** 지역경제(지방세수입)에 대한 재정지출효과 추정(PSM)

| 구분                           | 시·군                      | 시                         | 군                        |
|------------------------------|--------------------------|---------------------------|--------------------------|
| ATE:<br>'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 ≥ 40%'  | 1.01e+08***<br>(7554739) | 1.14e+08***<br>(1.17e+07) | 1.80e+07***<br>(4502442) |
| ATET:<br>'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 ≥ 40%' | 1.06e+08***<br>(8497720) | 1.11e+08***<br>(1.12e+07) | 1.74e+07***<br>(2751984) |
| 지역 고정효과                      | 권역별                      | 권역별                       | 권역별                      |
| 시간 고정효과                      | 연도별                      | 연도별                       | 연도별                      |
| Obs. #                       | 693                      | 261                       | 432                      |

주석: 괄호 안은 Robust St. Error를 의미함.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1% 이내를 의미함. 해당 추정을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함. 지역 고정효과는 권역별(전라도와 경상도)을 사용하였고, 시간 고정효과는 연도를 사용. '지역경제활성화예산비율'의 정의는 본문 설명에서 확인 가능함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 시계열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균처리효과(ATE) 추정 결과 해당 권역별(전라·경상) 전체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을 때(40% 이상; 이하 같음) 지방세 수입이 1,01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처치의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처리의 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f Treated: 이상 ATET)의 경우, 경상도 전라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이 1,06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권역별(전라·경상) 전체 29개 시를 대상으로, 평균처리효과(ATE) 추정 결과, 전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이 1,14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TET의 경우, 권역별(전라·경상) 전체 시를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이 1,11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처리효과(ATE) 추정 결과, 권역별(전라·경상) 전체 48개 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은 18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TET의 경우, 권역별(전라·경상) 전체 시를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이 174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시 유형 자치단체들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E) 추정치와 ATET 추정치가 군 유형 자치단체들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E) 추정치와 ATET 추정치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각 시·군 유형별 자치단체들의 추정치에 대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는 시 유형의 자치단체들이 군 유형 자치단체들보다 예산규모 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시 유형 자치단체들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유형 자치단체들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추정해서 보인다는 의미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유형별 자치단체들의 추정치에 대해 각 시 유형 및 군 유형 자치단체 별도로 분리해서 추정하고 각 유형별 자치단체들 내에서 자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여 그 추정치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제3절 시사점

제4장은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여되는 대표적인 기능을 선택적으로 집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규모로 정의하였다. 또한 총 예산액과 비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 비율을 경제활성화 예산비율로 사용하였다. 분류를 통해 살펴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연도별로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 유형별, 연도별 차이를 시군 자치단체, 시 자치단체 및 군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각 밀도함수와 통계적 특성을 요약한 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치단체 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이 특정 비율을 넘었을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추정을 시도하였다. 평균처리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모형을 적용하여 제시한 지방재정지출 효과추정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전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비율이 40% 이상일 때 지방세 수입이 평균 1,010억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내년도 자체재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적극적 재정집행이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재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단, 경제활성화예산 비율의 분류와 이러한 비율의 문턱 기준(threshold)을 40%로 설정한 것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분류항목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지자체의 자체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고 및 하달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것은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 제5장



#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

제1절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

제2절 시도의 산업별 고용 구조 분석

제3절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시도 자치단체별로 고용구조의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각각 시도의 경기변동이 전국 공통요인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지만, 시도 고유 충격의 크기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임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연구에서 설정한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음연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움직임의 상이성과 지방재정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지역의 고유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지출이 단년도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의 시사점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의 경우에도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별로 적극적 재정투입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여지를 남긴다.

제5장에서는 먼저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분석을 위하여,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및 1인당 급여 지표를 위주로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산업별 고용지표를 시도별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시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도출하도록 한다.

## 제1절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

### 1. 분석의 목적

여기서는 지역별로 산업별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산업별 고용구조 혹은 요소 집약도를 파악하여, 향후 고용정책이 어느 산업에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절의 분석의 목적이 있다.

각 산업별로 노동집약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관련 지표로서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1인당급여액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 1단위당 자본장비율 데이터를 구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노동 투입량 통계는 쉽게 구득이 가능하나, 추정을 통해 추계되는 각 연도별 자본 스탁(stock)은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동집약도를 우회적으로, 현재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제총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총괄'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에 언급한 4가지 지표를 분석하였다.

먼저 업체당 종사자 수는 기업의 규모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노동집약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업체당 매출액은 대체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업체당 매출액이 크고 종사자가 많으면 기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수와 매출액의 규모를 이용하여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를 구하였다.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는 특정 산업이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노동을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의미하므로, 노동집약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1억 원당 종사자수가 많은 산업이면,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노동을 고용할 흡수 능력도 큰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고용정책의 목표가 고용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면, 고용능력이 큰 산업을 겨냥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현재의 고용 상태가 시장균형 상태라고 가정

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고용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불균형 상태인 산업을 찾든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된다. 한편 현재의 고용 현황이 균형 상태라면, 지방정부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 등의 방법이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책 목표가 해당 지자체의 장기적 경제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면, 노동과 자본의 적절한 조합을 기업들이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성장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통해서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분류해내고, 그 산업에 집중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면, 그 산업에는 고용된 노동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기술교육, 재교육 등의 지원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산업 분류별 고용구조의 분석

[표 5-1]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br>종사자수 | 업체당<br>매출액 | 1억 원당<br>종사자수 | 1인당<br>급여 |
|-------------------------|-------------|------------|---------------|-----------|
| 전 산업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22.7       | 242.6      | 91.8          | 113.0     |
| 광업                      | 144.8       | 138.7      | 104.4         | 127.0     |
| 제조업                     | 181.2       | 298.5      | 60.7          | 129.5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710.1       | 5,530.0    | 12.8          | 241.4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97.2       | 152.2      | 129.6         | 128.5     |
| 건설업                     | 182.6       | 186.7      | 97.8          | 134.1     |
| 도매 및 소매업                | 57.2        | 79.9       | 71.5          | 69.0      |
| 운수업                     | 53.6        | 34.6       | 154.9         | 75.9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3        | 12.3       | 449.7         | 32.3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46.1       | 247.1      | 99.6          | 150.5     |
| 금융 및 보험업                | 327.1       | 1,317.4    | 24.8          | 153.2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br>종사자수 | 업체당<br>매출액 | 1억 원당<br>종사자수 | 1인당<br>급여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6.7        | 53.0       | 125.8         | 72.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79.9       | 128.9      | 139.6         | 123.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384.5       | 84.3       | 455.9         | 88.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32.0     | 623.0      | 165.6         | 187.3     |
| 교육서비스업                   | 165.0       | 47.7       | 345.6         | 123.8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10.3       | 59.8       | 351.7         | 95.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67.3        | 31.6       | 213.4         | 53.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4.3        | 10.7       | 415.6         | 48.0      |

자료: 통계청, 2015년 경제총조사. 전 산업 평균을 100으로 두고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당 종사자, 업체당 매출, 1억 원당 종사자 및 1인당 급여를 표시

위의 표는 전국의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들을 나타낸다. 먼저 전 산업의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1인당 급여의 평균을 산출하고, 각 산업별로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를 위해 전 산업 평균값을 100으로 표시하였다. 각 지표별로 평균대비 몇 배의 상대적인 업체별 종사자수,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지 상대적인 크기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분석된 지표를 토대로 산업별 고용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들은 매출액(1 억원)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평균에 비해 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1억 원당 종사자수의 지표값이 갖는 의미는 특정 산업에서 1억원의 매출당 종사자수가 전체 산업들의 평균보다 크면, 노동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보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는 산업 대분류의 순서별로 표시된 지표의 값을 각 지표별로 순위별 정렬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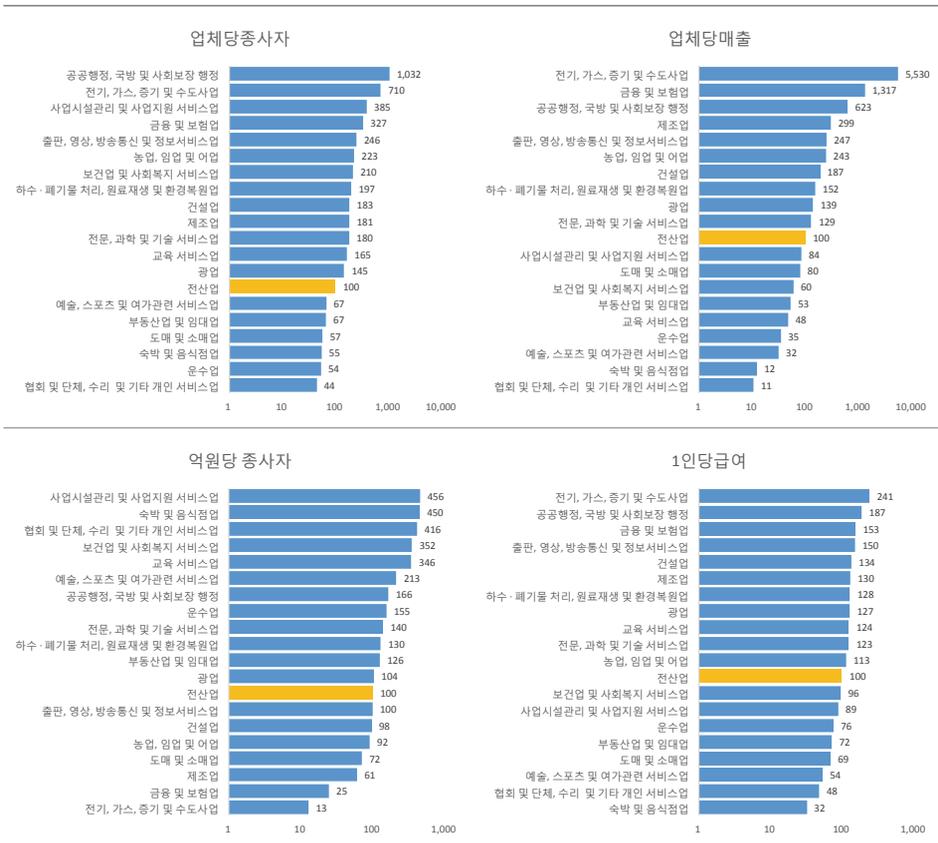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운수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광업 등의 순이다.

한편 1억 원당 종사자수 기준에 의해 고용효과가 가장 낮은 산업은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제조업 등의 순이다.

대체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초기 투자의 규모가 큰 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주로 3차 서비스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5-1]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비교



자료: 통계청, 2015년 경제총조사. 전 산업 평균을 100으로 두고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당 종사자, 업체당 매출, 1억 원당 종사자 및 1인당 급여를 표시하였으며, 그래프의 축은 로그 스케일을 적용함.

### 3. 산업별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고용지표의 산업분류별 결과와 시사점을 아래표로 요약하였다. 1억 원당 종사자수의 지표값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서 1억원의 단위 매출을 증가시킬 때 종사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산업들의 평균보다 크면, 노동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해석하였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의 경우 정책적 수단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 단위 비용 당 고용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표 5-2]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 요약**

| 산업대분류       | 고용지표   | 시사점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2.2배임. 업체당매출액이 전 산업 평균 대비 2.4배 수준이므로 매출액 대비 고용이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li> <li>- 이는 1억 원당 종사자수에서 확인할 수 있음. 1인당급여는 전 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을 다소 하회하고 있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은 아닌 것으로 측정됨. 다만, 업체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종사자수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함</li> </ul> |
| 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1.4배임. 업체당매출액은 평균 대비 1.4배 수준임</li> <li>- 업체당 종사자수가 많은 편이나, 이 산업이 노동집약적이어서가 아니라 평균보다 큰 기업규모에서 비롯된 일임. 1인당 급여는 전 산업 평균보다 30% 정도 높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서 고용효과가 평균 이상인 산업임. 해당 분야의 1인당 급여액이 높은 편이어서 고용 확대에 드는 비용은 다소 클 것임</li> </ul>               |
| 제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는 전 산업 평균의 1.8배임. 업체당매출은 평균 대비 3.0배 수준임</li> <li>- 업체당매출에 비해 종사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임. 원당종사자수가 0.6정도로서 다른 분야 대비 고용이 저조한 편으로 보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당종사자가 평균의 0.6에 불과하여 고용효과가 낮은 편인데, 1인당급여는 평균의 1.3배여서 고용정책 시행이 곤란한 분야임. 고용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li> </ul>            |

| 산업대분류                    | 고용지표  | 시사점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7배로서 매우 높음. 업체당매출액은 산업 평균의 55배로 매우 큼. 투자규모가 매우 큰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독점적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 결과임.</li> <li>- 업체당 종사자수가 많으나 업체 규모가 크기 때문이지, 결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아님. 이런 성격을 반영하여 1억 원당 종사자수는 매우 낮은 값을 보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가스 등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독점산업들을 포함하는 산업임. 자본집약적 공기업들이 여기에 속함. 고용효과는 매우 낮은 편이며, 1인당급여도 전 산업 평균의 2.4배에 달하여 고용 증대를 위한 비용도 높다고 할 수 있음</li> </ul>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는 전 산업 평균의 2배임. 업체당매출액은 평균의 1.5배로서 고용 효과가 높은 편임.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산업평균의 1.3배 수준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대비 고용효과 있는 편임. 1인당급여는 평균대비 1.3배 수준임.</li> <li>- 고용효과가 있으므로 고용정책을 시행할 만한 분야이나, 고용에 따른 비용은 다소 높은 편임</li> </ul>                                    |
| 건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평균의 1.8배임. 업체당매출은 평균의 1.8배임. 따라서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에 가까운 수준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산업평균 대비 비교적 큰 편이나, 이는 노동집약적 기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규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li> <li>-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임. 고용에 따른 비용은 평균대비 다소 높은 편임</li> </ul> |
| 도매 및 소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는 산업평균 대비 0.6수준으로 낮은 편임. 업체당매출액은 0.8수준으로 역시 적은 편임.</li> <li>-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산업평균 대비 0.7 수준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대비 종사자 규모가 작은 편이나, 업체 규모가 작은 점과 노동집약적 기술이 아닌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나, 고용 비용은 평균의 0.7 수준으로 낮음.</li> </ul>                                     |
| 운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는 전 산업 평균 대비 0.5로서 매우 낮은 편임. 업체당매출액은 0.3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li> <li>-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1.5로서 높은 편임. 따라서 업체당 종사자가 적기는 하나 노동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산업으로 판단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매출액규모가 매우 작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됨.</li> <li>-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이며, 1인당급여가 평균대비 0.8수준이어서 고용비용도 높지 않은 산업임</li> </ul>         |
| 숙박 및 음식점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는 전 산업 평균 대비 0.6으로 적은 수준임. 업체당매출은 전 산업평균의 0.1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상태임.</li> <li>- 1억 원당 매출액은 산업평균 대비 4.5 수준으로 매우 높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매출액 대비 종사자가 매우 많은 산업으로서 고용효과 큰 편임. 고용비용도 산업평균의 0.3에 불과한 수준임</li> </ul>  |

| 산업대분류                  | 고용지표  | 시사점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2.5배로 매우 많음. 업체당매출은 전 산업 평균의 2.5배로 매우 큰 규모임.</li> <li>- 이에 따라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과 같은 수준임. 즉 업체당 종사자수가 큰 산업인 바, 고용이 많은 이유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가 아니라 기업규모가 큰 데서 비롯된 것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고용은 많은 편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님.</li> <li>- 고용효과는 평균 수준이며, 업체규모와 고용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고용정책을 시행할 만한 분야임.</li> <li>- 고용증대시 고용비용은 전 산업 평균의 1.5배 수준으로서 높은 편임</li> </ul>                     |
| 금융 및 보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3.3배로 많은 수준임. 업체당 매출은 평균의 13.2배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이는 금융보험업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li> <li>-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0.2에 불과하여 고용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측정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은 업체 규모가 커서 종사자수 및 매출액이 공히 크게 나오는 산업임. 특히 업체당 매출액이 매우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매우 낮은 값을 보임.</li> <li>- 따라서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1인당급여는 전 산업 평균의 1.5배 수준으로서 고용증가의 소비비용도 큰 것으로 보임</li> </ul>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별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0.7수준임. 업체별 매출액은 전 산업 평균의 0.5 수준임. 업체별 종사자수가 적은 것은 이 산업의 업체 규모가 작은 점에서 비롯된 것임.</li> <li>- 1억 원당 종사자수 지표는 1.3수준으로서 업체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는 고용을 많이 하는 편으로 이해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3으로 기업체 규모는 작으나 고용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서 고용증대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용효과는 다소 높은 편임.</li> </ul>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1.8배임. 업체당매출액은 전 산업 평균의 1.3배임.</li> <li>- 업체당 종사자가 많은 이유는 업체 규모가 큰 점과 노동집약적 특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4로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규모로 보아 업체당 규모가 평균 이상이며,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고용효과 있는 편임. 1인당급여는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다소 높은 편임</li> </ul>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평균의 3.8배 수준으로 높은 편임. 업체당 매출액은 0.8로서 평균에 미달하는 작은 규모임.</li> <li>- 이 산업은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이나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산업평균의 4.6배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은 작으면서 종사자수는 많아 고용효과 큰 산업임. 1인당급여 수준은 평균 대비 0.9로서 고용증대의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됨</li> </ul>   |

| 산업대분류                    | 고용지표   | 시사점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문에 해당하는 산업임. 업체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10.3배임. 업체당 매출은 6.2배임.</li> <li>- 업체당 고용이 많은 이유는 업체당규모가 큰 점과 노동집약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임. 1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대비 1.7배로 나타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문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짐.</li> <li>- 고용효과 클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부문의 확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됨. 또한 1인당급여 수준도 전 산업 평균의 1.9배로 매우 높은 수준임</li> </ul> |
| 교육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1.7배임. 업체당매출액은 전 산업 평균 대비 0.5배임.</li> <li>- 1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의 3.5배에 이르러 고용효과가 큰 편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매출액을 볼 때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업체당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판단됨. 1인당급여는 전 산업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높은 편임</li> </ul>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2.1배로 높은 수준임. 업체당매출액은 평균 대비 0.6으로 낮은 편임.</li> <li>- 업체 규모가 작은 편이면서도 고용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간주됨.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3.5배로 높은 수준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이나, 고용효과는 큰 편임. 1인당 급여는 거의 전 산업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고용증대의 비용도 크지 않음</li> </ul>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대비 0.7로서 적은 편임. 업체당 매출액은 전 산업 평균 대비 0.3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임.</li> <li>- 이에 따라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측정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모가 영세한 편이나, 종사자수는 다소 많은 편이어서 고용효과가 있음.</li> <li>-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5수준으로 고용증대의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li> </ul>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0.4로서 낮은 편임. 업체당 매출액은 전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낮은 0.1에 불과함.</li> <li>-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 산업 평균의 4.2배로 매우 높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나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 고용효과가 매우 크며 1인당급여도 평균의 0.5배에 불과하여 고용증대 비용도 낮은 편임</li> </ul>                            |

## 제2절 시도의 산업별 고용 구조 분석

앞에서는 전국의 19개 산업 대분류별로 산업의 노동집약적 여부, 고용효과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5년 단위의 사업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공표되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는 시도별 산업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산업별 노동집약도를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산업별 특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되, 19개 산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전국적 산업분석에서 제기되었던 결과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시도별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기본적으로 매출액 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조지표로는 해당 산업의 기업규모를 보기 위해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을 함께 고려한다.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종사자수가 많은 산업인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매출액이 큰 편인지를 보고자 함이다.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인당 급여는 해당 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일이 용이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정부가 해당 산업 고용 증대에 대해 직접 보상한다고 가정할 때, 보상 규모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가령 서울시의 고용 구조를 분석하고자 할 때 먼저 서울시의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 대비 고용효과 큰 산업을 파악하는 것이 또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분석 지표별로 각 시도의 전국 대비와 시도의 전 산업 평균 대비 지표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 1. 서울특별시

**[표 5-3] 서울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15.5    | 115.5   | 144.2   | 144.2   | 80.1       | 80.1    | 112.8  | 112.8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40.5    | 535.7   | 430.5   | 1,044.2 | 55.9       | 51.3    | 268.2  | 303.1   |
| 광업                      | 38.4     | 55.6    | 19.4    | 27.0    | 197.6      | 206.3   | 81.6   | 103.6   |
| 제조업                     | 47.3     | 85.7    | 22.4    | 66.8    | 211.4      | 128.3   | 61.4   | 79.5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66.1    | 1,179   | 164.7   | 9,105   | 100.9      | 13.0    | 102.4  | 247.1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36.3    | 268.9   | 92.0    | 140.1   | 148.1      | 191.9   | 96.4   | 123.9   |
| 건설업                     | 161.2    | 294.3   | 265.9   | 496.5   | 60.6       | 59.3    | 140.7  | 188.6   |
| 도매 및 소매업                | 126.2    | 72.2    | 177.7   | 142.0   | 71.0       | 50.8    | 141.0  | 97.2    |
| 운수업                     | 103.5    | 55.4    | 167.5   | 57.9    | 61.8       | 95.7    | 123.9  | 94.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7.0    | 70.2    | 151.6   | 18.6    | 83.8       | 376.8   | 136.6  | 44.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0.5    | 271.8   | 111.3   | 274.9   | 99.3       | 98.9    | 99.3   | 149.5   |
| 금융 및 보험업                | 149.0    | 487.4   | 253.2   | 3,335   | 58.9       | 14.6    | 140.6  | 215.4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1.8    | 81.3    | 128.3   | 68.0    | 94.9       | 119.4   | 117.0  | 84.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14.7    | 206.3   | 114.1   | 147.1   | 100.5      | 140.3   | 107.3  | 132.5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47.7    | 568.0   | 151.6   | 127.8   | 97.5       | 444.4   | 101.7  | 90.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90.4    | 1,965   | 157.3   | 979.9   | 121.1      | 200.6   | 102.3  | 191.5   |
| 교육서비스업                  | 114.0    | 188.1   | 122.5   | 58.5    | 93.1       | 321.7   | 97.7   | 121.0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6.4    | 223.9   | 131.9   | 78.9    | 80.7       | 283.8   | 115.9  | 111.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8.0    | 72.7    | 142.5   | 45.0    | 75.8       | 161.6   | 116.2  | 62.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25.4    | 55.5    | 149.1   | 15.9    | 84.1       | 349.6   | 116.9  | 56.1    |

서울시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제시된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서울시의 전 산업의 업체당종사자수는 전국의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115.5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들의 업체당 종업원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아서, 서울의 기업체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전 산업의 업체당 매출액 평균에 비해 44% 정도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표에서, 전국대비 지수는 서울시 해당 산업 지표값의 전국에서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전 산업대비 지수는 서울시 해당산업 지표값의 전국 전체 산업 평균에 비교한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서울시의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의 8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급여는 전국 전 산업 평균 대비 13% 정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서울의 기업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출액이 많고, 종사자수도 많은 편이었으며, 동일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종사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보다 1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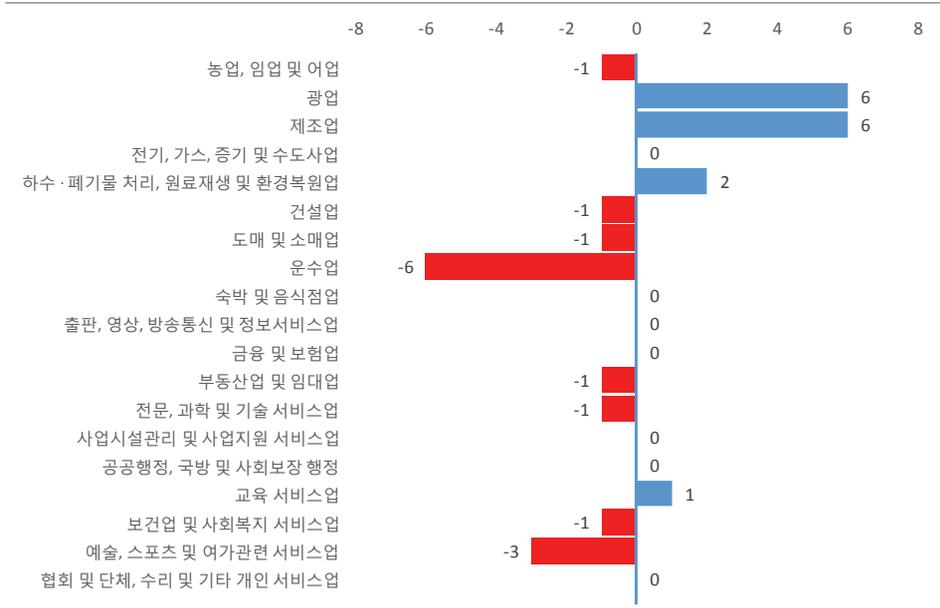
제시된 표에서 전국대비지수는 서울시 해당산업의 해당지표값이 전국 해당산업의 해당지표(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한 값을 의미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업체당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지수는 240.5인데, 서울시의 이 산업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국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업체당 종사자수 평균에 비해 2.4배 정도 크다는 의미이다. 이 산업의 업체당종사자수의 전 산업 지수는 535.7인데, 이는 서울의 지표값이 전국 전 산업의 업체당종사자수 평균<sup>20</sup>에 비해 5.357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sup>20</sup> 전국 전 산업 업체당 종사자수 평균은 5.4명임

[표 5-4] 서울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서울         |    | 순위<br>변동 |
|--------------------------|-------------|----|------------|----|----------|
|                          | 억 원당<br>종사자 | 순위 | 전 산업<br>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80.1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51.3       | 16 | -1       |
| 광업                       | 104.4       | 12 | 206.3      | 6  | 6        |
| 제조업                      | 60.7        | 17 | 128.3      | 11 | 6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3.0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91.9      | 8  | 2        |
| 건설업                      | 97.8        | 14 | 59.3       | 15 | -1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50.8       | 17 | -1       |
| 운수업                      | 154.9       | 8  | 95.7       | 14 | -6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376.8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98.9       | 13 | 0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14.6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19.4      | 12 | -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40.3      | 10 | -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44.4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200.6      | 7  | 0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21.7      | 4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283.8      | 5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161.6      | 9  | -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349.6      | 3  | 0        |

[그림 5-2] 서울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서울시 지표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역원당종사자수의 전 산업 지표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100보다 크면,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간주하고, 100보다 작으면 고용효과가 작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기준으로는 해당 지표의 서울시 전 산업 평균인 80.1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80.1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서울시 산업의 평균적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100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국 산업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억원)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광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제조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순이다.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광업이 전국 12위(104.4)에서 서울 6위(206.3)로 지표값과 순위가 대폭 상승하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제조업은 전국 17위(60.7)에서 서울 11위(128.3)로 변화하여 역시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측정된다. 대규모 제조업시설은 수도권에 입지하지 못하고 비수도권에 입지한 결과 자본집약적 성격이 보다 강한 데 비해 서울의 제조업은 소규모로서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광업 역시 서울의 광업은 비수도권에 자리한 대규모 시설 대비 작은 규모로 운영되면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의 경우 전국 8위(154.9)에서 서울 14위(95.7)로 바뀌면서 고용효과가 적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서울의 운수업은 전국에 비해 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해당 지표값이 변화하였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213.4)에서 서울 9위(161.6)로 하락하였고, 서울의 업체당 매출액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커짐으로써 1억 원당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교육서비스업은 전국 5위에서 서울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업체당종사자수 지수가 전국보다 커지고, 업체당 매출액 지수도 전국보다 높아짐으로써 지수 값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부산광역시

**[표 5-5] 부산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1.2     | 91.2    | 70.3    | 70.3    | 129.8      | 129.8   | 89.4   | 89.4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45.2    | 769.0   | 370.4   | 898.5   | 93.2       | 85.6    | 148.0  | 167.2   |
| 광업                      | 107.8    | 156.1   | 147.1   | 204.0   | 73.3       | 76.5    | 113.8  | 144.5   |
| 제조업                     | 75.9     | 137.6   | 47.0    | 140.3   | 161.5      | 98.0    | 82.0   | 106.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26.5    | 1608.1  | 183.5   | 10149   | 123.4      | 15.8    | 101.4  | 244.7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17.9    | 232.5   | 84.7    | 128.9   | 139.2      | 180.4   | 96.2   | 123.6   |
| 건설업                     | 111.7    | 204.0   | 87.4    | 163.3   | 127.8      | 124.9   | 88.0   | 118.0   |
| 도매 및 소매업                | 91.5     | 52.3    | 87.9    | 70.3    | 104.1      | 74.5    | 91.2   | 62.9    |
| 운수업                     | 134.4    | 72.0    | 127.8   | 44.2    | 105.1      | 162.9   | 119.7  | 90.8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1.3    | 56.0    | 93.0    | 11.4    | 108.9      | 489.8   | 90.3   | 29.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72.3     | 177.9   | 75.8    | 187.3   | 95.4       | 95.0    | 100.7  | 151.5   |
| 금융 및 보험업                | 91.1     | 298.0   | 56.3    | 741.9   | 161.8      | 40.2    | 77.3   | 118.5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6.9     | 64.7    | 93.6    | 49.6    | 103.6      | 130.4   | 92.7   | 66.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7.2     | 120.9   | 50.1    | 64.6    | 134.0      | 187.0   | 91.0   | 112.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0.7     | 348.8   | 81.1    | 68.4    | 111.8      | 509.9   | 97.1   | 86.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8.5    | 1120.1  | 99.3    | 618.6   | 109.3      | 181.1   | 97.9   | 183.4   |
| 교육서비스업                  | 94.1     | 155.3   | 90.8    | 43.4    | 103.6      | 358.1   | 103.6  | 128.3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16.8    | 245.7   | 117.7   | 70.4    | 99.3       | 349.1   | 103.8  | 99.5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3.3     | 62.8    | 75.9    | 23.9    | 123.0      | 262.4   | 88.0   | 47.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7.9     | 43.3    | 92.7    | 9.9     | 105.6      | 438.7   | 92.9   | 44.6    |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 고용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부산광역시의 전 산업 업체당 종사자수의 전국 평균에 비교한 지표값은 91.2로서 전국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70.3으로, 다시 말해서 부산의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전국 평균 대비 7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전 산업 매출액(억원)당 종사자수는 전국 전 산업 매출액당 종사자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지표값이 129.8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부산 소재 산업들의 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 산업 1인당 급여의 지표값은 전국 평균 대비 89.4로 나타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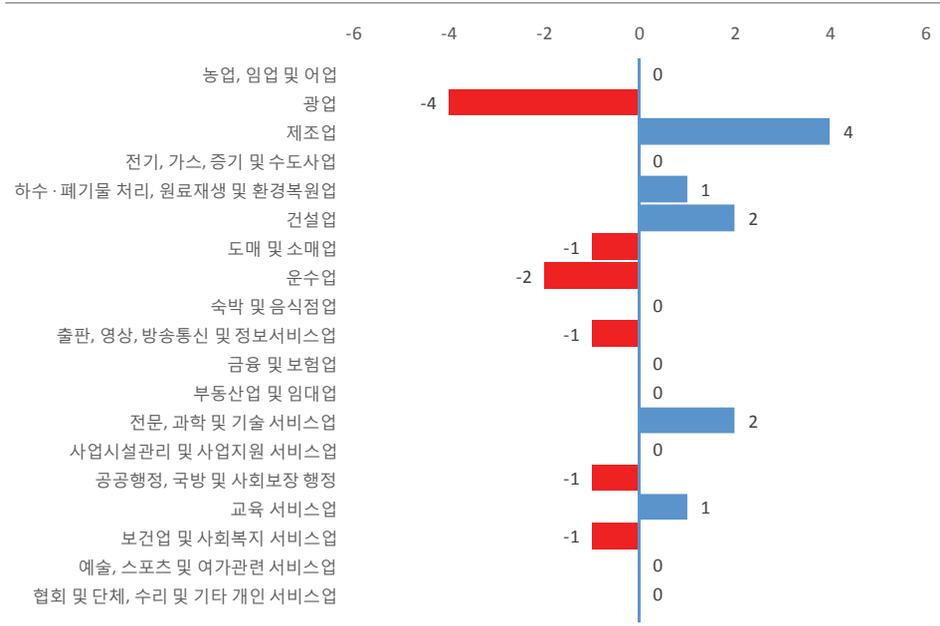
이상을 정리하면, 부산의 기업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 등이 적은 편이며,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의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 대비 10% 정도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부산시의 산업별 지표값을 통해 평균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국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부산의 평균인 각 값들, 즉 업체당종사자수의 부산 지표값인 91.2, 업체당매출액의 부산 지표값인 70.3, 억 원당 종사자수의 부산 지표값인 129.8, 1인당급여의 부산지표값인 89.4 등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6] 부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부산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29.8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85.6    | 15 | 0     |
| 광업                       | 104.4    | 12 | 76.5    | 16 | -4    |
| 제조업                      | 60.7     | 17 | 98.0    | 13 | 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5.8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80.4   | 9  | 1     |
| 건설업                      | 97.8     | 14 | 124.9   | 12 | 2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74.5    | 17 | -1    |
| 운수업                      | 154.9    | 8  | 162.9   | 10 | -2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89.8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95.0    | 14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0.2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30.4   | 11 | 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87.0   | 7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509.9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81.1   | 8  | -1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58.1   | 4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49.1   | 5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62.4   | 6  | 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38.7   | 3  | 0     |

[그림 5-3] 부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운수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건설업 등의 순이었다.

순위가 대폭 변동된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업이 전국 12위(104.4)에서 16위(76.5)로 지수 값과 순위가 대폭 하락하고, 고용효과가 작은 산업으로 변화하였고, 제조업이 전국 17위(60.7)에서 부산 13위(98.0)로 변화하여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부산의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는 부산 전 산업 평균인 80.1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값이므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의 제조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노동집약적 속성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산에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성격의 기업들이 적게 입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설업은 전국 14위(97.8)에서 부산 12위(124.9)로 지표값과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지표값은 부산 전 산업 평균인 80.1에 비하면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고용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변화를 보였다. 반면에 운수업은 전국 8위(154.9)에서 부산 10위(162.9)로 지표값은 증가했으나, 순위는 소폭 하락하였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부산 7위로 상승하였으나, 지표값은 139.6에서 187.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산의 경우 19개 산업 중 4개를 제외한 15개 산업들이 부산 전 산업 평균인 80.1보다 큰 지표값을 보였다. 따라서 광업, 전기, 가스 전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외에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고용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대구광역시의 전 산업 업체당 종사자 수의 전국 전 산업 업체당 종사자수 평균에 비교한 지표값은 83.0으로서 전국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59.3으로, 대구의 전 산업 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전국 평균 대비 60% 수준이다.

전 산업 매출액(억원)당 종사자수는 전국 전 산업 매출액당 종사자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지표값이 140.0으로 나타남으로써, 대구 소재 산업들의 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전 산업 1인당 급여의 지표값은 전국 평균 대비 82.8로 나타나 급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구의 기업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 등이 적은 편이다. 이 중에서도 업체당 매출액이 특히 낮은 편이었다.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 대비 82.8로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측정된다.

[표 5-7] 대구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83.0     | 83.0    | 59.3    | 59.3    | 140.0      | 140.0   | 82.8   | 82.8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4.5    | 232.7   | 60.9    | 147.6   | 171.6      | 157.6   | 137.1  | 155.0   |
| 광업                      | 52.8     | 76.5    | 19.8    | 27.5    | 266.4      | 278.1   | 96.6   | 122.7   |
| 제조업                     | 67.4     | 122.0   | 34.7    | 103.6   | 194.0      | 117.8   | 75.9   | 98.3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43.9    | 1021.8  | 281.6   | 15570   | 51.1       | 6.6     | 89.8   | 216.9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4.1     | 165.8   | 89.6    | 136.4   | 93.8       | 121.5   | 93.2   | 119.7   |
| 건설업                     | 82.8     | 151.1   | 60.9    | 113.7   | 136.0      | 132.9   | 85.4   | 114.6   |
| 도매 및 소매업                | 88.1     | 50.3    | 71.7    | 57.3    | 122.8      | 87.8    | 79.5   | 54.8    |
| 운수업                     | 80.5     | 43.1    | 33.2    | 11.5    | 242.3      | 375.3   | 67.8   | 51.4    |
| 숙박 및 음식점업               | 93.7     | 51.8    | 80.6    | 9.9     | 116.3      | 523.0   | 81.0   | 26.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74.9     | 184.4   | 63.0    | 155.6   | 119.0      | 118.5   | 88.8   | 133.7   |
| 금융 및 보험업                | 90.7     | 296.7   | 50.3    | 663.2   | 180.2      | 44.7    | 71.9   | 110.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5.9     | 64.0    | 91.9    | 48.7    | 104.4      | 131.4   | 100.9  | 72.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4.9     | 98.8    | 32.5    | 41.9    | 168.9      | 235.8   | 76.7   | 94.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8.8     | 341.4   | 70.4    | 59.4    | 126.1      | 574.9   | 83.8   | 74.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16.7    | 1204.4  | 107.0   | 666.7   | 109.1      | 180.6   | 100.6  | 188.5   |
| 교육서비스업                  | 84.8     | 139.9   | 77.2    | 36.9    | 109.8      | 379.5   | 93.1   | 115.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3.0    | 216.7   | 108.5   | 64.9    | 94.9       | 333.9   | 105.6  | 101.3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78.3     | 52.7    | 41.2    | 13.0    | 190.0      | 405.3   | 85.9   | 46.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0.9     | 40.3    | 96.3    | 10.3    | 94.3       | 392.1   | 81.5   | 3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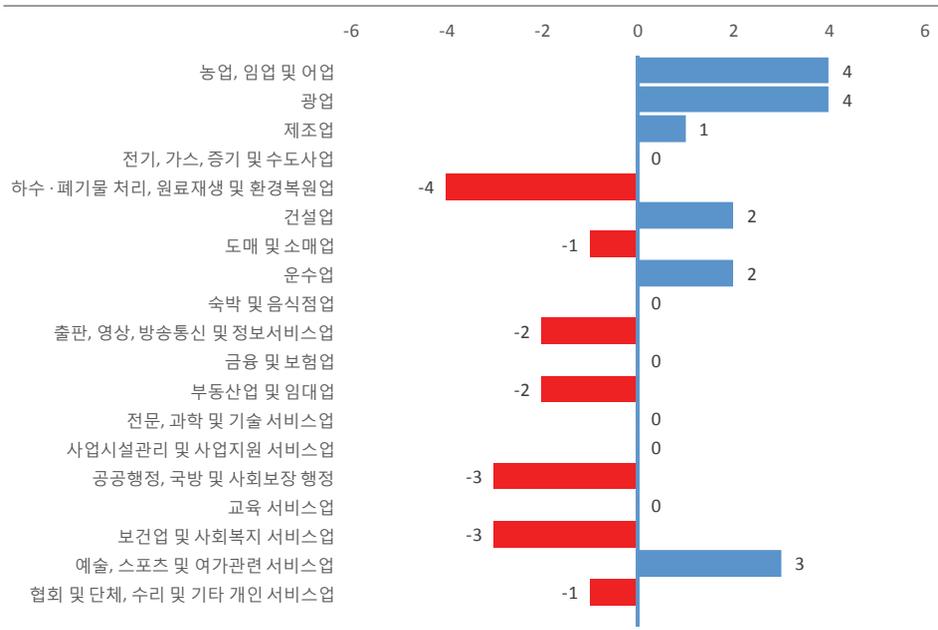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운수업, 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 광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건설업 등의 순이었다.

**[표 5-8] 대구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대구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40.0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57.6   | 11 | 4     |
| 광업                      | 104.4    | 12 | 278.1   | 8  | 4     |
| 제조업                     | 60.7     | 17 | 117.8   | 16 | 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6.6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21.5   | 14 | -4    |
| 건설업                     | 97.8     | 14 | 132.9   | 12 | 2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87.8    | 17 | -1    |
| 운수업                     | 154.9    | 8  | 375.3   | 6  | 2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23.0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18.5   | 15 | -2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4.7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31.4   | 13 | -2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대구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35.8   | 9  | 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574.9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80.6   | 10 | -3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79.5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33.9   | 7  | -3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405.3   | 3  | 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392.1   | 4  | -1    |

[그림 5-4] 대구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이 전국 12위에서 대구 8위로 순위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전국 지수 104.4에서 대구 278.1로 큰 차이가 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대구의 광업은 고용효

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측정된다. 농업이 전국 15위(91.8)에서 대구 11위(157.6)로 변화하여 역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 산업으로 측정된다. 대구의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는 대구 전 산업 평균인 140.1에 비해서 약간 높은 값이므로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213.4)에서 대구 3위(405.3)로 지표값과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지표값은 대구 전 산업 평균 140.0에 비하면 3배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서 고용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변화를 보인다. 운수업은 전국 8위(154.9)에서 대구 6위(375.3)로 지표값이 높아지면서, 순위도 높아졌다.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대구 12위로 순위가 상승한 바, 지표값은 (평균 100일 때) 97.8에서 (평균 140.0일 때) 132.9로 측정되어 상대적 크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대구 14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지표값이 129.6에서 121.5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국과 대구의 산업 평균 차이(100과 140.0의 차이)로 인해 순위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대구 10위로 하락하였다. 지표값은 대구의 경우가 다소 높으나, 대구 전 산업 평균의 지표값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하락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국 4위에서 대구 7위로 하락하였으며, 이 산업은 실제 지표값 자체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국 13위에서 대구 15위로 약간 하락하였고, 지표값은 99.6에서 118.5로 두 경우 모두 소속 지역의 전 산업 평균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대구 13위로 소폭 하락하였는데, 지표값이 소폭 올라갔음에도 상대적으로는 짠 값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구경의 경우 19개 산업 중 8개를 제외한 11개 산업들의 1억 원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인 140.0보다 큰 지표값을 보였다. 따라서 대구의 산업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 평균인 140.0보다 큰 값을 가진 산업분야야야 (평균 대비)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값이 높음에도 고용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이할 점은 대구경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지표값이 6.6에 불과하여 극도로 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인천광역시

[표 5-9] 인천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8.2     | 98.2    | 91.1    | 91.1    | 107.7      | 107.7   | 95.2   | 95.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3.2     | 140.8   | 48.4    | 117.4   | 130.6      | 120.0   | 89.5   | 101.2   |
| 광업                      | 244.1    | 353.5   | 407.9   | 565.7   | 59.9       | 62.5    | 123.4  | 156.7   |
| 제조업                     | 102.8    | 186.2   | 78.4    | 234.0   | 131.1      | 79.6    | 94.1   | 121.9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62.7    | 1,155.4 | 195.3   | 10,802  | 83.3       | 10.7    | 109.4  | 264.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18.4    | 233.4   | 182.2   | 277.3   | 65.0       | 84.2    | 99.6   | 128.0   |
| 건설업                     | 93.4     | 170.5   | 111.3   | 207.8   | 83.9       | 82.1    | 100.0  | 134.1   |
| 도매 및 소매업                | 97.7     | 55.9    | 120.7   | 96.5    | 80.9       | 57.9    | 88.0   | 60.7    |
| 운수업                     | 113.7    | 61.0    | 126.4   | 43.7    | 90.0       | 139.4   | 111.0  | 84.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0.4    | 55.5    | 102.9   | 12.7    | 97.6       | 438.7   | 98.2   | 31.7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70.9     | 174.6   | 52.3    | 129.2   | 135.7      | 135.1   | 84.1   | 126.5   |
| 금융 및 보험업                | 85.7     | 280.2   | 48.0    | 631.8   | 178.7      | 44.4    | 76.1   | 116.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4.4     | 56.3    | 96.5    | 51.1    | 87.5       | 110.1   | 100.1  | 72.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88.5     | 159.2   | 91.0    | 117.3   | 97.2       | 135.7   | 94.8   | 117.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9.6     | 383.0   | 94.2    | 79.4    | 105.7      | 482.1   | 101.1  | 89.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27.8    | 1,318.3 | 126.5   | 788.3   | 101.0      | 167.2   | 99.0   | 185.5   |
| 교육서비스업                  | 109.0    | 179.8   | 102.8   | 49.1    | 106.0      | 366.5   | 101.7  | 125.9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1.6    | 213.7   | 92.2    | 55.1    | 110.2      | 387.7   | 93.9   | 90.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0.5     | 54.2    | 61.6    | 19.4    | 130.8      | 279.1   | 86.1   | 46.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8.9     | 43.8    | 84.0    | 9.0     | 117.8      | 489.5   | 97.1   | 46.6    |

인천광역시의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 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운수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순이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인천의 경우 19개 산업 중 7개를 제외한 12개 산업들이 인천 전 산업 평균인 107.7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인천의 산업들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매우 낮은 10.7의 값을 기록함으로써 19개 산업의 과반수 이상이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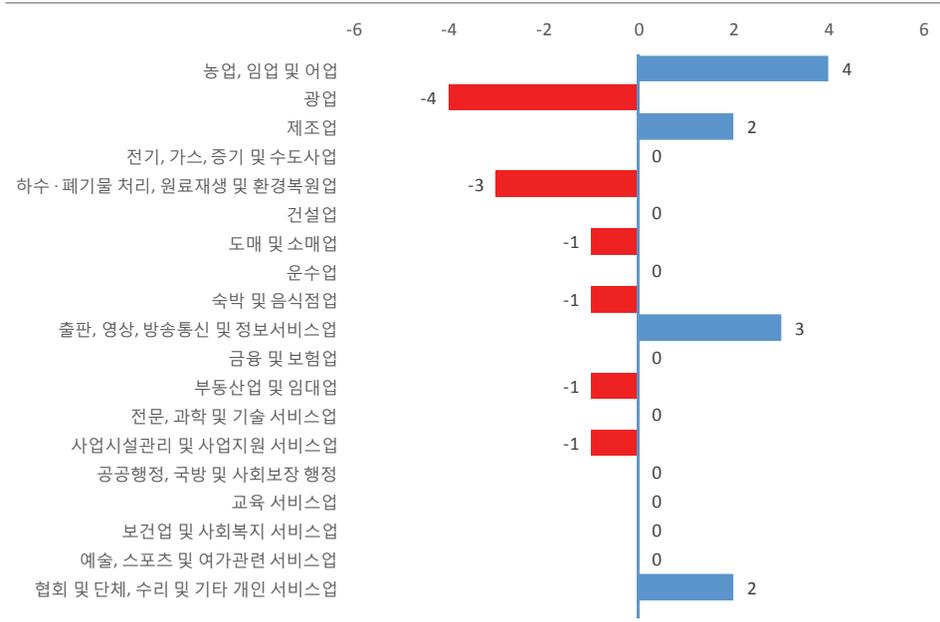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두 산업에서 산업내 고용된 종사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으로 측정되어, 높은 지표값을 갖는 것이 인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표 5-10] 인천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인천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07.7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20.0   | 11 | 4     |
| 광업          | 104.4    | 12 | 62.5    | 16 | -4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인천         |    | 순위<br>변동 |
|--------------------------|-------------|----|------------|----|----------|
|                          | 억 원당<br>종사자 | 순위 | 전 산업<br>대비 | 순위 |          |
| 제조업                      | 60.7        | 17 | 79.6       | 15 | 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0.7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84.2       | 13 | -3       |
| 건설업                      | 97.8        | 14 | 82.1       | 14 | 0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57.9       | 17 | -1       |
| 운수업                      | 154.9       | 8  | 139.4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38.7      | 3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35.1      | 10 | 3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4.4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10.1      | 12 | -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35.7      | 9  | 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82.1      | 2  | -1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7.2      | 7  | 0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66.5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87.7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79.1      | 6  | 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89.5      | 1  | 2        |

[그림 5-5] 인천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전국 3위에서 인천 1위로 변화했다. 지표값은 415.6에서 489.5로 변화함으로써 전 산업 평균의 차이(100.0과 107.7)를 고려하더라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위로, 전국 2위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위로 밀려났다. 농업이 전국 15위(91.8)에서 인천 11위(120.0)로 변화하여 역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인천의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는 대구 전 산업 평균인 107.7에 비해서도 높은 값이므로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3위에서 10위로 변화한 바, 지표값은 99.6에서 135.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간주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국 17위에서 인천 15위로 변화하였고, 지표값이 60.7에서 79.6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 산업 평균에는 미달하여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이 전국 12위에서 인천 16위로 순위가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전국 지수 104.4에서 인천 62.5로 큰 차이가 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광업은 전국의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산업에서 인천에서는 고용효과가 작은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인천 13위로 순위가 하락한 바, 지표값이 129.6에서 84.2로 대폭 하락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고용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주시의 산업별 지표값을 통해 평균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국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광주의 평균 지표값들, 즉 업체당종사자수의 지표값인 91.5, 업체당매출액의 지표값인 77.8, 억 원당 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17.6, 1인당급여의 지표값인 88.6 등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해야 한다.

**[표 5-11] 광주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1.5     | 91.5    | 77.8    | 77.8    | 117.6      | 117.6   | 88.6   | 88.6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54.6    | 344.4   | 129.3   | 313.6   | 119.6      | 109.8   | 138.4  | 156.4   |
| 광업                      | 61.1     | 88.5    | 58.8    | 81.5    | 103.9      | 108.5   | 113.8  | 144.5   |
| 제조업                     | 99.3     | 179.8   | 108.2   | 323.1   | 91.7       | 55.6    | 103.7  | 134.3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3.5     | 380.1   | 55.9    | 3,092.8 | 95.7       | 12.3    | 94.0   | 226.8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2.7    | 202.5   | 124.8   | 190.0   | 82.3       | 106.6   | 106.6  | 137.0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건설업                      | 102.2    | 186.6   | 101.7   | 189.9   | 100.5      | 98.3    | 82.6   | 110.8   |
| 도매 및 소매업                 | 93.2     | 53.3    | 74.8    | 59.8    | 124.7      | 89.2    | 77.8   | 53.7    |
| 운수업                      | 92.5     | 49.6    | 51.2    | 17.7    | 180.8      | 280.1   | 78.1   | 59.3    |
| 숙박 및 음식점업                | 99.6     | 55.1    | 90.4    | 11.1    | 110.2      | 495.5   | 87.2   | 28.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7.4     | 166.0   | 70.4    | 174.0   | 95.7       | 95.4    | 98.7   | 148.6   |
| 금융 및 보험업                 | 93.8     | 306.6   | 47.1    | 620.5   | 199.1      | 49.4    | 64.7   | 99.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11.6    | 74.5    | 212.0   | 112.4   | 52.6       | 66.2    | 97.0   | 69.9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7.8     | 103.9   | 29.5    | 38.1    | 195.7      | 273.1   | 73.3   | 90.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7.2     | 296.7   | 82.1    | 69.3    | 93.9       | 428.2   | 95.2   | 84.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7.5    | 1,109.0 | 109.2   | 680.5   | 98.4       | 163.0   | 106.1  | 198.7   |
| 교육서비스업                   | 86.0     | 141.9   | 82.6    | 39.4    | 104.1      | 359.7   | 100.2  | 124.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6.8    | 224.6   | 103.2   | 61.7    | 103.4      | 363.7   | 97.4   | 93.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1.0     | 54.5    | 62.2    | 19.6    | 130.2      | 277.7   | 79.1   | 42.4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2.8     | 41.1    | 86.6    | 9.2     | 107.2      | 445.5   | 82.7   | 39.7    |

광주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시 전 산업 평균인 117.6보다 큰 값을 갖는 산업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숙박 및 음식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교육서비스업, 6) 운수업,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농업, 임업 및 어업, 11) 광업, 1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순이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 전 산업 평균 117.6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9위까지는 기준 값을 넘기고 있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들로 이해할 수 있으나, 10위 산업부터는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임으로써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1위부터 9위까지 만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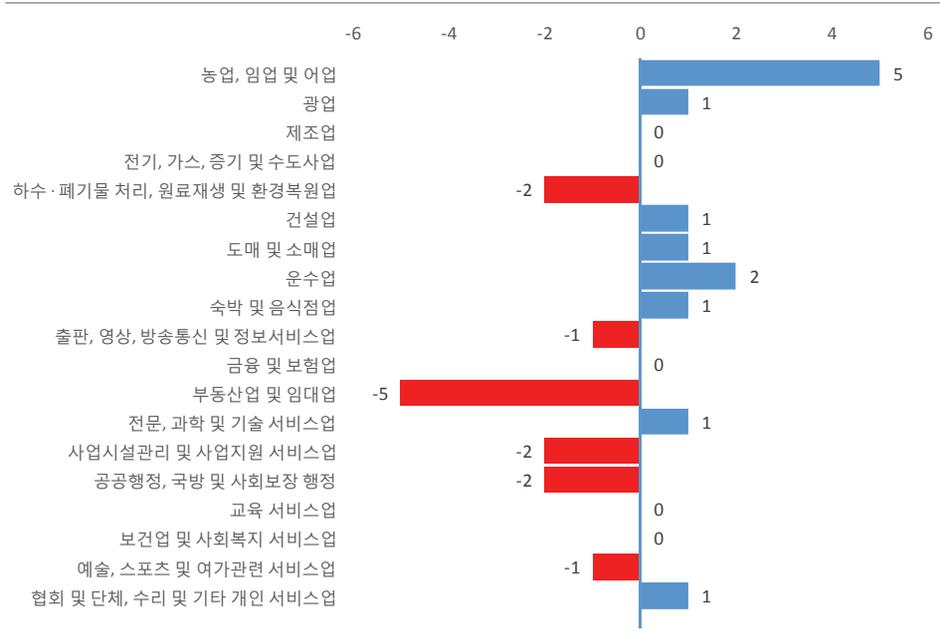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전국 15위(91.8)에서 광주 10위(109.8)로 변화하여 역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 산업으로 측정된다. 광주의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는 광주 전 산업 평균인 117.6에 비해서 약간 낮은 값이므로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운수업은 전국 8위(154.9)에서 광주 6위(280.1)로 지표값이 크게 높아지면서, 순위도 높아졌으며 고용효과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광주 16위로 큰 폭 하락하였다. 지표값은 전국 125.8에서 광주 66.2로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있는 편에서 고용효과가 작은 편으로 지표의 성격이 변하였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국 1위에서 광주 3위로 하락한 바, 지표값이 455.9에서 428.2로 하락한 데 기인한다. 이 산업 대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위로 변화하였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광주 12위로 순위가 하락한 바, 지표값이 129.6에서 106.6로 하락한 데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산업은 고용효과가 평균 이하인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광주 9위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표값은 전국과 광주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광주 전 산업 평균의 지표값 상승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보다 작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5-12] 광주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광주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17.6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09.8   | 10 | 5     |
| 광업                       | 104.4    | 12 | 108.5   | 11 | 1     |
| 제조업                      | 60.7     | 17 | 55.6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2.3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06.6   | 12 | -2    |
| 건설업                      | 97.8     | 14 | 98.3    | 13 | 1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89.2    | 15 | 1     |
| 운수업                      | 154.9    | 8  | 280.1   | 6  | 2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95.5   | 1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95.4    | 14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9.4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66.2    | 16 | -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73.1   | 8  | 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28.2   | 3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3.0   | 9  | -2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59.7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63.7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77.7   | 7  | -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45.5   | 2  | 1     |

[그림 5-6] 광주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광주의 경우 19개 산업 중 9개 산업들만이 광주 전 산업 평균인 117.6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이는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지표의 지표값이 특정 산업에 매우 높은 값으로 극단화 되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덜 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광주 전 산업 평균 117.6에 미달하는 산업들의 경우 지표값이 지나치게 낮지 않고,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인해 평균을 상회하는 산업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 등의 지표값이 평균보다는 낮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 운수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효과가 매우 크게 나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6. 대전광역시

[표 5-13] 대전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7.2     | 97.2    | 75.4    | 75.4    | 128.9      | 128.9   | 95.4   | 95.4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20.0    | 489.9   | 203.0   | 492.4   | 108.4      | 99.5    | 78.2   | 88.3    |
| 광업                      | 99.9     | 144.7   | 79.9    | 110.8   | 125.1      | 130.6   | 74.4   | 94.4    |
| 제조업                     | 79.9     | 144.7   | 68.4    | 204.3   | 116.7      | 70.8    | 96.7   | 125.3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00.6    | 1,424.5 | 171.1   | 9,463.0 | 117.2      | 15.1    | 104.9  | 253.2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3.6    | 243.6   | 104.4   | 158.9   | 118.3      | 153.3   | 94.6   | 121.5   |
| 건설업                     | 94.0     | 171.7   | 79.4    | 148.2   | 118.4      | 115.8   | 89.5   | 120.0   |
| 도매 및 소매업                | 95.5     | 54.6    | 78.1    | 62.4    | 122.3      | 87.5    | 87.2   | 60.2    |
| 운수업                     | 90.0     | 48.2    | 51.8    | 17.9    | 173.7      | 269.1   | 107.6  | 81.6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1.4    | 56.1    | 93.3    | 11.5    | 108.7      | 488.7   | 92.3   | 29.8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1.1     | 224.3   | 84.1    | 207.9   | 108.3      | 107.9   | 96.6   | 145.3   |
| 금융 및 보험업                | 97.5     | 319.0   | 65.8    | 866.4   | 148.3      | 36.8    | 71.8   | 110.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1.8    | 67.9    | 74.1    | 39.3    | 137.4      | 172.9   | 89.7   | 64.6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3.3    | 257.8   | 184.8   | 238.3   | 77.5       | 108.2   | 126.3  | 155.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13.8    | 437.7   | 99.5    | 83.9    | 114.4      | 521.7   | 99.1   | 88.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3.3    | 1,684.9 | 193.7   | 1,206.9 | 84.3       | 139.6   | 98.5   | 184.4   |
| 교육서비스업                  | 114.2    | 188.3   | 119.1   | 56.9    | 95.8       | 331.2   | 98.5   | 122.0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7.0     | 204.0   | 94.5    | 56.5    | 102.6      | 360.8   | 96.8   | 92.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0.5     | 54.2    | 68.7    | 21.7    | 117.0      | 249.7   | 97.3   | 52.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     | 42.6    | 83.6    | 8.9     | 114.9      | 477.7   | 90.2   | 43.3    |

대전광역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전 산업 매출액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28.9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운수업,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광업 등 순이다. 그 외 12) 건설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으나, 대전 전 산업 평균 128.9보다 작은 지표값을 갖고 있어서 제외하였다. 대전의 경우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전의 산업별 순위가 상위 5개 산업에서는 전국의 산업별 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전국 11위에서 대전 8위로 3계단 상승하였다. 지표값은 전국 125.8, 대전 172.9로 대전의 경우가 대전의 전 산업 평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인다.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대전 12위로 2계단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국 지표값이 97.8이고, 대전이 115.8인 바, 두 경우 모두 전 산업 평균에는 미달하는 값이며, 특히 대전의 경우가 평균과의 괴리가 큰 편이다. 운수업은 전국 8위에서 대전 6위로 상승하였다. 지표값은 전국 154.9, 대전 269.1로서 대전의 경우 높은 전 산업 평균을 고려하더라도, 대폭 높아진 값이다. 따라서 대전의 운수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대전 13위로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이 있음. 지표값은 전국 139.6에서 대전 108.2로서 상당

히 하락하였고 그 결과 대전의 해당 지표값은 전 산업 평균인 128.9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대전 10위로 하락하였다. 지표값은 전국 165.6에서 대전 139.6으로 하락한 바,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값이었던 것이 평균 대비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고용효과도 크지 않은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전의 경우 19개 산업 중 8개를 제외한 11개 산업들이 대전의 전 산업 평균인 128.9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대전의 산업들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점, 운수업의 지표값이 높은 점 등이 대전 매출액대비 종사자수 기준의 지표값 분석에서 드러난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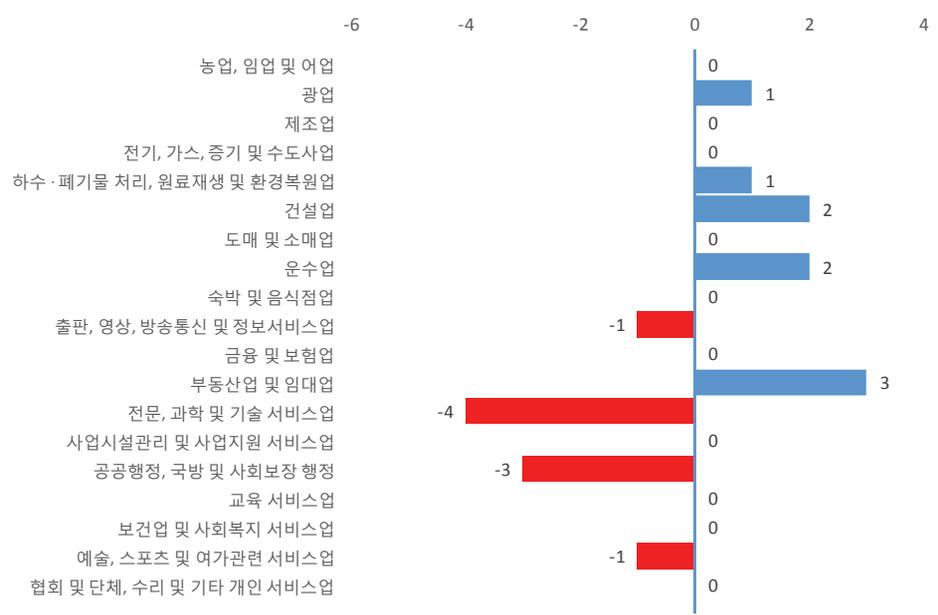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두 산업에서 산업내 고용된 종사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으로 측정되어, 높은 지표값을 갖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 5-14]** 대전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대전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28.9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99.5    | 15 | 0     |
| 광업                      | 104.4    | 12 | 130.6   | 11 | 1     |
| 제조업                     | 60.7     | 17 | 70.8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5.1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53.3   | 9  | 1     |
| 건설업                     | 97.8     | 14 | 115.8   | 12 | 2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87.5    | 16 | 0     |
| 운수업                     | 154.9    | 8  | 269.1   | 6  | 2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88.7   | 2  | 0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대전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07.9   | 14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36.8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72.9   | 8  | 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08.2   | 13 | -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521.7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39.6   | 10 | -3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31.2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60.8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49.7   | 7  | -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77.7   | 3  | 0     |

[그림 5-7] 대전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7. 울산광역시

[표 5-15] 울산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19.2    | 119.2   | 220.0   | 220.0   | 54.2       | 54.2    | 131.4  | 131.4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7.6     | 172.8   | 66.0    | 160.0   | 117.6      | 107.9   | 138.9  | 156.9   |
| 광업                      | 204.1    | 295.6   | 708.8   | 983.1   | 28.8       | 30.1    | 199.5  | 253.4   |
| 제조업                     | 275.2    | 498.5   | 669.3   | 1,998.0 | 41.1       | 25.0    | 162.7  | 210.7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99.2     | 704.1   | 139.0   | 7,689.3 | 71.3       | 9.2     | 120.9  | 291.9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0.6     | 178.6   | 110.8   | 168.6   | 81.8       | 105.9   | 106.6  | 137.0   |
| 건설업                     | 106.5    | 194.5   | 70.7    | 132.1   | 150.6      | 147.3   | 98.0   | 131.4   |
| 도매 및 소매업                | 90.2     | 51.6    | 69.5    | 55.5    | 129.9      | 92.9    | 82.1   | 56.6    |
| 운수업                     | 120.1    | 64.4    | 113.8   | 39.4    | 105.6      | 163.6   | 101.3  | 76.8    |
| 숙박 및 음식점업               | 91.9     | 50.8    | 87.7    | 10.8    | 104.8      | 471.1   | 94.1   | 30.4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8.3     | 217.3   | 76.1    | 187.9   | 116.1      | 115.6   | 98.4   | 148.1   |
| 금융 및 보험업                | 85.6     | 280.1   | 51.7    | 681.6   | 165.5      | 41.1    | 70.9   | 108.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7.3     | 65.0    | 75.4    | 40.0    | 129.1      | 162.5   | 72.1   | 52.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2.1    | 183.8   | 105.5   | 136.0   | 96.8       | 135.1   | 104.5  | 129.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7.0     | 334.6   | 110.9   | 93.5    | 78.5       | 357.7   | 111.3  | 98.9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17.7    | 1,214.8 | 112.6   | 701.2   | 104.6      | 173.2   | 99.3   | 186.0   |
| 교육서비스업                  | 84.7     | 139.8   | 92.9    | 44.3    | 91.3       | 315.4   | 97.0   | 120.2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5.9     | 201.7   | 100.6   | 60.2    | 95.3       | 335.2   | 106.1  | 101.7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73.1     | 49.2    | 40.3    | 12.7    | 181.6      | 387.5   | 102.6  | 55.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5     | 41.8    | 93.4    | 10.0    | 101.1      | 420.4   | 103.8  | 49.8    |

울산시의 지표를 분석해 보면, 업체당종사자수의 울산 지표값은 119.2, 업체당매출액의 울산 지표값은 220.0, 1억 원당 종사자수의 울산 지표값은 54.2, 1인당급여의 울산 지표값은 131.4이었다. 울산 고용지표 중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전 산업 대비 지표값이 220으로 매우 높은 바, 이는 울산의 주요 제조업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울산의 전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지표값은 전국평균의 77배를 의미하는 7,689.3이며, 제조업은 1,998.0, 광업은 983.0으로 극도로 높은 값을 가지며, 이들 산업들은 업체당 규모가 커서 매출액이 매우 크고 자본집약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자본집약적 산업의 존재로 인해 울산의 업체당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영향으로 울산의 매출액당 종사자수의 전 산업 평균은 전국 평균의 54.2% 수준으로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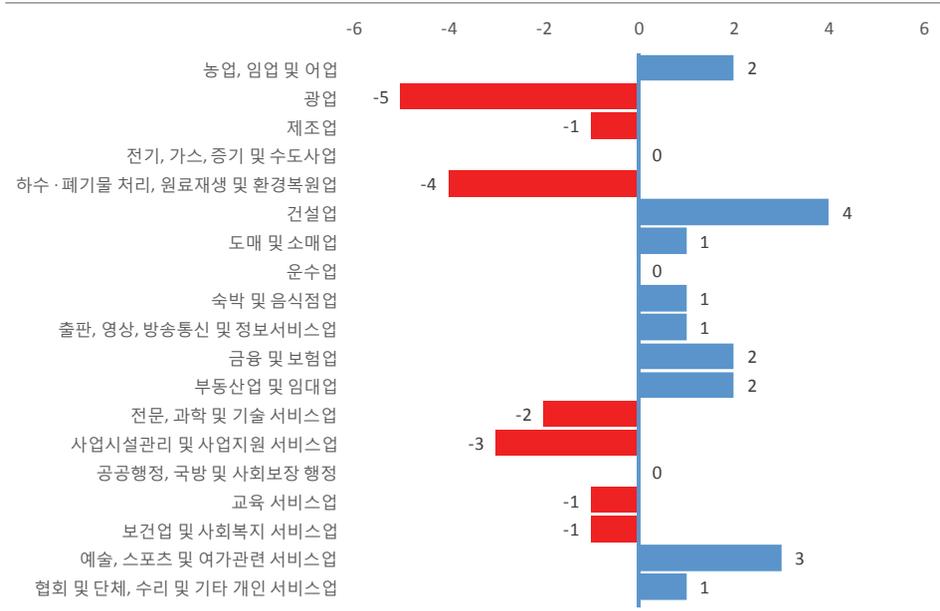
단, 고용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전 산업 대비 지표값이 매출액1억 원당 종사자수에서는 낮은 값을 가짐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산업들이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울산 전 산업 매출액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54.2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숙박 및 음식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운수업,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건설업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농업, 임업 및 어업, 1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5) 도매 및 소매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6] 울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울산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54.2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07.9   | 13 | 2     |
| 광업                       | 104.4    | 12 | 30.1    | 17 | -5    |
| 제조업                      | 60.7     | 17 | 25.0    | 18 | -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9.2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05.9   | 14 | -4    |
| 건설업                      | 97.8     | 14 | 147.3   | 10 | 4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92.9    | 15 | 1     |
| 운수업                      | 154.9    | 8  | 163.6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71.1   | 1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15.6   | 12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1.1    | 16 | 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62.5   | 9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35.1   | 11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357.7   | 4  | -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73.2   | 7  | 0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15.4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35.2   | 5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387.5   | 3  | 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20.4   | 2  | 1     |

[그림 5-8] 울산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울산 10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표값은 전국 97.8에서 울산 147.8로 크게 다른 값이다. 울산의 경우 낮은 전 산업 평균으로 인해 이 산업의 고용효과는 평균 대비 매우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울산 3위로 상승하였다. 지표값은 전국 213.4에서 울산 387.5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울산의 낮은 전 산업 평균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울산 13위로 상승하였으며, 지표값의 변화를 보면, 전국 91.8에서 울산 107.9로 소폭 상승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전국 18위에서 울산 16위로 상승하였고, 지표값은 전국 24.8에서 41.1로 상승하였으나, 전 산업 평균에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효과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전국 11위에서 울산 9위로 2계단 상승하였고, 지표값은 전국 125.8, 울산 162.5로서 특히 울산의 낮은 산업평균을 고려하면, 울산 부동산 및 임대

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울산 17위로 하락하였음. 전국 지표값은 104.4로 평균 이상이나 울산 지표값은 30.1에 불과하여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울산 14위로 하락하였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국 1위에서 울산 4위로 하락하였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울산 11위로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이 있다. 지표값은 전국 139.6에서 대전 135.1로서 약간 하락하였으나 울산의 낮은 전 산업 평균으로 인해 고용효과는 보다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울산은 전체 산업 중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등 4개의 산업만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4개 산업의 생산 측면에서의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 산업에서의 낮은 지표값이 전 산업 평균지표값을 낮은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 8. 세종시

[표 5-17] 세종시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48.2    | 148.2   | 176.3   | 176.3   | 84.1       | 84.1    | 125.3  | 125.3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5.8     | 213.3   | 208.3   | 505.2   | 46.0       | 42.2    | 114.6  | 129.5   |
| 광업                      | 172.9    | 250.4   | 293.2   | 406.6   | 59.0       | 61.6    | 133.9  | 170.0   |
| 제조업                     | 200.5    | 363.2   | 221.1   | 660.2   | 90.7       | 55.0    | 111.0  | 143.7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94.0     | 667.7   | 86.9    | 4,807.6 | 108.2      | 13.9    | 85.9   | 207.4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6.1     | 169.8   | 94.3    | 143.5   | 91.3       | 118.3   | 85.4   | 109.8   |
| 건설업                     | 85.5     | 156.1   | 63.4    | 118.4   | 134.9      | 131.9   | 78.1   | 104.8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도매 및 소매업                 | 91.9     | 52.5    | 80.7    | 64.5    | 113.9      | 81.5    | 67.4   | 46.5    |
| 운수업                      | 105.7    | 56.7    | 107.5   | 37.2    | 98.4       | 152.5   | 98.4   | 74.7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6.0    | 58.6    | 106.3   | 13.1    | 99.8       | 448.7   | 93.9   | 30.3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3.4    | 303.8   | 72.9    | 180.0   | 169.4      | 168.8   | 101.2  | 152.3   |
| 금융 및 보험업                 | 55.4     | 181.3   | 28.9    | 380.8   | 191.7      | 47.6    | 109.1  | 167.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0.7    | 67.2    | 173.7   | 92.1    | 58.0       | 73.0    | 107.7  | 77.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97.5    | 355.4   | 102.8   | 132.6   | 192.1      | 268.1   | 115.9  | 143.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84.8     | 326.2   | 79.2    | 66.8    | 107.0      | 488.0   | 109.8  | 97.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337.0    | 3,477.6 | 774.8   | 4,826.9 | 43.5       | 72.0    | 119.5  | 223.8   |
| 교육서비스업                   | 179.8    | 296.7   | 167.2   | 79.8    | 107.6      | 371.8   | 99.4   | 123.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2.3     | 173.1   | 62.6    | 37.4    | 131.5      | 462.4   | 72.2   | 69.2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13.4    | 76.4    | 2,973.8 | 938.3   | 3.8        | 8.1     | 136.3  | 73.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0.4    | 44.5    | 88.0    | 9.4     | 114.1      | 474.1   | 96.4   | 46.3    |

세종시의 각종 고용 관련지표들을 통해 세종시의 개별 산업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또는 전국 산업 평균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때, 각 산업별 고용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세종의 평균인 각 값들과 비교해야 한다.

업체당종사자수의 세종 지표값은 148.2, 업체당매출액의 세종 지표값은 176.3, 억 원당 종사자수의 세종 지표값은 84.1, 1인당급여의 세종 지표값은 125.3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고용지표 중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전 산업 대비 지표값이 176.3으로 상

당히 높은 바, 이는 세종의 주요 산업인 공공행정부문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전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지표값은 4,807.6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4,826.9로 극도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들 산업들은 업체당 규모가 커서 매출액이 매우 크다. 이들 대규모 산업의 존재로 인해 세종의 업체당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세종의 매출액당 종사자수의 전 산업 평균은 전국 평균의 84.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고용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전 산업 대비 지표값이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에서는 낮은 값을 가짐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산업들이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 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매출액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84.1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5) 교육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운수업, 9) 건설업,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순이었다. 다음 순위로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있는 바, 세종시의 19개 산업 중 10위 산업까지만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세종시의 산업별 고용효과는 지표값이 400을 넘는 특정의 몇 개 산업에 치우쳐 있어 산업의 개수는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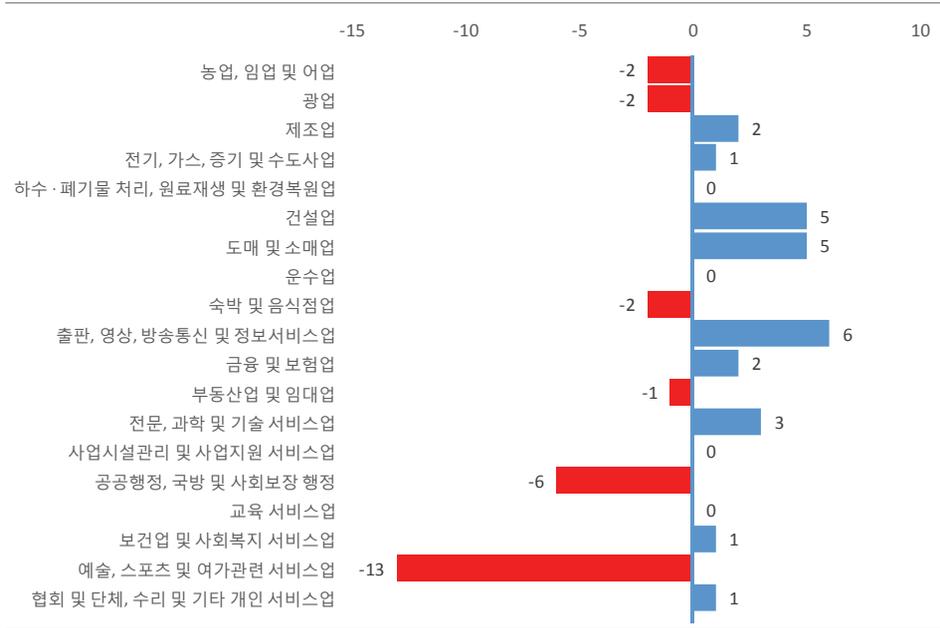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상승한 산업들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국 13위에서 세종 7위로 순위 변동이 매우 심하다. 지표값의 변화도 큰 편이고, 전 산업 평균의 변화도 심하여 전국 단위에서는 고용효과가 크지 않으나, 세종시에서는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표 5-18] 세종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세종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84.1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42.2    | 17 | -2    |
| 광업                       | 104.4    | 12 | 61.6    | 14 | -2    |
| 제조업                      | 60.7     | 17 | 55.0    | 15 | 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3.9    | 18 | 1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18.3   | 10 | 0     |
| 건설업                      | 97.8     | 14 | 131.9   | 9  | 5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81.5    | 11 | 5     |
| 운수업                      | 154.9    | 8  | 152.5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48.7   | 4  | -2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68.8   | 7  | 6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7.6    | 16 | 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73.0    | 12 | -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68.1   | 6  | 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88.0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72.0    | 13 | -6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71.8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62.4   | 3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8.1     | 19 | -1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74.1   | 2  | 1     |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세종 9위로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 산업은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세종시에서는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변모함을 알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세종 11위로 변화하였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세종 3위로 변화하였다. 금융업은 전국 18위에서 세종 16위로 상승하였다.

[그림 5-9] 세종시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세종 19위로 매우 큰 변동을 보인다. 지표값도 전국 213.4에서 세종 8.1로 크게 변화하고, 순위의 변화가 13단계에 이르러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에서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세종 13위로 하락하였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세종 17위로 변화하였다. 또한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세종 14위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국 2위에서 세종 4위로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종은 19개 산업 중 9개를 제외한 10개 산업들이 세종 전 산업 평균인 84.1보다 큰 지표값을 보았다.

세종시 산업별 고용지표 지표값의 특징은 전국 산업 고용지표들과는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지표들이 많다는 것이며 이는 비교적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한계라고 판단된다.

## 9. 경기도

[표 5-19] 경기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04.2    | 104.2   | 94.0    | 94.0    | 110.9      | 110.9   | 96.6   | 96.6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0.2    | 223.1   | 112.6   | 273.1   | 89.0       | 81.7    | 99.1   | 112.0   |
| 광업                      | 153.0    | 221.5   | 271.6   | 376.7   | 56.3       | 58.8    | 110.2  | 140.0   |
| 제조업                     | 103.2    | 186.9   | 90.0    | 268.6   | 114.7      | 69.6    | 99.6   | 129.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09.4    | 776.8   | 132.4   | 7,322.0 | 82.6       | 10.6    | 112.4  | 271.4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1.7    | 200.5   | 106.9   | 162.7   | 95.2       | 123.3   | 100.4  | 129.0   |
| 건설업                     | 83.1     | 151.8   | 61.3    | 114.5   | 135.5      | 132.5   | 85.2   | 114.3   |
| 도매 및 소매업                | 108.7    | 62.2    | 100.1   | 80.0    | 108.6      | 77.7    | 100.7  | 69.4    |
| 운수업                     | 95.5     | 51.2    | 73.9    | 25.6    | 129.2      | 200.1   | 83.7   | 63.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5.4    | 58.2    | 110.2   | 13.5    | 95.6       | 430.1   | 103.6  | 33.4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2.8    | 277.6   | 115.9   | 286.4   | 97.3       | 96.9    | 101.2  | 152.3   |
| 금융 및 보험업                | 87.7     | 286.8   | 53.2    | 701.4   | 164.7      | 40.9    | 81.5   | 124.8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1.8     | 61.3    | 84.7    | 44.9    | 108.5      | 136.5   | 95.9   | 69.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8.9    | 231.9   | 169.5   | 218.6   | 76.0       | 106.1   | 90.0   | 111.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95.5     | 367.3   | 93.5    | 78.9    | 102.1      | 465.7   | 96.4   | 85.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8.9    | 1,124.3 | 100.8   | 628.0   | 108.1      | 179.0   | 96.1   | 180.0   |
| 교육서비스업                  | 98.9     | 163.2   | 93.1    | 44.4    | 106.3      | 367.3   | 92.4   | 114.4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1.4     | 192.3   | 86.7    | 51.9    | 105.4      | 370.7   | 94.3   | 90.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12.6    | 75.8    | 112.0   | 35.3    | 100.6      | 214.6   | 91.8   | 49.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3.9    | 46.0    | 114.9   | 12.2    | 90.4       | 375.8   | 106.7  | 51.2    |

경기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업체당종사자수 104.2, 업체당매출액 94.0,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 110.9, 1인당급여 96.6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운수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건설업,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순이다.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경기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경기도 10위로 크게 변하였다. 이 산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경기도에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경기도 9위로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과 경기도에서 공히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파악된다.

**[표 5-20]** 경기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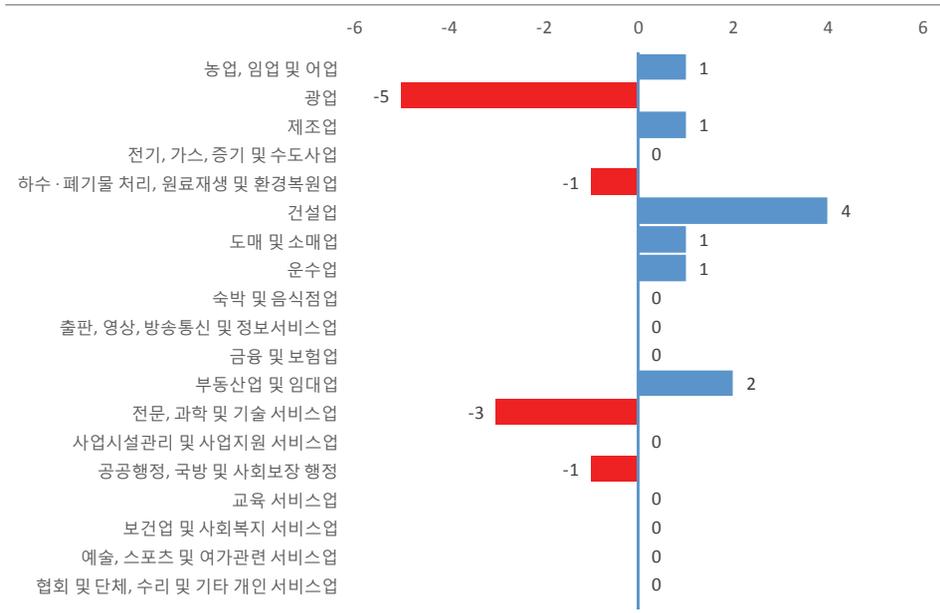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서울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10.9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81.7    | 14 | 1     |
| 광업          | 104.4    | 12 | 58.8    | 17 | -5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서울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제조업                      | 60.7     | 17 | 69.6    | 16 | 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0.6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23.3   | 11 | -1    |
| 건설업                      | 97.8     | 14 | 132.5   | 10 | 4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77.7    | 15 | 1     |
| 운수업                      | 154.9    | 8  | 200.1   | 7  | 1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30.1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96.9    | 13 | 0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0.9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36.5   | 9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06.1   | 12 | -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65.7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79.0   | 8  | -1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67.3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70.7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14.6   | 6  | 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375.8   | 3  | 0     |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경기도 17위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있는 수준이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서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12위로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는 19개 산업 중 8개를 제외한 11개 산업들이 경기도 전 산업 평균인 110.9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이는 일부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생산 비중이 커서 평균 이상의 지표값을 갖는 산업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10] 경기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10. 강원도

강원도 고용관련 지표들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업체당종사자수 80.6, 업체당매출액 47.6,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 169.3 이며 1인당급여 79.9 이다. 강원도 고용관련 지표는 강원도 산업체들의 영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매출액, 1인당 급여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지표값을 보인다. 앞의 지표값들의 그러한 방향성으로 인해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표 5-21] 강원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80.6     | 80.6    | 47.6    | 47.6    | 169.3      | 169.3   | 79.9   | 79.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6.6     | 215.3   | 66.6    | 161.4   | 145.2      | 133.3   | 102.4  | 115.7   |
| 광업                      | 357.8    | 518.1   | 302.3   | 419.2   | 118.4      | 123.6   | 131.6  | 167.1   |
| 제조업                     | 73.7     | 133.6   | 47.7    | 142.3   | 154.7      | 93.9    | 73.5   | 95.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65.6     | 465.8   | 49.9    | 2,757.7 | 131.5      | 16.9    | 84.5   | 203.9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3.5     | 164.7   | 55.1    | 83.8    | 151.6      | 196.4   | 93.4   | 120.1   |
| 건설업                     | 78.1     | 142.6   | 44.9    | 83.9    | 173.8      | 169.9   | 64.9   | 87.0    |
| 도매 및 소매업                | 82.3     | 47.1    | 48.6    | 38.8    | 169.5      | 121.3   | 63.4   | 43.7    |
| 운수업                     | 90.6     | 48.6    | 55.6    | 19.2    | 162.9      | 252.3   | 77.0   | 58.4    |
| 숙박 및 음식점업               | 85.0     | 47.0    | 74.3    | 9.1     | 114.5      | 514.9   | 78.3   | 25.2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6.0     | 211.7   | 72.9    | 180.2   | 117.9      | 117.5   | 100.8  | 151.7   |
| 금융 및 보험업                | 79.0     | 258.4   | 36.4    | 480.0   | 216.8      | 53.8    | 64.4   | 98.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1.1     | 60.8    | 66.7    | 35.4    | 136.7      | 172.0   | 79.5   | 57.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9.1     | 106.4   | 31.0    | 40.0    | 190.6      | 266.0   | 82.4   | 101.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7.2     | 258.4   | 74.6    | 63.0    | 90.0       | 410.4   | 109.9  | 97.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2.9     | 855.8   | 84.8    | 528.5   | 97.8       | 161.9   | 92.1   | 172.5   |
| 교육서비스업                  | 105.7    | 174.4   | 102.2   | 48.8    | 103.5      | 357.7   | 106.1  | 131.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7.5     | 205.2   | 86.3    | 51.6    | 113.1      | 397.6   | 91.9   | 88.1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21.2    | 81.6    | 141.7   | 44.7    | 85.5       | 182.5   | 106.3  | 56.9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86.5     | 38.3    | 68.2    | 7.3     | 126.8      | 526.9   | 87.1   | 4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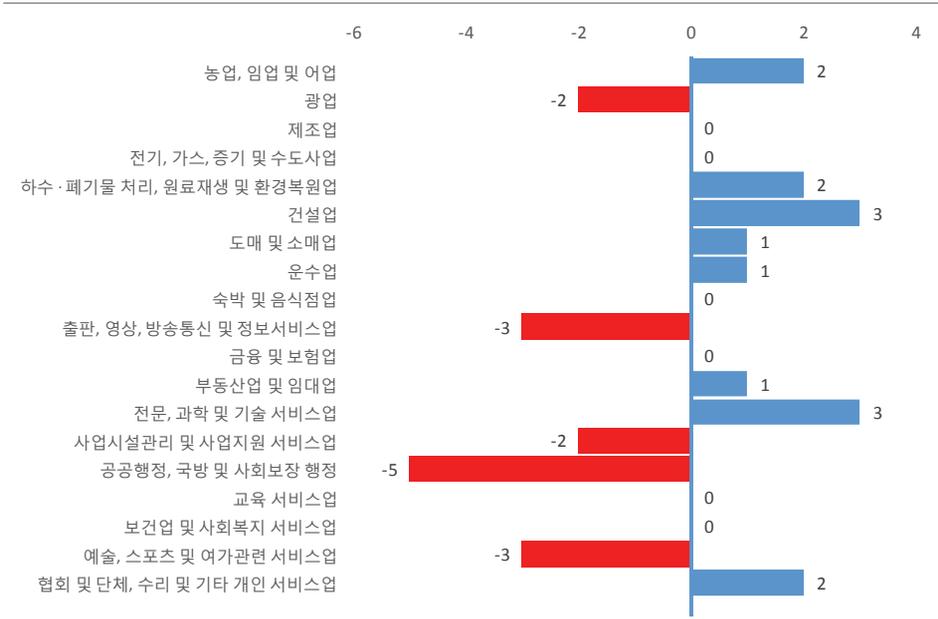
강원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강원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69.3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운수업, 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2]** 강원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강원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69.3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33.3   | 13 | 2     |
| 광업                      | 104.4    | 12 | 123.6   | 14 | -2    |
| 제조업                     | 60.7     | 17 | 93.9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6.9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96.4   | 8  | 2     |
| 건설업                     | 97.8     | 14 | 169.9   | 11 | 3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21.3   | 15 | 1     |
| 운수업                     | 154.9    | 8  | 252.3   | 7  | 1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14.9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17.5   | 16 | -3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강원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53.8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72.0   | 10 | 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66.0   | 6  | 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10.4   | 3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1.9   | 12 | -5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57.7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97.6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182.5   | 9  | -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526.9   | 1  | 2     |

[그림 5-11] 강원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강원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강원도 11위로 크게 변화였는데, 이 산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강원도에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강원도 6위로 순위가 상승하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강원도 13위로 전환되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강원도 8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국 3위에서 강원도 1위로 상승하였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2위로 크게 하락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3위에서 16위로 전환된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6위에서 9위로,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강원도 14위로 크게 하락한다.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있는 수준이었으나, 강원도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위에서 3위로 전환되었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강원도는 19개 산업 중 8개를 제외한 11개 산업들이 강원도 전 산업 평균인 169.3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 11. 총복도

**[표 5-23] 총복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9.0     | 99.0    | 89.6    | 89.6    | 110.5      | 110.5   | 96.9   | 96.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4.5    | 232.9   | 134.0   | 325.0   | 78.0       | 71.7    | 117.0  | 132.2   |
| 광업                | 122.7    | 177.7   | 134.4   | 186.5   | 91.3       | 95.3    | 107.9  | 137.0   |
| 제조업               | 156.2    | 283.0   | 168.8   | 503.9   | 92.6       | 56.2    | 104.6  | 135.5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81.5     | 578.5   | 63.5    | 3,510.5 | 128.3      | 16.5    | 91.0   | 219.6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1.1     | 179.6   | 97.4    | 148.2   | 93.5       | 121.2   | 99.6   | 127.9   |
| 건설업                      | 80.5     | 147.0   | 51.0    | 95.3    | 157.8      | 154.3   | 74.1   | 99.4    |
| 도매 및 소매업                 | 83.9     | 48.0    | 56.9    | 45.5    | 147.5      | 105.5   | 68.7   | 47.4    |
| 운수업                      | 88.9     | 47.7    | 56.5    | 19.5    | 157.5      | 244.0   | 86.2   | 65.4    |
| 숙박 및 음식점업                | 85.4     | 47.2    | 76.9    | 9.5     | 111.1      | 499.8   | 79.1   | 25.5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9.5     | 171.0   | 77.3    | 190.9   | 89.9       | 89.6    | 113.5  | 170.7   |
| 금융 및 보험업                 | 73.1     | 239.1   | 38.8    | 510.5   | 188.7      | 46.8    | 71.9   | 110.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5.1     | 63.5    | 61.2    | 32.5    | 155.4      | 195.5   | 83.4   | 60.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2.5     | 130.5   | 36.2    | 46.7    | 200.2      | 279.4   | 88.6   | 109.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3.1     | 280.9   | 70.2    | 59.2    | 104.1      | 474.7   | 100.0  | 88.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2.3     | 952.6   | 92.4    | 575.8   | 99.9       | 165.4   | 100.4  | 188.0   |
| 교육서비스업                   | 106.1    | 175.0   | 107.9   | 51.5    | 98.3       | 339.8   | 104.3  | 129.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8.1     | 206.4   | 85.8    | 51.3    | 114.3      | 402.2   | 89.8   | 86.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8.7     | 59.7    | 43.7    | 13.8    | 202.9      | 432.9   | 79.5   | 42.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0.7     | 40.2    | 86.5    | 9.2     | 104.8      | 435.5   | 89.9   | 43.2    |

충북도 고용관련 지표들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업체당 종사자수 99.0, 업체당 매출액 89.6이며,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10.5, 1인당 급여 96.9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충북 기업체의 영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업체당 매출액에서 전국 평균 대비 10% 정도 낮은 규모를 보인다.

충북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충북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10.5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숙박 및 음식점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운수업,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건설업, 1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순이다.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충북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충북도 11위로 순위가 변하였으며, 건설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충북도에서는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측정된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충북도 13위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충북도 9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충북도 7위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충북도 4위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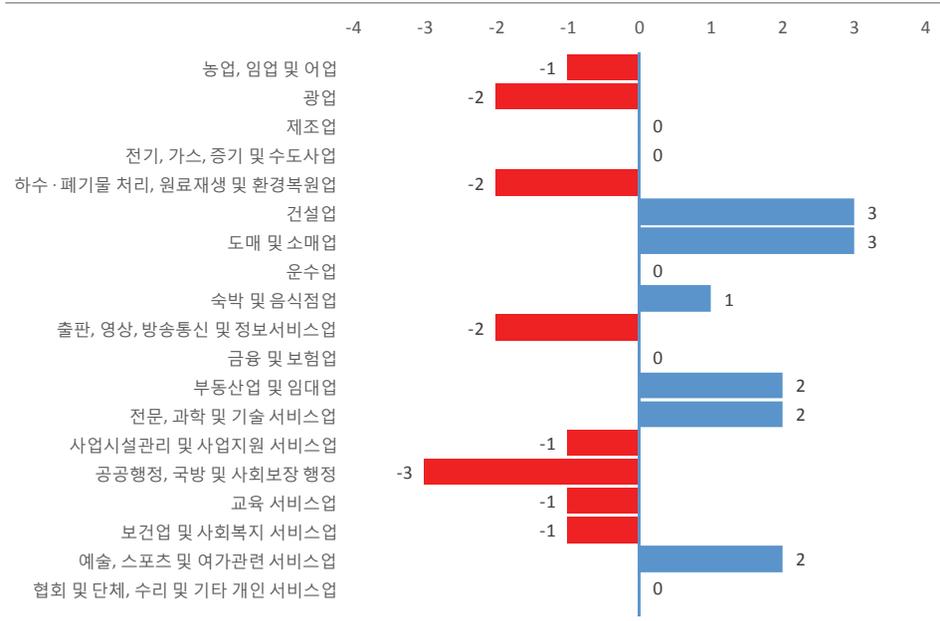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0위로,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충북도 14위로 하락한다.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수준이었으나, 충북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된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충북도 12위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3위에서 15위로 전환된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도는 19개 산업 중 7개를 제외한 12개 산업들이 충북도 전 산업 평균인 110.5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표 5-24] 충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충북         |    | 순위<br>변동 |
|--------------------------|-------------|----|------------|----|----------|
|                          | 억 원당<br>종사자 | 순위 | 전 산업<br>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10.5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71.7       | 16 | -1       |
| 광업                       | 104.4       | 12 | 95.3       | 14 | -2       |
| 제조업                      | 60.7        | 17 | 56.2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6.5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21.2      | 12 | -2       |
| 건설업                      | 97.8        | 14 | 154.3      | 11 | 3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5.5      | 13 | 3        |
| 운수업                      | 154.9       | 8  | 244.0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99.8      | 1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89.6       | 15 | -2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6.8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95.5      | 9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79.4      | 7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74.7      | 2  | -1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5.4      | 10 | -3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39.8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02.2      | 5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432.9      | 4  | 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35.5      | 3  | 0        |

[그림 5-12] 충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12. 충남도

충남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업체당종사자수 100.6, 업체당매출액 126.4,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 79.6, 1인당급여 109.1로 나타났다. 충남도 고용관련 지표는 충남도 기업체 규모가 평균 이상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업체당매출액에서 전국 평균 대비 26% 정도 큰 규모를 보이고 급여 면에서도 평균 이상임을 보인다.

[표 5-25] 충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00.6    | 100.6   | 126.4   | 126.4   | 79.6       | 79.6    | 109.1  | 109.1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2.3     | 205.5   | 123.5   | 299.6   | 74.7       | 68.6    | 104.6  | 118.2   |
| 광업                      | 101.8    | 147.5   | 147.1   | 204.1   | 69.2       | 72.3    | 106.8  | 135.6   |
| 제조업                     | 178.2    | 322.9   | 279.5   | 834.5   | 63.8       | 38.7    | 122.3  | 158.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15.5    | 820.2   | 118.0   | 6,524.9 | 97.9       | 12.6    | 108.1  | 261.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2.2    | 201.5   | 92.3    | 140.4   | 110.8      | 143.5   | 101.2  | 130.0   |
| 건설업                     | 79.6     | 145.3   | 61.0    | 113.9   | 130.5      | 127.6   | 89.4   | 119.9   |
| 도매 및 소매업                | 82.1     | 46.9    | 55.9    | 44.6    | 146.9      | 105.1   | 69.5   | 47.9    |
| 운수업                     | 89.7     | 48.1    | 79.7    | 27.6    | 112.5      | 174.3   | 85.8   | 65.1    |
| 숙박 및 음식점업               | 87.3     | 48.3    | 81.1    | 10.0    | 107.7      | 484.3   | 88.7   | 28.6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9.4     | 146.1   | 70.2    | 173.3   | 84.6       | 84.3    | 122.2  | 183.9   |
| 금융 및 보험업                | 69.3     | 226.7   | 37.6    | 495.8   | 184.2      | 45.7    | 74.8   | 114.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8.5     | 52.4    | 57.7    | 30.6    | 136.0      | 171.1   | 88.5   | 63.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4.3     | 115.7   | 36.8    | 47.4    | 175.0      | 244.3   | 93.8   | 115.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2.3     | 277.8   | 73.9    | 62.3    | 97.8       | 445.8   | 103.0  | 91.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72.1     | 744.1   | 80.3    | 500.0   | 89.8       | 148.8   | 102.5  | 191.9   |
| 교육서비스업                  | 112.1    | 185.0   | 130.6   | 62.3    | 85.9       | 296.8   | 116.8  | 144.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3.0     | 195.5   | 84.1    | 50.3    | 110.5      | 388.8   | 93.4   | 89.6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1.9     | 55.1    | 61.0    | 19.2    | 134.3      | 286.6   | 93.4   | 50.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3.8     | 41.5    | 86.5    | 9.2     | 108.5      | 450.8   | 102.3  | 4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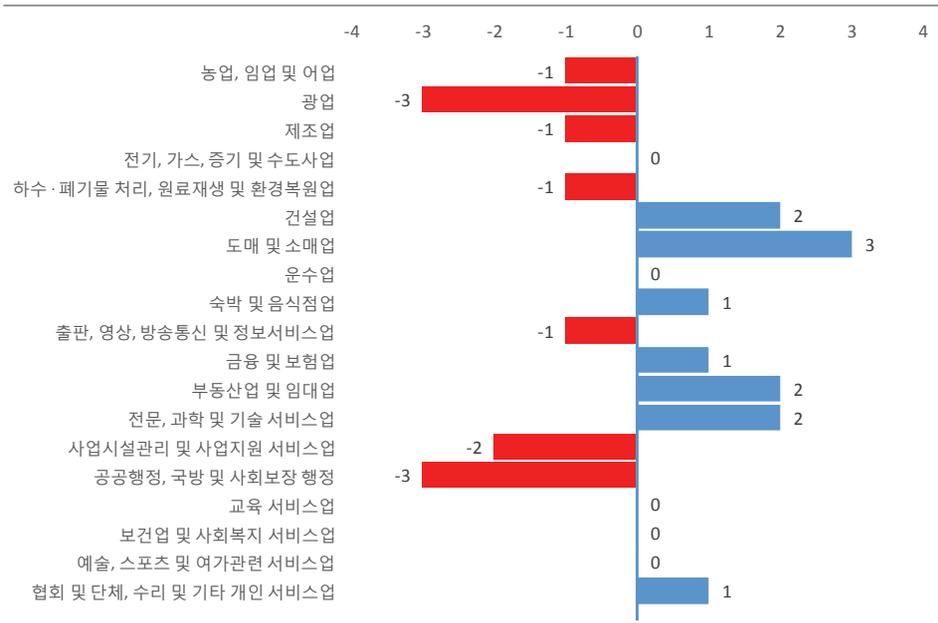
충남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충남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79.6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숙박 및 음식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 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운수업,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 건설업, 13) 도매 및 소매업,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이다.

【표 5-26】 충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충남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79.6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68.6    | 16 | -1    |
| 광업                      | 104.4    | 12 | 72.3    | 15 | -3    |
| 제조업                     | 60.7     | 17 | 38.7    | 18 | -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2.6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43.5   | 11 | -1    |
| 건설업                     | 97.8     | 14 | 127.6   | 12 | 2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5.1   | 13 | 3     |
| 운수업                     | 154.9    | 8  | 174.3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84.3   | 1  | 1     |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충남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84.3    | 14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5.7    | 17 | 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71.1   | 9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44.3   | 7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45.8   | 3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48.8   | 10 | -3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296.8   | 5  | 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88.8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86.6   | 6  | 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50.8   | 2  | 1     |

[그림 5-13] 충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충남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충남도 13위로 상승하고,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충남도 12위로 변화였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충남도 9위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충남도 7위로 전환된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충남도 15위로 하락하였는데,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수준이었으나, 충남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0위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국 1위에서 충남 3위로 하락한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충남도는 19개 산업 중 5개를 제외한 14개 산업들이 충남도 전 산업 평균인 79.6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이는 충남도 소재 자본집약적 산업들의 생산 비중이 커서 나머지 산업들이 보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13. 전북도

**[표 5-27]** 전북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100.6    | 100.6   | 126.4   | 126.4   | 79.6       | 79.6    | 109.1  | 109.1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2.3     | 205.5   | 123.5   | 299.6   | 74.7       | 68.6    | 104.6  | 118.2   |
| 광업                      | 101.8    | 147.5   | 147.1   | 204.1   | 69.2       | 72.3    | 106.8  | 135.6   |
| 제조업                     | 178.2    | 322.9   | 279.5   | 834.5   | 63.8       | 38.7    | 122.3  | 158.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15.5    | 820.2   | 118.0   | 6,524.9 | 97.9       | 12.6    | 108.1  | 261.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2.2    | 201.5   | 92.3    | 140.4   | 110.8      | 143.5   | 101.2  | 130.0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건설업                      | 79.6     | 145.3   | 61.0    | 113.9   | 130.5      | 127.6   | 89.4   | 119.9   |
| 도매 및 소매업                 | 82.1     | 46.9    | 55.9    | 44.6    | 146.9      | 105.1   | 69.5   | 47.9    |
| 운수업                      | 89.7     | 48.1    | 79.7    | 27.6    | 112.5      | 174.3   | 85.8   | 65.1    |
| 숙박 및 음식점업                | 87.3     | 48.3    | 81.1    | 10.0    | 107.7      | 484.3   | 88.7   | 28.6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9.4     | 146.1   | 70.2    | 173.3   | 84.6       | 84.3    | 122.2  | 183.9   |
| 금융 및 보험업                 | 69.3     | 226.7   | 37.6    | 495.8   | 184.2      | 45.7    | 74.8   | 114.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8.5     | 52.4    | 57.7    | 30.6    | 136.0      | 171.1   | 88.5   | 63.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4.3     | 115.7   | 36.8    | 47.4    | 175.0      | 244.3   | 93.8   | 115.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2.3     | 277.8   | 73.9    | 62.3    | 97.8       | 445.8   | 103.0  | 91.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72.1     | 744.1   | 80.3    | 500.0   | 89.8       | 148.8   | 102.5  | 191.9   |
| 교육서비스업                   | 112.1    | 185.0   | 130.6   | 62.3    | 85.9       | 296.8   | 116.8  | 144.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3.0     | 195.5   | 84.1    | 50.3    | 110.5      | 388.8   | 93.4   | 89.6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1.9     | 55.1    | 61.0    | 19.2    | 134.3      | 286.6   | 93.4   | 50.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3.8     | 41.5    | 86.5    | 9.2     | 108.5      | 450.8   | 102.3  | 49.1    |

전북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업체당종사자수 84.6, 업체당매출액 63.2,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 133.9, 1인당급여 87.2 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전북도 기업체의 영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북의 업체당 종사자수와 1인당 급여액이 전국 평균의 85% 내외 수준이고, 특히 업체당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이와 연결되어서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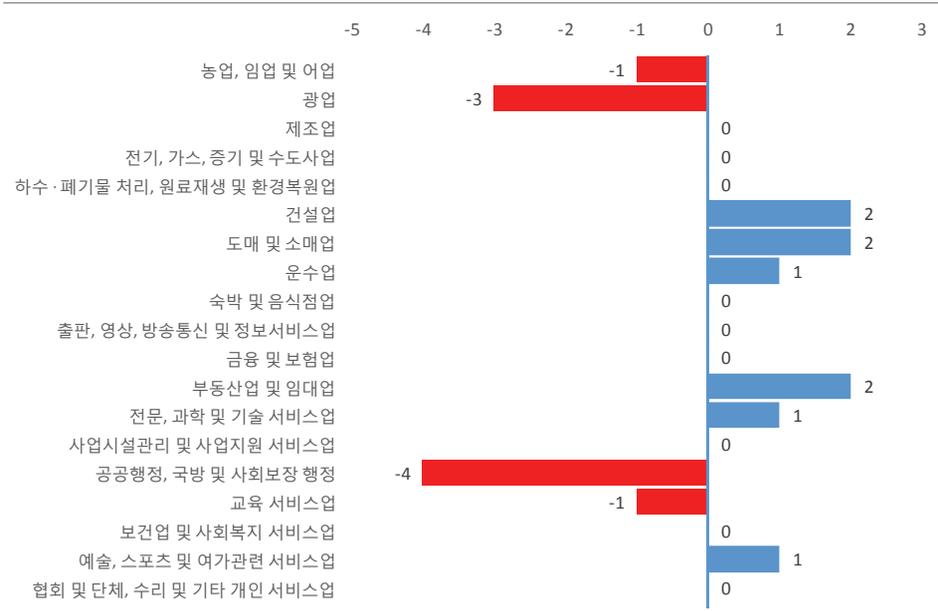
전북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전북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33.9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운수업,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건설업 순이다.

**[표 5-28] 전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전북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33.9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66.1    | 16 | -1    |
| 광업                       | 104.4    | 12 | 100.3   | 15 | -3    |
| 제조업                      | 60.7     | 17 | 63.0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5.9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66.8   | 10 | 0     |
| 건설업                      | 97.8     | 14 | 153.1   | 12 | 2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7.4   | 14 | 2     |
| 운수업                      | 154.9    | 8  | 283.3   | 7  | 1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25.5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33.0   | 13 | 0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51.3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96.0   | 9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71.0   | 8  | 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553.7   | 1  | 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0.9   | 11 | -4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59.8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18.1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397.7   | 5  | 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517.7   | 3  | 0     |

[그림 5-14] 전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전북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가 상승한 산업으로는 건설업이 전국 14위에서 전북도 12위로 변화하였는데, 이 산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전북도에서는 고용효과가 좀 더 있는 산업으로 측정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전북도 14위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전북도 9위로 상승하였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1위로 하락하고,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전북도 15위로 하락한다.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수준이었으나, 전북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되었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북도는 19개 산업 중 7개를 제외한 12개 산업들이 전북도 전 산업 평균인 133.9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 14. 전남도

[표 5-29] 전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87.0     | 87.0    | 95.4    | 95.4    | 91.3       | 91.3    | 95.2   | 95.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7.7     | 217.6   | 87.8    | 213.0   | 111.2      | 102.1   | 77.8   | 87.9    |
| 광업                      | 41.0     | 59.4    | 14.0    | 19.4    | 293.5      | 306.5   | 41.2   | 52.4    |
| 제조업                     | 98.1     | 177.8   | 206.2   | 615.5   | 47.6       | 28.9    | 105.5  | 136.6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68.0     | 483.1   | 55.3    | 3,059.0 | 123.0      | 15.8    | 94.3   | 227.7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5.8     | 188.9   | 76.0    | 115.6   | 126.1      | 163.4   | 102.1  | 131.2   |
| 건설업                     | 102.6    | 187.3   | 72.5    | 135.4   | 141.5      | 138.3   | 88.4   | 118.5   |
| 도매 및 소매업                | 76.7     | 43.8    | 47.0    | 37.6    | 163.1      | 116.7   | 58.9   | 40.6    |
| 운수업                     | 117.2    | 62.8    | 93.3    | 32.3    | 125.6      | 194.6   | 94.5   | 71.7    |
| 숙박 및 음식점업               | 80.8     | 44.7    | 68.8    | 8.5     | 117.5      | 528.3   | 71.5   | 23.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8.8     | 144.7   | 67.1    | 165.8   | 87.6       | 87.3    | 123.4  | 185.8   |
| 금융 및 보험업                | 71.6     | 234.2   | 36.8    | 485.2   | 194.4      | 48.3    | 67.7   | 103.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2.5    | 68.4    | 71.1    | 37.7    | 144.2      | 181.5   | 90.8   | 65.4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5.6     | 118.0   | 36.0    | 46.4    | 182.2      | 254.4   | 87.3   | 107.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9.9     | 230.1   | 74.0    | 62.4    | 80.9       | 368.7   | 120.1  | 106.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57.1     | 588.8   | 60.1    | 374.4   | 95.0       | 157.3   | 100.1  | 187.5   |
| 교육서비스업                  | 96.4     | 159.1   | 97.7    | 46.6    | 98.7       | 341.2   | 113.5  | 140.5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7.2    | 225.4   | 92.6    | 55.4    | 115.7      | 406.9   | 91.8   | 88.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9.3     | 66.8    | 57.2    | 18.0    | 173.6      | 370.4   | 103.1  | 55.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85.7     | 38.0    | 74.1    | 7.9     | 115.6      | 480.7   | 99.2   | 4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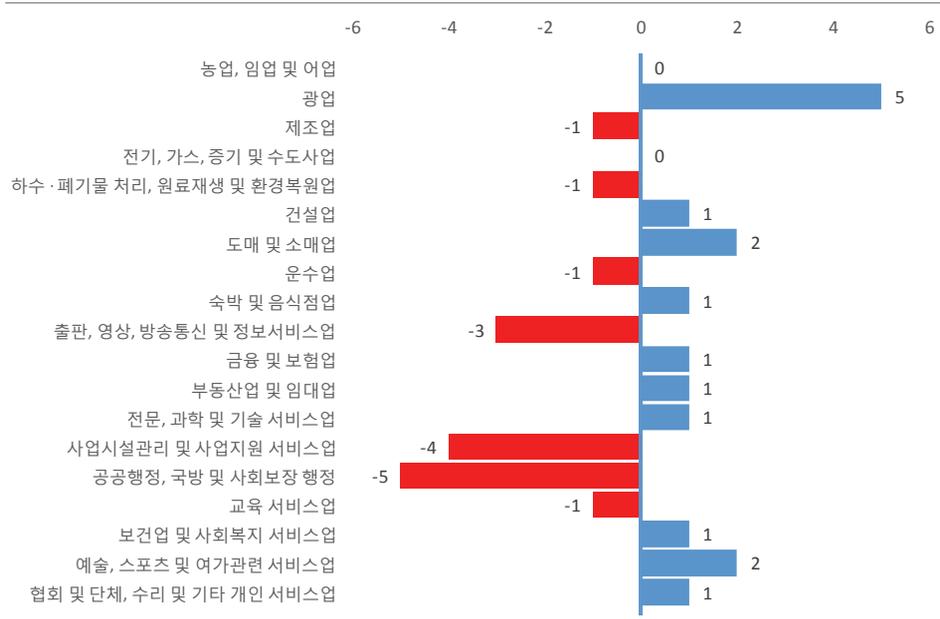
전남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당종사자수는 87.0, 업체당 매출액 95.4,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 79.6이며, 1인당급여 109.1로 나타났다. 즉, 고용관련 지표는 전남도 기업체 규모가 전국 평균 수준에 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당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업체당매출액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1인당 급여 면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표값을 보이는데, 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이하인 것은 업체의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 자본집약적 생산기술의 결과라고 보인다.

전남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전남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91.3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숙박 및 음식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광업,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운수업,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 건설업, 14) 도매 및 소매업, 15) 농업, 임업 및 어업 순이다.

**[표 5-30]** 전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전남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91.3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02.1   | 15 | 0     |
| 광업                       | 104.4    | 12 | 306.5   | 7  | 5     |
| 제조업                      | 60.7     | 17 | 28.9    | 18 | -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5.8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63.4   | 11 | -1    |
| 건설업                      | 97.8     | 14 | 138.3   | 13 | 1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16.7   | 14 | 2     |
| 운수업                      | 154.9    | 8  | 194.6   | 9  | -1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28.3   | 1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87.3    | 16 | -3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8.3    | 17 | 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81.5   | 10 | 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54.4   | 8  | 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368.7   | 5  | -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57.3   | 12 | -5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41.2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06.9   | 3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370.4   | 4  | 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80.7   | 2  | 1     |

[그림 5-15] 전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전남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전남도 7위로,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전남도 14위로 상승하였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전남도 4위로 순위가 오른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전남도 12위로 하락하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국 1위에서 전남도 5위로 하락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국 13위에서 전남도 16위로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도는 19개 산업 중 4개를 제외한 15개 산업들이 전남도 전 산업 평균인 91.3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이는 전남도 소재 자본집약적 산업들의 생산 비중이 커져 나머지 산업들이 보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15. 경북도

[표 5-31] 경북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0.4     | 90.4    | 92.8    | 92.8    | 97.4       | 97.4    | 99.7   | 99.7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3     | 203.3   | 81.2    | 197.1   | 112.3      | 103.1   | 97.5   | 110.1   |
| 광업                      | 118.9    | 172.3   | 127.3   | 176.6   | 93.4       | 97.5    | 98.6   | 125.2   |
| 제조업                     | 124.8    | 226.2   | 149.5   | 446.4   | 83.5       | 50.7    | 104.9  | 135.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96.0     | 681.8   | 76.1    | 4,209.7 | 126.1      | 16.2    | 95.8   | 231.3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6.8     | 171.1   | 113.2   | 172.3   | 76.6       | 99.3    | 106.3  | 136.6   |
| 건설업                     | 72.6     | 132.5   | 56.5    | 105.6   | 128.4      | 125.6   | 83.1   | 111.4   |
| 도매 및 소매업                | 76.9     | 44.0    | 51.2    | 40.9    | 150.3      | 107.5   | 63.5   | 43.8    |
| 운수업                     | 87.5     | 46.9    | 77.4    | 26.8    | 113.0      | 175.1   | 95.8   | 72.7    |
| 숙박 및 음식점업               | 78.4     | 43.3    | 66.3    | 8.1     | 118.3      | 531.9   | 70.8   | 22.8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7.5     | 141.5   | 55.8    | 137.8   | 103.2      | 102.7   | 109.7  | 165.1   |
| 금융 및 보험업                | 64.5     | 211.0   | 33.2    | 437.5   | 194.2      | 48.2    | 76.5   | 117.3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3.9     | 56.0    | 40.8    | 21.7    | 205.3      | 258.4   | 76.3   | 54.9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7.9     | 122.2   | 65.7    | 84.7    | 103.4      | 144.3   | 112.5  | 138.8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2.7     | 241.2   | 64.4    | 54.3    | 97.5       | 444.3   | 102.3  | 90.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62.1     | 641.1   | 64.1    | 399.1   | 97.0       | 160.6   | 98.8   | 185.1   |
| 교육서비스업                  | 94.2     | 155.4   | 101.0   | 48.2    | 93.3       | 322.5   | 111.6  | 138.2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5.5     | 201.0   | 82.3    | 49.2    | 116.1      | 408.2   | 90.0   | 86.3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2.2     | 62.0    | 60.6    | 19.1    | 152.1      | 324.4   | 104.4  | 55.9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87.2     | 38.6    | 68.1    | 7.3     | 128.1      | 532.4   | 92.0   | 44.1    |

경북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당종사자수 90.4, 업체당매출액 92.8,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 97.4이며, 1인당급여는 99.7로 분석된다. 경북도 고용관련 지표는 경북도 기업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평균수준의 90% 정도 수준이고, 1인당 급여액은 전국 평균 수준이며,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경북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경북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97.4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운수업, 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건설업, 12) 도매 및 소매업, 13) 농업, 임업 및 어업,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 광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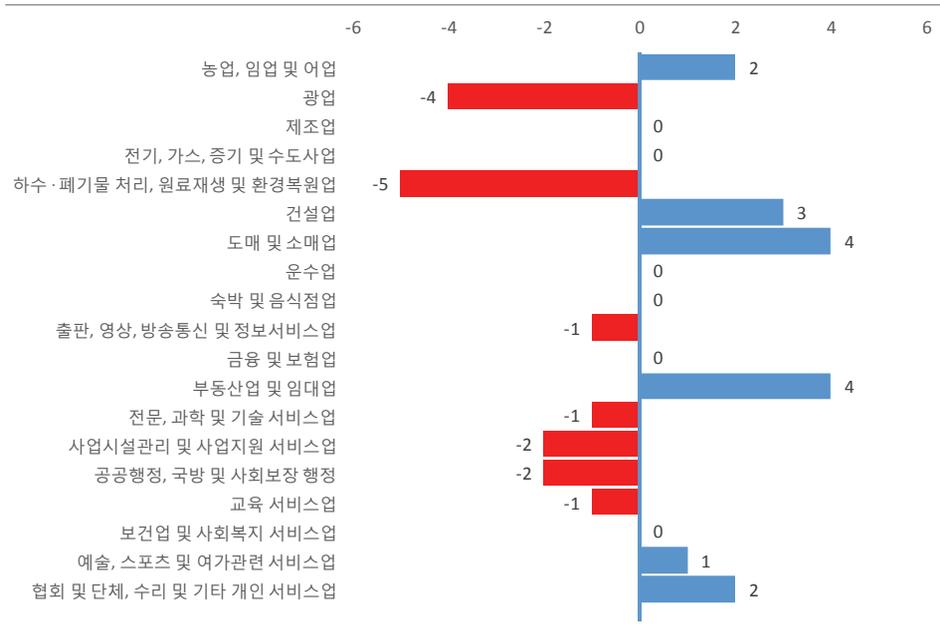
【표 5-32】 경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경북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97.4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03.1   | 13 | 2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전국       |    | 경북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광업                       | 104.4    | 12 | 97.5    | 16 | -4    |
| 제조업                      | 60.7     | 17 | 50.7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6.2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99.3    | 15 | -5    |
| 건설업                      | 97.8     | 14 | 125.6   | 11 | 3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7.5   | 12 | 4     |
| 운수업                      | 154.9    | 8  | 175.1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31.9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02.7   | 14 | -1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8.2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258.4   | 7  | 4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144.3   | 10 | -1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44.3   | 3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0.6   | 9  | -2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22.5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08.2   | 4  | 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324.4   | 5  | 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532.4   | 1  | 2     |

[그림 5-16] 경북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경북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전국 16위에서 경북도 12위로 크게 상승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경북도 7위로 상승한다.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경북도 11위로 순위가 3계단 오르는데, 이 산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경북도에서는 고용효과가 좀 더 있는 산업으로 측정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경북도 13위로 상승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국 3위에서 경북 1위로 상승한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전국 10위에서 경북 15위로,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경북도 16위로 하락한다.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수준이었으나, 경북에서는 전 산업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국 1위에서 경북도 3위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경북 9위로 하락함을 볼 수 있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경북도는 19개 산업 중 3개를 제외한 16개 산업들이 경북도 전 산업 평균인 97.4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 16. 경남도

[표 5-33] 경남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96.3     | 96.3    | 84.8    | 84.8    | 113.6      | 113.6   | 98.8   | 98.8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8.3     | 219.0   | 84.8    | 205.8   | 115.9      | 106.4   | 93.5   | 105.7   |
| 광업                      | 101.1    | 146.4   | 120.0   | 166.4   | 84.2       | 87.9    | 102.2  | 129.8   |
| 제조업                     | 128.2    | 232.3   | 111.6   | 333.1   | 114.9      | 69.8    | 106.0  | 137.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81.2     | 576.9   | 78.8    | 4,358.6 | 103.1      | 13.2    | 94.5   | 228.2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91.1     | 179.6   | 92.6    | 140.9   | 98.4       | 127.5   | 100.4  | 129.0   |
| 건설업                     | 84.3     | 153.9   | 54.8    | 102.3   | 153.9      | 150.5   | 81.0   | 108.7   |
| 도매 및 소매업                | 85.1     | 48.6    | 60.7    | 48.6    | 140.1      | 100.2   | 71.2   | 49.1    |
| 운수업                     | 97.4     | 52.2    | 71.2    | 24.6    | 136.9      | 212.1   | 83.1   | 63.1    |
| 숙박 및 음식점업               | 84.0     | 46.4    | 73.2    | 9.0     | 114.7      | 515.8   | 72.5   | 23.4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9.7     | 171.5   | 69.2    | 170.9   | 100.7      | 100.3   | 108.9  | 163.9   |
| 금융 및 보험업                | 76.8     | 251.3   | 41.2    | 542.6   | 186.5      | 46.3    | 73.5   | 112.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7.6     | 58.4    | 138.9   | 73.6    | 63.1       | 79.4    | 92.0   | 66.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5.8     | 136.4   | 46.8    | 60.3    | 162.1      | 226.3   | 99.3   | 122.6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68.8     | 264.6   | 73.2    | 61.7    | 94.1       | 428.8   | 100.2  | 89.0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76.9     | 793.6   | 77.3    | 481.8   | 99.5       | 164.7   | 98.2   | 183.8   |
| 교육서비스업                   | 83.5     | 137.8   | 77.1    | 36.8    | 108.3      | 374.3   | 102.1  | 126.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97.3     | 204.7   | 91.1    | 54.5    | 106.8      | 375.7   | 99.1   | 95.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3.6     | 63.0    | 47.7    | 15.0    | 196.3      | 418.9   | 95.4   | 51.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0.3     | 40.0    | 74.8    | 8.0     | 120.6      | 501.4   | 84.1   | 40.4    |

경남도 고용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당종사자수 96.3, 업체당매출액 84.8,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13.6이며, 1인당 급여 98.8이다. 지표는 경남도 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수준에 가까우나, 특히 업체당매출액에서 전국 평균 대비 15% 정도 낮은 규모를 보임을 보여준다. 또한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수준에 근접한다.

경남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경남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13.6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숙박 및 음식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교육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운수업, 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건설업,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순이다.

**【표 5-34】** 경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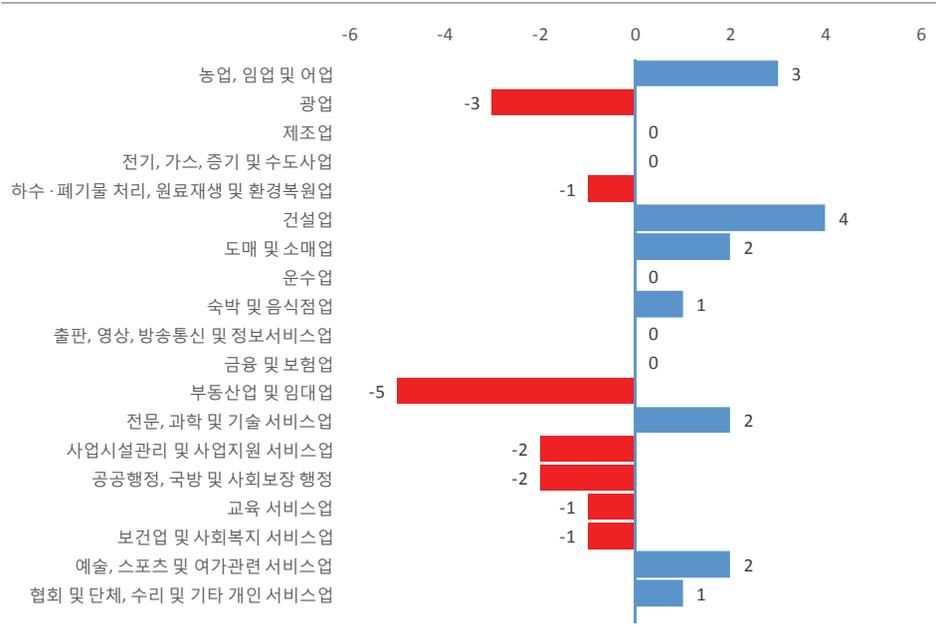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서울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13.6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06.4   | 12 | 3     |
| 광업          | 104.4    | 12 | 87.9    | 15 | -3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서울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제조업                      | 60.7     | 17 | 69.8    | 17 | 0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13.2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27.5   | 11 | -1    |
| 건설업                      | 97.8     | 14 | 150.5   | 10 | 4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0.2   | 14 | 2     |
| 운수업                      | 154.9    | 8  | 212.1   | 8  | 0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515.8   | 1  | 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100.3   | 13 | 0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6.3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79.4    | 16 | -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26.3   | 7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428.8   | 3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64.7   | 9  | -2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74.3   | 6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375.7   | 5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418.9   | 4  | 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501.4   | 2  | 1     |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경남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경남도 10위로 순위가 4단계 상승하였다. 이 산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경남도에서는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측정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경남 12위로,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경남도 14위로 상승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경남도 7위로 전환되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경남도 4위로 상승하였다.

[그림 5-17] 경남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경남 16위로 하락하고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경남도 15위로 3계단 내려갔다.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다소 있는 수준이었으나, 경남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국 1위에서 경남 3위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경남 9위로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경남도는 19개 산업 중 8개를 제외한 11개 산업들이 경남도 전 산업 평균인 113.6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 17. 제주도

[표 5-35] 제주도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전 산업                    | 84.1     | 84.1    | 51.1    | 51.1    | 164.5      | 164.5   | 81.9   | 81.9    |
| 농업, 임업 및 어업             | 74.8     | 166.5   | 38.0    | 92.1    | 197.0      | 180.9   | 51.4   | 58.0    |
| 광업                      | 166.5    | 241.1   | 282.2   | 391.3   | 59.0       | 61.6    | 116.2  | 147.6   |
| 제조업                     | 51.5     | 93.4    | 24.6    | 73.4    | 209.7      | 127.3   | 54.6   | 70.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95.7     | 679.8   | 60.3    | 3,334.1 | 158.8      | 20.4    | 95.6   | 230.8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85.5     | 168.6   | 56.5    | 86.0    | 151.4      | 196.1   | 103.4  | 132.9   |
| 건설업                     | 93.2     | 170.3   | 59.9    | 111.9   | 155.6      | 152.1   | 87.1   | 116.8   |
| 도매 및 소매업                | 95.4     | 54.5    | 66.9    | 53.5    | 142.5      | 101.9   | 77.8   | 53.7    |
| 운수업                     | 89.8     | 48.1    | 56.5    | 19.6    | 158.9      | 246.2   | 74.5   | 56.6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9.9    | 60.8    | 114.6   | 14.1    | 95.9       | 431.1   | 116.4  | 37.5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07.3    | 264.0   | 119.9   | 296.1   | 89.5       | 89.2    | 90.7   | 136.4   |
| 금융 및 보험업                | 81.3     | 265.9   | 48.9    | 644.2   | 166.3      | 41.3    | 77.0   | 118.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3.5     | 55.7    | 83.1    | 44.1    | 100.4      | 126.4   | 93.6   | 67.4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4.2     | 115.6   | 36.7    | 47.2    | 175.3      | 244.7   | 88.9   | 109.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1.3     | 158.8   | 55.5    | 46.8    | 74.4       | 339.1   | 124.7  | 110.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8.1     | 908.9   | 121.8   | 758.9   | 72.3       | 119.8   | 114.8  | 215.0   |
| 교육서비스업                  | 89.1     | 147.0   | 90.4    | 43.2    | 98.6       | 340.7   | 101.2  | 125.3   |

| 산업 대분류                   | 업체당 종사자수 |         | 업체당 매출액 |         | 1억 원당 종사자수 |         | 1인당 급여 |         |
|--------------------------|----------|---------|---------|---------|------------|---------|--------|---------|
|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전국 대비  | 전 산업 대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1.2    | 212.9   | 86.2    | 51.5    | 117.4      | 412.9   | 96.3   | 92.3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4.6    | 137.7   | 208.4   | 65.7    | 98.2       | 209.4   | 144.4  | 77.4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7.6     | 43.2    | 81.9    | 8.7     | 119.2      | 495.3   | 89.7   | 43.1    |

제주도 고용관련 지표들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업체당 종사자수는 84.1, 업체당 매출액 51.1, 매출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64.5, 1인당 급여는 81.9이다. 지표는 제주도 산업체들의 영세성을 드러내는데,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인당 급여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지표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앞의 지표값들의 방향성으로 인해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

제주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제주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종사자수의 지표값인 164.5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농업, 임업 및 어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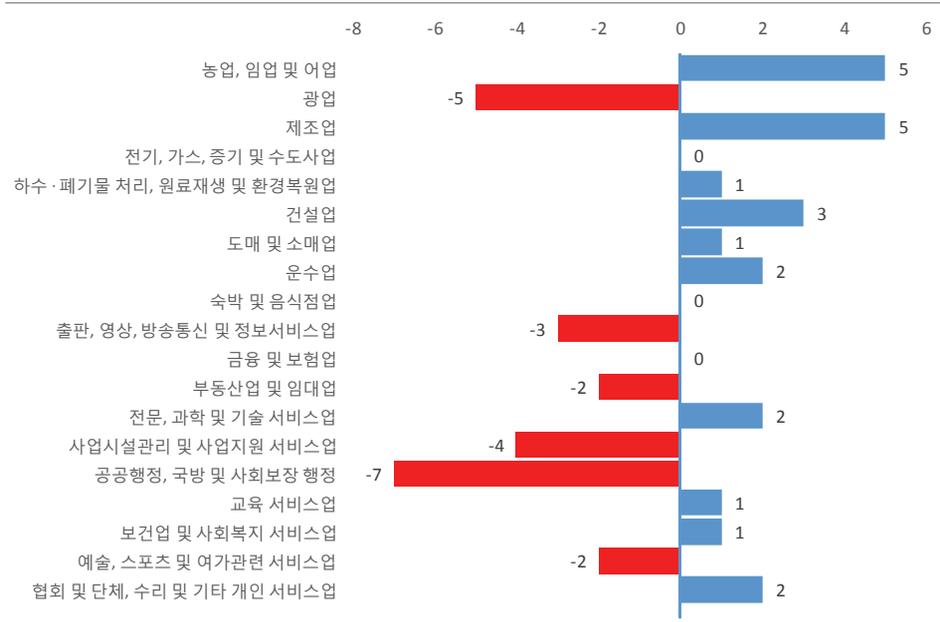
**[표 5-36] 제주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제주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전 산업        | 100.0    |    | 164.5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91.8     | 15 | 180.9   | 10 | 5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산업 대분류                   | 전국       |    | 제주      |    | 순위 변동 |
|--------------------------|----------|----|---------|----|-------|
|                          | 억 원당 종사자 | 순위 | 전 산업 대비 | 순위 |       |
| 광업                       | 104.4    | 12 | 61.6    | 17 | -5    |
| 제조업                      | 60.7     | 17 | 127.3   | 12 | 5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8     | 19 | 20.4    | 19 | 0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9.6    | 10 | 196.1   | 9  | 1     |
| 건설업                      | 97.8     | 14 | 152.1   | 11 | 3     |
| 도매 및 소매업                 | 71.5     | 16 | 101.9   | 15 | 1     |
| 운수업                      | 154.9    | 8  | 246.2   | 6  | 2     |
| 숙박 및 음식점업                | 449.7    | 2  | 431.1   | 2  | 0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99.6     | 13 | 89.2    | 16 | -3    |
| 금융 및 보험업                 | 24.8     | 18 | 41.3    | 18 | 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5.8    | 11 | 126.4   | 13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9.6    | 9  | 244.7   | 7  | 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55.9    | 1  | 339.1   | 5  | -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5.6    | 7  | 119.8   | 14 | -7    |
| 교육서비스업                   | 345.6    | 5  | 340.7   | 4  | 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1.7    | 4  | 412.9   | 3  | 1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13.4    | 6  | 209.4   | 8  | -2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15.6    | 3  | 495.3   | 1  | 2     |

[그림 5-18] 제주도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제주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가 상승한 산업들을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국 15위에서 제주도 10위로 크게 상승 전환됨으로써 고용효과도 큰 것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은 전국 17위에서 제주도 12위로 상승하였고, 건설업은 전국 14위에서 제주도 11위로 크게 변화하였다. 운수업은 전국 8위에서 제주도 6위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국 9위에서 제주도 6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 분류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국 3위에서 제주도 1위로 상승하였다.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4위로 크게 하락하고, 고용효과도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제주도 17위로 크게 하락하여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의 40% 정도에 불과한 값으로서 고용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분류되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국 1위에서 제주도 5위로 크게 낮아지

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3위에서 제주도 16위로 전환된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제주도 13위로 하락하였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6위에서 제주도에서는 8위로 전환되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전국 순위와 제주도 순위 간 변화가 심한 편이었으며, 특히 전국 순위 대비 변동이 7계단이나, 5계단 정도로 큰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고용효과 순위에서도 다른 시도와는 다른 산업 순위를 보인다.

매출액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도는 19개 산업 중 9개를 제외한 10개 산업들이 제주도 전 산업 평균인 164.5보다 큰 지표값을 보인다.

### 제3절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전국의 19개 산업 대분류별로 각 산업의 노동집약도와 고용효과 여부를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료로는 5년 단위의 사업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공표되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시도별 산업별 통계를 적용하여 시도별 분석으로까지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산업별 특성에 대해서도 전국 산업대분류별 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되, 전국과 비교하여 각 시도의 고용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효과의 순위변동을 함께 제시하였다.

고용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산업별, 시도별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매출액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종사자수가 많은 산업인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매출액이 큰 편인지를 보고자 함이다.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인당 급여는 해당 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일이 용이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경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밀돌고 있으며, 월별로 집계되는 산업별, 연령별 취업자수 증가의 부진은 고용창출이 이 연구의 분석범위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현안임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국내 침체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위기가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의 특정 산업의 거점 도시/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국지적 고용위기 지역이 광역 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쏠려있으나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을 광역단위로 적용한 것은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고용구조 분석을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급여를 위주로 분석하여 고용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을 뿐, 질적 측면은 간과할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에서는 침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투입이 필요할 때, 정책적 수단이 집중해야할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에 적용된 1억 원당 종사자수의 지표값이 갖는 의미는 특정 산업에서 1억원의 매출당 종사자 수가 전체 산업들의 평균보다 크면, 노동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보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운수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광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억 원당 종사자수 기준에 의해 고용효과가 가장 낮은 산업은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초기 투자의 규모가 큰 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주로 3차 서비스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 제6장



# 지역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일자리 재정의 국가 간 비교

제2절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

제3절 지역일자리 대책의 개선 방향



이번 장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 재정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의 일자리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통해 재정의 상대적 배분 또한 비교가 가능하다. 제2절에서는 중앙 정부의 일자리 재정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를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정책수단을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침체지역 일자리 추진계획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이끌어 낸다.

## 제1절 일자리 재정의 국가 간 비교

개별 국가의 일자리재정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자체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평가기준의 설정을 통해서 재정일자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OECD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비교하기로 한다.

### 1. 일자리 재정사업의 유형

국가 간 일자리재정의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일자리재정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일자리재정의 유형을 알아본 다음 이를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일자리재정을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부문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일자리문제에 대한 사회적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0년 7월부터 일자리예산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2011년부터 적용함으로써 일자리관련 예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6가지 유형을 알아보면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인 직접일자리사업, 구직자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직업훈련사업, 일자리지원센터 등의 관련기관을 통해서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 고용서비스사업,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등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사업, 그리고 일자리의 양적확대에 중요한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창업지원사업이 있다. 이를 OECD의 관련 사업들과 같이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

| 우리나라<br>일자리재정사업<br>유형 | 주요 내용  | 대표사업                      | OECD의 일자리사업<br>관련 공공지출 유형                  |
|-----------------------|--|---------------------------|--|
| 직접일자리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참여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br>(보건복지부)       | 직접일자리창출<br>(Direct job creation)           |
| 직업훈련                  | 전문기술능력이나 현장직무훈련 등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성이 강한 훈련을 실시               | 사업주직업훈련<br>지원금<br>(고용노동부) | 직업훈련<br>(Training)                         |
| 고용서비스                 |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br>지원<br>(고용노동부)  | 공공고용서비스<br>(Public employment<br>services) |
| 고용장려금                 |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자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 | 모성보호<br>육아지원<br>(고용노동부)   | 고용 인센티브<br>(Employment<br>incentives)      |
| 창업지원                  |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또는 직접 자금을 제공                      | 창업기업자금<br>(중소기업벤처부)       | 창업인센티브<br>(Start-up<br>incentives)         |

| 우리나라<br>일자리재정사업<br>유형 | 주요 내용  | 대표사업            | OECD의 일자리사업<br>관련 공공지출 유형  |
|-----------------------|--|-----------------|--|
| 실업소득<br>유지지원          |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br>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자금으로<br>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지원 | 구직급여<br>(고용노동부) | 실직자 소득보장 및<br>지원<br>(Out-of-work<br>income maintenance<br>and support)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예산안 분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2018과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Labor Markets, 2019을 토대로 재작성  
김종웅·이우형, 2018B, 재인용

위의 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이 OECD의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사업의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2010년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을 구분할 때 OECD분류기준 등을 참고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각 일자리재정유형별 대표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은 각 일자리재정의 유형별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업들로서 사업규모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2. 일자리재정사업의 GDP대비 비율

일자리재정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선진국 그룹으로 평가받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재정사업을 OECD와 비교하기 위해 OECD에서 일자리관련 공공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현재 OECD에서는 일자리관련 공공지출로 공공고용서비스를 비롯하여 8가지로 분류<sup>21</sup>하고 있으며

<sup>21</sup> OECD는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을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직업훈련(Training), 고용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s), 장애인고용 및 재활(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직접일자리창출(Direct job creation), 창업인센티브(Start-up incentives),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조기은퇴지원(Early retirement)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 구직자의 직업탐색을 지원하는 지출로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인센티브는 고용주의 인력확보 인센티브(recruitment incentives), 고용유지 인센티브(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s),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에 지원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은

로 일자리재정의 분류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장애인고용 및 재활사업과 조기은퇴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은퇴지원사업의 경우는 관련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장애인고용 및 재활사업은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에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에 있어서 8가지 유형의 평균값이 0.68%로 OECD 평균값인 1.19%에 비해서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서 OECD 평균의 절반이하로 아주 미흡한 상태이므로 직접일자리창출 유형을 제외한 일자리재정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의 유형별 규모에 있어서 정책변화가 쉽지 않은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을 제외하게 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인센티브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일자리재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출규모가 OECD 평균인 0.07%의 3배 규모인 0.2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노인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결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조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규모에 대한 축소조정 및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구직급여(unemployment benefits),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체당금지급(redundancy and bankruptcy compensation) 등이다.

【표 6-2】 OECD국가의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2015년 기준)

(단위: GDP의 %)

| 국가     | 공공<br>고용<br>서비스 | 직업<br>훈련 | 고용<br>인센<br>티브 | 장애인<br>고용<br>및 재활 | 직접<br>일자리<br>창출 | 창업<br>인센<br>티브 | 실직자<br>소득보장<br>및 지원 | 조기<br>은퇴<br>지원 | 소계   |
|--------|-----------------|----------|----------------|-------------------|-----------------|----------------|---------------------|----------------|------|
| 호주     | 0.14            | 0.01     | 0.01           | 0.06              | 0.01            | 0.00           | 0.68                | 0.00           | 0.91 |
| 오스트리아  | 0.17            | 0.46     | 0.04           | 0.02              | 0.05            | 0.01           | 1.37                | 0.12           | 2.23 |
| 벨기에    | 0.20            | 0.16     | 0.16           | 0.14              | 0.06            | 0.00           | 1.20                | 0.51           | 2.43 |
| 캐나다    | 0.12            | 0.07     | 0.01           | 0.01              | 0.01            | 0.00           | 0.62                | 0.00           | 0.86 |
| 덴마크    | 0.39            | 0.60     | 0.28           | 0.78              | 0.00            | 0.00           | 1.08                | 0.20           | 3.33 |
| 핀란드    | 0.15            | 0.48     | 0.12           | 0.12              | 0.13            | 0.01           | 1.93                | 0.00           | 2.94 |
| 프랑스    | 0.25            | 0.37     | 0.05           | 0.09              | 0.22            | 0.03           | 1.97                | 0.00           | 2.98 |
| 독일     | 0.36            | 0.20     | 0.02           | 0.03              | 0.01            | 0.01           | 0.86                | 0.02           | 1.51 |
| 헝가리    | 0.07            | 0.03     | 0.05           | 0.00              | 0.74            | 0.01           | 0.25                | 0.00           | 1.14 |
| 아일랜드   | 0.09            | 0.23     | 0.05           | 0.01              | 0.20            | 0.00           | 1.24                | 0.01           | 1.83 |
| 이탈리아   | 0.09            | 0.17     | 0.23           | 0.00              | 0.00            | 0.02           | 1.28                | 0.01           | 1.80 |
| 한국     | 0.04            | 0.04     | 0.04           | 0.02              | 0.20            | 0.02           | 0.32                | 0.00           | 0.68 |
| 룩셈부르크  | 0.06            | 0.05     | 0.39           | 0.00              | 0.15            | 0.00           | 0.53                | 0.15           | 1.34 |
| 멕시코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1 |
| 네덜란드   | 0.25            | 0.07     | 0.05           | 0.39              | 0.02            | 0.00           | 1.82                | 0.00           | 2.60 |
| 노르웨이   | 0.13            | 0.10     | 0.10           | 0.18              | 0.00            | 0.00           | 0.46                | 0.00           | 0.97 |
| 폴란드    | 0.08            | 0.01     | 0.13           | 0.17              | 0.02            | 0.05           | 0.15                | 0.13           | 0.74 |
| 포르투갈   | 0.07            | 0.27     | 0.16           | 0.01              | 0.04            | 0.00           | 0.98                | 0.38           | 1.91 |
| 스페인    | 0.14            | 0.12     | 0.07           | 0.07              | 0.10            | 0.10           | 1.90                | 0.02           | 2.52 |
| 스웨덴    | 0.26            | 0.15     | 0.60           | 0.26              | 0.00            | 0.01           | 0.55                | 0.00           | 1.82 |
| 스위스    | 0.11            | 0.18     | 0.07           | 0.23              | 0.00            | 0.00           | 0.65                | 0.00           | 1.25 |
| 이스라엘   | 0.02            | 0.06     | 0.05           | 0.03              | 0.00            | 0.00           | 0.52                | 0.00           | 0.68 |
| 슬로베니아  | 0.08            | 0.04     | 0.02           | 0.00              | 0.09            | 0.00           | 0.53                | 0.00           | 0.76 |
| OECD평균 | 0.12            | 0.13     | 0.10           | 0.09              | 0.07            | 0.01           | 0.72                | 0.05           | 1.19 |

주: 1. OECD평균은 단순평균

자료: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Labor Markets, 2019, 김종웅·이우형, 2018B, 재인용

## 제2절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

정부의 고용서비스 관련 일자리재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규모 및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중앙정부의 일자리예산의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6년간 일자리예산의 증가율이 109.0%로 정부 전체예산의 증가율인 37.6%에 비해서는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전체예산대비 비중이 2013년의 3.27%에서 2019년에는 4.99%로 1.72%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적인 요구사항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되는 일자리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문제를 비롯하여 일자리의 양적, 질적 과제가 아직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재정의 투입구조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OECD국가들의 경우를 알아본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재정을 구성하는 유형별 예산의 비중과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자리예산의 6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유지분야로 전체일자리예산의 34.7%로 2013년의 37.0%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연계되어 있는 실업자수의 증감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유지분야에 이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고용장려금 분야로 전체일자리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일자리창출 16.1%, 창업지원 11%, 직업훈련사업 8.4%,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가 4.6%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일자리 관련 공공지출의 유형별 비중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용서비스분야와 직업훈련분야가 가장 큰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고용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확대가 필요하다.

2013년 대비 6년간 일자리예산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일자리분야가 29.3%로 예산 증가율 37.6%보다 낮았으나 다른 5개 사업은 모두 예산증가율보다 높았다. 관련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창업지원분야로 408.5%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분야 241.4%, 고용서비스분야 110.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분야 95.9%, 그리고 직업훈련분야가 41.5%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일자리분야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성격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보조성격의 사업이므로 일자리관련 사업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분류 또는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예산을 조정하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창업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자리의 양적부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의 양적, 질적 규모가 우리사회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규모와 변화를 정리해보면 2019년 현재 6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6년간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자리에 산 전체의 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의 규모를 보여주는 표에서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규모는 GDP 대비 0.04%로 OECD 평균(0.12%)의 1/3수준에 불과하며, 미국(0.02%), 칠레(0.03%)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공공지출의 평균값을 알아보면 고용서비스 관련 공공지출의 GDP비율이 0.12로 직접일자리분야의 0.0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분야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공공지출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 아주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준으로의 단계적인 확대조정이 필요하다.

**[표 6-3] 유형별 일자리 예산(연도별)**

(단위: 억원, %)

| 구분              |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19년              | 6년간<br>증가율 | OECD<br>평균 <sup>22</sup> |
|-----------------|--------------------|--------------------|--------------------|--------------------|------------|--------------------------|
| 직접일자리           | 29,227<br>(26.1%)  | 24,634<br>(17.6%)  | 27,069<br>(15.9%)  | 37,800<br>(16.1%)  | 29.3%      | 0.07<br>(0.20)           |
| 직업훈련            | 13,933<br>(12.4%)  | 17,899<br>(12.8%)  | 22,460<br>(13.2%)  | 19,711<br>(8.4%)   | 41.5%      | 0.13<br>(0.04)           |
| 고용서비스           | 5,084<br>(4.5%)    | 6,102<br>(4.4%)    | 7,999<br>(4.7%)    | 10,705<br>(4.6%)   | 110.6%     | 0.12<br>(0.04)           |
| 고용장려금           | 17,340<br>(15.5%)  | 25,961<br>(18.6%)  | 31,752<br>(18.6%)  | 59,204<br>(25.2%)  | 241.4%     | 0.10<br>(0.04)           |
| 창업지원            | 5,062<br>(4.5%)    | 18,339<br>(13.1%)  | 22,003<br>(12.9%)  | 25,741<br>(11.0%)  | 408.5%     | 0.01<br>(0.02)           |
| 실업소득<br>유지 및 지원 | 41,566<br>(37.0%)  | 46,832<br>(33.5%)  | 59,453<br>(34.8%)  | 81,412<br>(34.7%)  | 95.9%      | 0.72<br>(0.32)           |
| 합계              | 112,212<br>(3.27%) | 139,767<br>(3.72%) | 170,736<br>(4.26%) | 234,573<br>(4.99%) | 109.0%     |                          |
| 국가전체예산<br>(조원)  | 342                | 375.4              | 400.5              | 470.5              | 37.6%      |                          |

자료: 김종웅·이우형(2018A) 인용, 표 마지막 열의 OECD 평균은 관련 공공지출의 OECD 평균값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같이 표기함

<sup>22</sup> OECD 평균은 관련 공공지출의 OECD 평균값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같이 표기함

### 제3절 지역일자리 대책의 개선 방향

앞 절에서는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재정의 규모를 파악해 보고, 또한 중앙정부의 유형별 일자리 예산의 규모 및 증가율을 파악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침체지역의 지역일자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침체지역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먼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한 개선 방향 도출이 상대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시군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음 그림에서는 침체지역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전략 및 추진과제 사례를 제시한다.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5개 전략과 전략별로 총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들고 있는 전략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산업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시민 밀착형 전략과 네 번째 지역 창업 지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적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복지를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를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한 신산업 일자리 정책은 기초단위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재정여건이나 기술 개발의 배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전략이다. 사례 자치단체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신산업 일자리로 전략의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유치 전략이 지자체 별로 특징적이지 못하고, 상당부분 다른 지역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신산업으로 거론되는 신재생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항공 우주 및 항공 정비, 첨단 소재산업 등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가 주력산업의 침체를 겪으면서 대체 산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치단체에서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육성 산업으로 생각된다.

**[그림 6-1] 지역일자리 전략 및 추진과제(예시)**

|                             |  |
|-----------------------------|--|
| <p>청년일자리기반<br/>청년 일자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일자리 활성화 기반 구축</li> <li>② 청년 활동보장 및 역량강화</li> <li>③ 청년 구직 촉진 및 구직활동 지원</li> </ol>                    |
| <p>산업생태계 재편<br/>신산업 일자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30 신재생에너지 육성</li> <li>②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li> <li>③ 신산업맞춤형 인재양성</li> <li>④ 지역고용위기 극복</li> </ol>      |
| <p>시민 가까이<br/>시민밀착 일자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골목상권 활성화</li> <li>② 시민 가까이 문화 일자리</li> <li>③ 안전&amp;행복도시 복지 일자리</li> <li>④ 시민생활밀착 환경 등 일자리</li> </ol> |
| <p>창업 원스톱<br/>창업 일자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창업플랫폼 구축</li> <li>② 성공 UP 부담 DOWN 청년창업</li> <li>③ 지역특화창업</li> </ol>                                   |
| <p>누구나 일하는<br/>맞춤형 일자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근로 등 공적일자리 확대 추진</li> <li>②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특화</li> <li>③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li> </ol>                    |

그러나 막대한 자본 및 기술의 투입을 요구하는 신산업의 경우 희망하는 지역 모두에서 산업 유치에 어려울 수 있고,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률이 문제로 제시되나, 경기 침체지역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고용 상태에 있다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상태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략이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내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 조선업의 불황은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중장년층 실업률을 크게 높였다. 중장년층 실업의 경우 기존에 일하던 산업 및 일자리에서 습득한 경력과 기술이 높으나, 산업 자체가 쇠퇴하게 되면 이들이 습득한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성장하는 산업으로 이직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 정책이 필수적이다. 아쉽게도 지자체 일자리 추진 전략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점이 짝혀 있지 못하다. 이는 중앙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중앙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은 GDP 대비 0.04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GDP 대비 0.13 수준이어서 비교 대상국의 경우 우리의 경우보다 3배 이상의 정책 수단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일자리 추진 전략에는 신산업 일자리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실직 상태로 전환된 지역 주민들이 신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유치하고자 경쟁하는 신산업 일자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내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내 여건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4】 사업별 일자리 창출 투자계획(예시)**

(단위: 명, 백만원)

| 공 약 명                         | 일자리창출    | 투자계획       | 담당부서   |
|-------------------------------|----------|------------|--------|
| 20개 사업                        | 25,482 명 | 550,601백만원 |        |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76       | 9,357      | 일자리창출과 |
| 청년창업 희망키움                     | 100      | 1,100      | 일자리창출과 |
|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 400      | 2,900      | 일자리창출과 |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사업                 | 6,000    | 3,772      | 교육지원과  |
|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 5,166    | 300,000    | 지역경제과  |
| 지역화폐전면유통                      | 280      | 100,000    | 지역경제과  |
| 상권활성화재단설립                     | 20       | 4,000      | 지역경제과  |
| 스마트로지스틱센터건립                   | 75       | 10,000     | 지역경제과  |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4차 산업 생태계 구축 | 1,303    | 89,065     | 산업혁신과  |
| 장애인 활동보조인 채용확대                | 100      | 20,918     | 복지지원과  |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 12       | -          | 복지지원과  |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 공 약 명                | 일자리창출    | 투자계획       | 담당부서   |
|----------------------|----------|------------|--------|
| 20개 사업               | 25,482 명 | 550,601백만원 |        |
| 여성고용확대 및 성평등 고용환경 구축 | 9,865    | 1,225      | 여성가족과  |
|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인 다양한 지원   | 153      | 576        | 여성가족과  |
| 짬뽕 및 수제먹거리 특화 추진     | 1,376    | 3,000      | 위생행정과  |
|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사업비 지원     | 80       | 120        | 문화예술과  |
| 어린이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 200      | 1,000      | 교통행정과  |
| 보호자없는 병동확대           | 26       | -          | 보건사업과  |
| 2030청년농업인 정착지원       | 80       | 468        | 농촌지원과  |
|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 170      | 3,100      | 농산물유통과 |

위에 예시로 제시된 표에서는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4년간 5,500억을 투입하여 25,48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사업은 여성 고용확대 및 성평등 고용환경 구축을 통한 9,865명의 고용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그 다음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사업 6,000명,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5,166명, 짬뽕 및 수제먹거리 특화 추진 1,376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4차 산업 생태계 구축 1,303명 순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나타내는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3,000억 원, 지역화폐 전면유통 1,00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와 투자계획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한편 사업의 추진 주체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3개 사업, 지역경제과 4개 사업, 복지지원과 2개, 여성가족과 2개, 위생행정과,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보건사업과, 농촌지원과, 농산물유통과, 교육지원과가 각 1개 사업을 책임지는 구조를 보인다. 지역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재정의 재원 배분을 책임지는 창구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 용이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나 고용 창출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 제7장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일자리 재정의 개선방향



###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각각 시도의 경기변동이 전국 공통요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만, 시도 고유 충격의 크기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임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지역 경제활성화 예산비율이 연구에서 설정한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음연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움직임의 상이성과 지방재정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지역의 고유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지출이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의 시사점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의 경우에도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별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여지를 남긴다.

지역에 맞는 고용창출 전략의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구조 분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총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 지

표를 산출할 수 있었다. 산출된 지표값을 산업별 파악해 보고, 각 시도별로 산업의 노동집약도를 판단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고용지표를 시도별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시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크고, 공공 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규모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 고요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만일 고착화 되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되돌리기 위한 생산적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재정 투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고용지표는 재정 투입 한 단위당 고용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된 산업별 고용지표를 요약하면, 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은 아니었다. 다만 업체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종사자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광업의 경우 억 원당 종사자수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평균이상이나 1인당 급여액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다소 클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8배이며, 억 원당 종사자수가 평균의 0.6에 불과하여 지표상으로 고용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많은 양의 자본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다. 대다수 자본집약적 공기업들이 이 산업에 포함되며, 매출액 단위당 고용효과는 매우 낮으며, 1인당 급여는 전 산업 평균대비 2.4배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매출액 대비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1.3배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⑥ 건설업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산업 평균대비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없어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⑦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가 규모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 파악된다. ⑧ 운수업은 업체당매출액규모가 매우 작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인당급여 또한 평균대비 0.8수준이어서 고용비용도 높지 않은 산업으로 파악된다. ⑨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매출액 대비 종사자가 매우 많은 산업으로서 고용효과 큰 편이며, 고용비용도 산업평균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산업은 기업규모가 큰 편이어서 업체당 고용은 많은 편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니었다. 고용효과는 평균 수준이나, 업체규모와 고용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고용정책을 시행할 만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산업의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비용은 전 산업 평균의 1.5배 수준으로서 높은 편이다. ⑪ 금융 및 보험업은 업체당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의 3.3배로 많은 수준으로 업체당 규모가 큰 산업이다. 업체당 매출은 전 산업 평균의 13.2배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용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억 원당 종사자수는 1.3으로 기업체 규모는 작으나 고용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서 고용증대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용효과는 높은 편에 속했다.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규모로 보아 업체당 규모가 평균 이상이며,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고용효과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급여는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매출은 작으면서 종사자수는 많아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었다. 1인당 급여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0.9로 산출되어 고용증대의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된다.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의 10.3배, 업체당 매출액은 6.2배로 산출되었다. 업체당 고용이 많은 이유는 규모가 큰 점과 노동집약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고용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되나, 1인당 급여가 전 산업 평균의 1.9배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고용을 위한 비용이 높은 산업에 해당된다.

⑯ 교육서비스업은 업체당 매출액을 볼 때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업체당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인당급여는 전 산업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평균 이상이다.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 산업 평균대비 2.1배이며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대비 0.6으로 낮았다. ⑱ 예

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업체별 규모가 영세한 편이나 종사자 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급여는 평균대비 낮은 0.5 수준이어서 고용증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대비 0.4로 매우 낮았다. 업체당 매출액 또한 전 산업 평균 대비 낮은 0.1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의 틀은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이 단순한 대신 몇 가지 제약도 따른다. 가령 각 산업별로 자본, 노동 및 기술 투입의 조합은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산업 구조의 영향으로 균제 상태(steady state)에서 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균제상태의 자본과 노동의 조합을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고용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유인할 때 산업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통계청 경제총조사는 시도 및 기초 단위까지의 산업 대분류별 업체 및 고용 통계를 제시하나 공표 주기가 5년 주기로 관측된다는 시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산업 구조와 이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는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반응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기 단위의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의 적시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틀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지표산출과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분석의 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일자리 재정을 구성하는 유형별 예산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고용장려금 25.2%, 직접일자리 창출 16.1%, 창업지원 11%, 직업훈련 사업 8.4%, 고용서비스가 4.6%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의 일자리 재정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OECD주요국 평균과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일자리 추진 전략의 현황을 평가하면, 지자체는 신산업 일자리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지역의 주민들이 신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신산업 일자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내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수단 배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일자리 재정의 개선방향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및 철강 등의 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발전해 왔다. 가령 자동차는 울산과 군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등의 산업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들 도시의 지역경제는 해당 산업의 부침과 함께해 왔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울산, 군산, 거제 등의 도시들은 인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증가하는 과실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산업쇠퇴가 지역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침체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역량의 동원을 요구하게 된다. 즉,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산업 쇠퇴가 지역침체와 지역 쇠퇴로까지 이어진 미국 리스트 벨트(rust belt)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로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역내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비교할 때 산업 다각화의 장점은 분명하다. 특정 산업이 외부 충격에 의해 쇠퇴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산업 다각화가 진행된 도시는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산업 침체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의 경우 단위 투입 증가에 따른 한계 생산성 증대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시도별 전국대비 고용효과 분석의 순위 변동을 예를 들면, 제조업 기반의 도시로 보기 힘든 서울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의 전국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각각 +6, +6의 순위 증가) 나타났다. 반대로 자동차, 철강 산업의 제조업 허브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 전국대비 순위 변동은 각각 -5과 -1의 순위감소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는 이미 지역내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해당 산업의 추가 고용 창출역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통계구득의 문제로 산업구조 분석을 산업 대분류로 제시한 것은 세밀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가 그동안 특정 산업에 편중하여 성장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의 투입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그동안 지역내 산업기반이 넓지 않았던 산업에 대한 초기 지원의 한계 효과가 클 것임을 고려한 지역별 고용창출 방향의 제시 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뉴욕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의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들은 지역경제 침체에서 보다 빨리 회복하였으며, 디트로이트 시와 같이 자동차 산업에 주력했던 도시들은 그 회복세가 더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로 산업 다각화를 이룬 도시들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한 뉴욕과 같은 대도시 권역이었다는 특징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대체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실업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구조의 고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산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는 타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보다는 가능한 현재의 지역주민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주민들을 가급적 지역내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내 산업다각화와 맞물려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높은 것은 새로운 산업 섹터로 이동해 갈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재교육 참여 비율은 주요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AI 혁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중앙 정부의 경우 일자리 예산의 우선순위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과 고용장려금 지급, 직접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반면 성장 산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근로

자들의 기술 습득을 돕는 직업훈련의 경우 주요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앙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신산업 유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이 지역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내 신산업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과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 재정, 생산적 재정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의 지출 증가는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로 인해 경제전체적으로는 순증 효과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민간부문의 수요 감소를 흡수하여 침체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완화시켜줄 부문 또한 정부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한편 최근 주목받는 생산적 재정은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의 경우 아직까지 세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가용재원도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예산 집행과 이월은 중앙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집행률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만옥·조일현. (2015).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환경정책연구  
원 사업 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2018). 「광역자치단체 2018 일자리공시제 세부계획」.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2019). 「기초자치단체 일자리공시제 세부계획 2019」.
- 국회예산정책처. (2018).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각연도.
- 길현종. (2017). 고용서비스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7년 5월호.
- 김성환. (2017). 소규모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대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4): 123-141.
- 김일태·김대성·변장섭. (2013).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 -전라남도 사례를 중  
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2): 81-108.
- 김정홍·정운선·안준기. (2015).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응용경제」.  
17(2): 167-193.
- 김종웅·이우형. (2017).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  
제연구」. 38: 59-78.
- 김종웅·이우형. (2018a).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  
로. 「2018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표논문」.
- 김종웅·이우형. (2018b).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 김준영. (201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 실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7(5): 30-49.
- 김혜원. (20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노동이동. 「2010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경제학회.
- 남병탁. (2014).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

- 집], 57-76.
- 신종각. (2011).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 안성조. (2014).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1(2): 43-59.
- 양현봉·한창용·김진수. (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8(441).
- 윤형호. (2010).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 이미혜·김행선. (2018).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재정정책논집」. 20(2): 159-180.
- 이재무. (2014). 서울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 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 23(4): 31-58.
- 이창율·장지호. (2015). 정책PR분석틀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219-240.
- 정연미. (2015). 경제의 생태적 전환: 독일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3(1): 69-104.
- 정재현·이상호. (2016). 일자리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287-301.
- 조덕희. (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32).
- 차운아·정태훈. (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측정 「경제연구」. 33(4).
- 최창근. (2013). 노동시장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경제연구」. 31(4).
- 한국은행. (2018). 「지역경제보고서」.
- 황상연. (2013). 우리나라 지역 경기변동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61(2): 31-68.
- Bai, J. (2003). Inferential Theory for Factor Models of Large Dimensions. *Econometrica*. 71: 135-171.
- Bai, J. and S. Ng (2002).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in Approximate Factor Models. *Econometrica*. 70: 191-221.
- Bai, J. and S. Ng (2006). Evaluating Latent and Observed Factors in

- Macroeconomics and Finance. *Journal of Econometrics*, 131: 507–537.
- Bai, J. and S. Ng. (2007). Determining the Number of Primitive Shocks in Factor Model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25: 52–60.
- Chamberlain, G. and M. Rothschild (1983). Arbitrage, Factor Structure, and Mean–Variance Analysis on Large Asset Markets. *Econometrica*, 51: 1281–1304. 26
- Clark, T.E. (1998). Employment Fluctuations in U.S. Regions and Industries: The Roles of National, Region–Specific, and Industry–Specific Shock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02–229.
- Del Negro, M. (2002). Asymmetric Shocks Among U.S.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6: 273–297.
- Geweke, J.F. (1977). *The Dynamic Factor Analysis of Economic Time Series*. In *D.J. Aigner and A.S. Goldberger (Eds.), Latent Variables in Socio–Economic Models*. Amsterdam: North–Holland, Chapter 19.
- Owyang, M.T., J. Piger and H.J. Wall (2005). Business Cycle Phases in U.S.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 604–616.
- Owyang, M.T., J. Piger and H.J. Wall (2008). A State–Level Analysis of the Great Modera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8(6), 578–589.
- Stock, J.H. and M.W. Watson (2002). Forecasting Using Principal Components From a Large Number of Predi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 1167–1179.
- Stock, J.H. and M.W. Watson (2005). *Implications of Dynamic Factor Models for VAR Analysis*.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and Princeton University. 28
- Frenkel, Jacob, and Morris Goldstein. (1991). Monetary Policy in an Emerging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MF Staff Papers* 38: 356–73.
- Goodhart, Charles E.A. and Stephen Smith. (1993). Stabilization. In *The Economics of Community Public Finance*. *European Economy Reports and Studies*, 5: 417–55.
- Gros, Daniel, and Eric Jones. (1994). Fiscal Stabilizers in the US Monetary Union: Measurement Errors and the Role of National Fiscal Policy. *CEPS Working Document*, 83.
- Hervé, Yves, and Robert Holzmann. (1998). *Fiscal Transfers and Econo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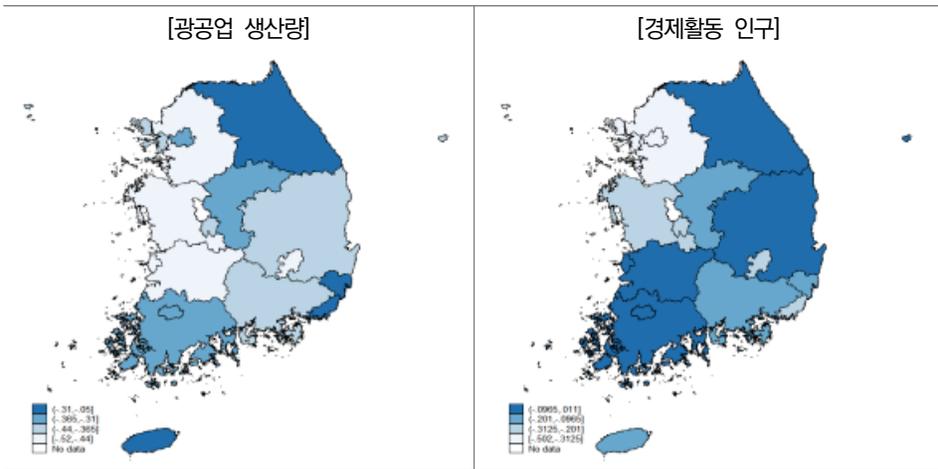
- Convergence in the EU: An Analysis of Absorption Problems and an Evaluation of the Literature*. Baden-Baden, Germany: Nomos.
- Hochreiter, Eduart and Georg Winckler. (1995). The Advantages of Tying Austria's Hands: The Success of a Hard-Currency Strateg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 83-111.
- Ingram, J. C. (1959). State and Regional Payments Mechanis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3(4): 619-32.
- Kenen, Peter B. (1969).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n Eclectic View*. In Monetary Problems of the World Economy, ed. Robert Mundell and Alexander Swobo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nrad, Kai, and Helmut Seitz. (2001). *Fiscal Federalism and Risk Sharing in Germany: The Role of Size Differences*. Discussion Paper FS IV 01-20. Wissenschaftszentrum für Sozialforschung, Berlin.
- Lockwood, Ben. (1999). Inter-Regional Insu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1): 1-37.
- Makipaa, Arttu and Jürgen von Hagen. (2005). *Region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in Germany*.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University of Bonn.
- Méltiz, Jacques and Silvia Vori. (1993). National Insurance against Unevenly Distributed Shocks in a European Monetary Union. *Recherches Économiques de Louvain*. 59(1): 81-104.
- Méltiz, Jacques, and Frédéric Zumer. (2002). Regional Redistribution and Stabilization by the Centre in Canada, France, the U.K. and the U.S. : A Reassessment and New T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6 (2): 263-84.
- Migué, Jean-Luc. (1993). *Federalism and Free Trade*. Hobart Pap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 Mundell, Robert. (1961). A Theory of Optimal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4): 657-65.
- Oates, Wallace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Obstfeld, Maurice and Giovanni Peri. (1998). Regional Non-Adjustment and Fiscal Policy. *Economic Policy*. 26: 205-69.

-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1996a). Federal Fiscal Constitutions: Risk Sharing and Moral Hazard. *Econometrica*. 64(3): 623-46.
- \_\_\_\_\_. (1996b). Federal Fiscal Constitutions: Risk Sharing and Re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5): 979-1009.
- Pisani-Ferry, Jean, Alexander Italianer and Roland Lescure. (1993). *Stabilization Properties of Budgetary Systems: A Simulation Analysis*. In *The Economics of Community Public Finance*. 417-55. European Economy Reports and Studies. 5.
- Sachs, Jeffrey, and Xavier Sala-i-Martin. (1991). *Fiscal Federalism and Optimum Currency Areas: Evidence for Europe from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a Central Bank: Issues in Europe and Lessons from the U. S.*, ed. Matthew Canzoneri, Vittorio Grilli, and Paul Mas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oddon, Tracy. (2003). *On Equalization and Incentives: An Empirical Assessment*. Working Paper 2003-06 EC. Waterloo, Canada: Wilfrid Laurier University.
- Sørensen, Bent E. and Oved Yosha. (1997). *Federal Insurance of U. S. Stat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Globalization: Public Economics Policy Perspectives*, ed. Assaf Razin and Efraim Sadk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ahn, Paul B. (1993). The Design of Federal Fiscal Constitutions in Theory and Practice. *European Economy Reports and Studies*. 5: 63-100.
- Spahn, Paul B. and Anwar A. Shah. (1995).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Australia*. In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Fiscal Decentralization*, ed. Jayanta Roy. Washington, DC: World Bank
- van Wincoop, Eric. (1995). Regional Risk-sharing. *European Economic Review* 39(8): 1545-68.
- von Hagen, Jürgen. (1992). *Fiscal Arrangements in a Monetary Union: Some Evidence from the U. S.* In *Fiscal Policy, Taxes, and the Financial System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Europe*, ed. Don Fair and Christian de Boissieux, 337-60. Deventer,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_\_\_\_\_. (1993). *Monetary Union and Fiscal Union: A Perspective from Fiscal Federalism*. In *Policy Issues in the Operation of Currency Unions*, ed. P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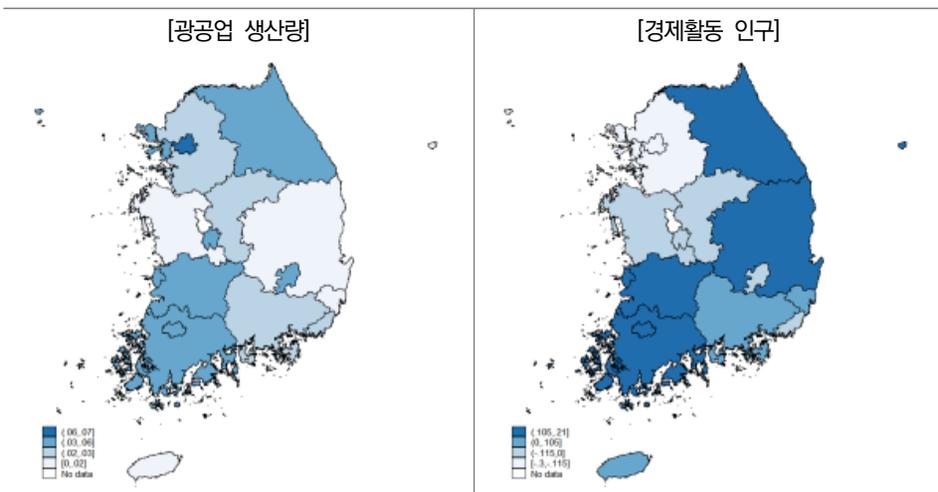
참고문헌

- R. Masson and Mark P. Taylor, 264-9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n Hagen, Jürgen, and George W. Hammond. (1998). Regional Insurance against Asymmetric Shocks: An Empirical Study for the European Community. *The Manchester School*. 66(3): 331-53.
- von Hagen, Jürgen and Chris J. Waller. (1999). *Regional Aspects of Monetary Union in Europ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yplosz, Charles. (1991). Monetary Union and Fiscal Policy Discipline. *European Economy Special Edition*. 1: 16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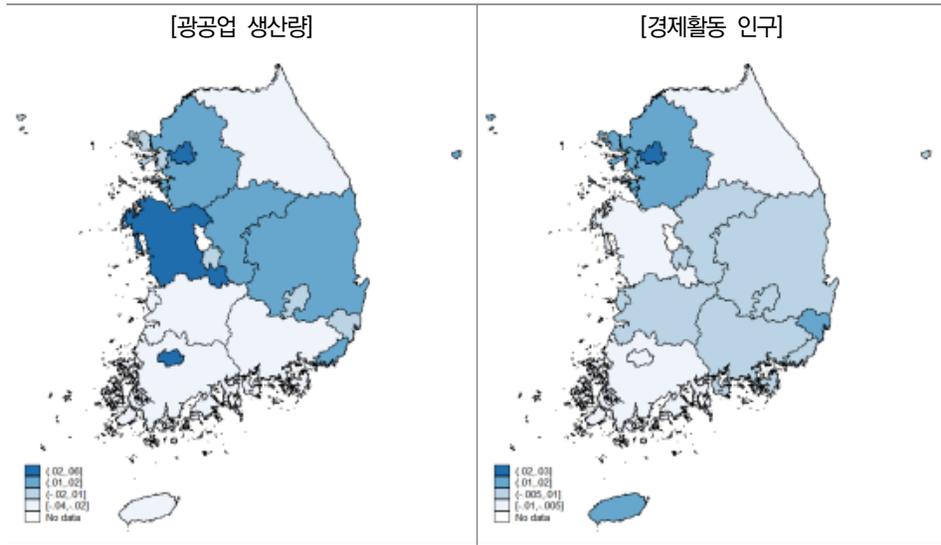
[그림 1] 공통요인 1 부하 (Factor 1 Loa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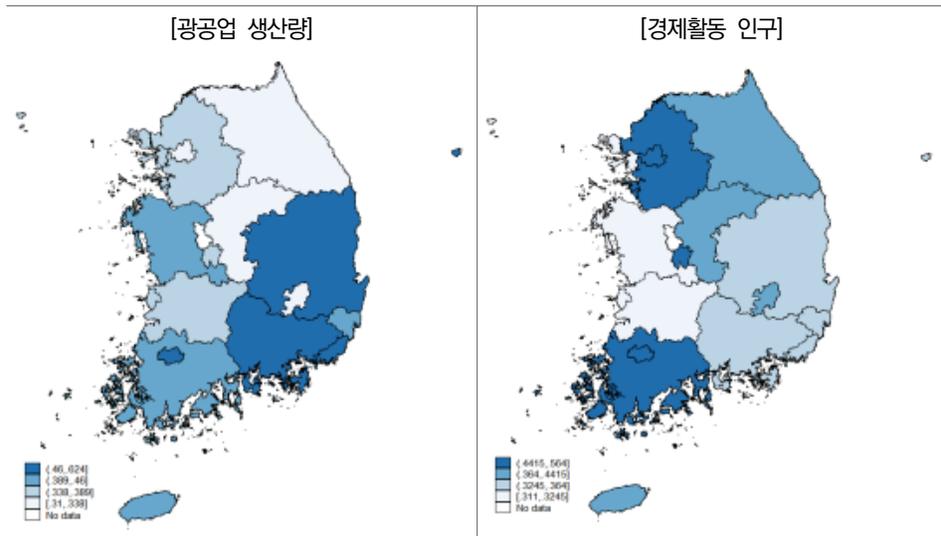
[그림 2] 공통요인 2 부하 (Factor 2 Loadings)



[그림 3] 공통요인 3 부하 (Factor 3 Loadings)



[그림 4] 시도별 모형의 설명력 ( $R^2$ )





# Abstract

## A Study on the Role of Productive Local Finance for Regional Employments

This paper study the role of productive local finance for regional employments through the regional employment analysis by industries. The second chapter of the study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regional economic downturn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stagnation of the major industries. Chapter 3 suggests that the economic fluctuations of each si-do governments are not only affected by the national common factors, but also their idiosyncratic factor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Chapter 4 presents the positive effects on local tax revenue for the following year when the budget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exceeds a threshold. In Chapter 5, we analyz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y. Chapter 6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job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ur research shows that active fiscal expenditure for stagnant regional economies is not just expenditure, but it also helps regional economic recovery. Th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an active fiscal policy on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on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On the other hand, the idiosyncratic movement of regional economies leads to the necessity of a customized local fiscal policy for each region.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s quite different, suggesting that policy priorities for active fiscal commitment may vary.

To meet the needs of regional job creation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y. Using the economic survey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indicators of 'Employees per company', 'Sales per company', 'Employees per 100 million won', and 'Wages per employee' are calculated

by industry classification. The labor intensity of each industry could be judged by the suggested indicators, and the results are to be used to establishing regional employment priorities. In addition, the employment indicators by industry are extended by each si-do govern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tructure were derived. The regional employment indicator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they suggest priorities for industries that can increase job creation capacity per unit of fiscal investment.

Next, examining the proportion of budgets by type shows that as of 2019 employment incentives 25.2%, direct job creation 16.1%, start-up support 11%, vocational training projects 8.4% and employment services 4.6% make up the national government's job creation budget. When evaluating the status of local job creation strategies, local governments have plans to attract new industries in their region, but there is a lack of support for residents to be employed in those newly created jobs. Therefore, rather than focusing on a new industry that all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attract competitively, the policy measures should be focused on industries that have high job creation ability through the employment indicators analysis in each region.

The Korean economy has traditionally pursued export-oriented economic growth based on manufacturing-based industrial structures. Main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machinery, shipbuilding, and steel, which are Korea's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developed in clusters around specific regions. For example, automobiles have been concentrated in industrial base cities such as Ulsan and Gunsan, machinery in Changwon, and Shipbuilding in Geoje, and the local economy of these cities has been accompanied by the ups and downs of those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when the region's flagship industry was in full swing, cities such as Ulsan, Gunsan, and Geoje were able to enjoy the fruits of a growing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However, the situation of some municipalities, whe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lagship industry falls, requires an active fiscal capacity to overcome the current regional downturn. In other words, we need to be cautious not to follow the same fate of U.S. rust-belt regions where the industrial decline led to regional recession as well as regional decline.

To that end, we first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egional industries when the region heavily relies on a specific industry. The advantages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are evident when comparing regions with diversified industrial sectors

and regions that do not. When a particular industry is decayed or extinguished by external shocks, a region with a diversified industrial portfolio will be able to move easily labor forces to another industry. In other words, in areas where the industry is well-diversified, the economic downturn will be relatively less likely to result in a population decline due to the population movement searching for job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prevent residents who are unemployed from finding their jobs outside of their current residence. At present,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can be summed up as a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s on the decline despite policy support for population growth. In other words, the maintenance of sustainable local communities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outflow of current residents, rather than inflows from other regions. In order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y to keep the migrants seeking jobs to stay in the region.

Finally, local governments must recognize the impacts of active and productive fiscal policy and play an active role in overcoming the regional economic downturn. The productive fiscal policy, which is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can enhanc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population aging, fertility rate, and preemptive investment in aging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local finances, the proportion of self-financing is still low in revenues, and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avail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ir policies that fit local conditions. Nevertheles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xecution and carryover of local government budgets are high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identify the causes and increase the execution rate.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TEL | 033.769.9999 FAX | 070.4275.2317



9 788978 465471

9 3 3 5 0

ISBN 978-89-7865-471-5